격동의 동아시아에서 중심을 찾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7

EAI
EAST ASIA INSTITUTE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목차

복합 무대 위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경계 3
1980년대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과 무역 분쟁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① **정다은**

두 패러다임의 격전지 63
_ 데지마 ② 김재호

메이지 유신 전야 글로버와 기도의 만남 77
_글로버 가든 ③ 김대영

흙을 통해 동서양의 삶을 빚어내다 105
버나드 리치의 '동서양의 결혼'
_규슈도자문화관 ④ 강우승

왜 삼국간섭이 한반도에선 일어나지 않았나? 145
_청일강화박물관 ⑤ 차지윤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169

_규슈국립박물관 ⑥ 김민정

The Role of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and 189
U.S.-Japan Alliance in Deterring Chinese Gray Zone Strategy

_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⑦ 조민

Taking Stock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216
(PLAN) Modernization:
Evidence of Increasing Assertiveness Against Taiwan

_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⑧ 김상훈

조선통신사의 임진왜란 피로인 쇄환외교: 260
〈해사록〉을 중심으로

_한일교류박물관 ⑨ 문예찬

1장

복합 무대 위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경계
1980년대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과 무역 분쟁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정다은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원자력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이중용도 기술적 속성으로 인하여 핵비확산성을 충족시키는 조건 하에서만 평화적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실제 '이용 확대'와 '효과적인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기술에 대한 다자 혹은 양자 간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원자력 양자협력은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수용하는 국가에 주요 기술과 물질을 공급 또는 이전하는 대신 이에 대한 규제와 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보인다. 즉, 공급국의 권리와 수요국의 의무로 맺어지는 일종의 비대칭적 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일본은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핵심기술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무엇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점은 일본이 NPT 에 가입한 비핵국가 중 유일하게 주요 핵연료주기시설을 보유한 국가로서 준핵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 내 일본의 핵에 대한 위상이 격상되었던 근본적 배경엔 1988 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력협정'(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이 있다. 일본은 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기술과 플루토늄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고 미국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적인 원자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산업용 수준의 농축과 재처리 시설은 물론 다량의 플루토늄도 보유하고 있다. 미·일 원자력협정을 기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에서 군사적 이용으로의 전환의 경계에 서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협정 개정교섭과정이 종래의 일본 대미외교와 달리 미국과 상당히 대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약 5 년간 이어진 협상은 신규제의 도입을 요구한 미국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인 양보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요구가 최종 합의문에 다수

반영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 무대에서 일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례적인 외교적 사건이었다.

본 보고서는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 사례를 분석하여 미국이 일본에게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원자력 기술을 허용한 배경을 고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1980 년대 미국과 일본이 직면한 대내외적 상황을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먼저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각국의 통상정책과 원자력 정책 및 관련 법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당시 미·일 관계의 가장 큰 화두이자 협상의 대상이었던 자동차 무역 분쟁(1980-81)과 반도체 협정(1986), 그리고 원자력 협정(1988) 사례를 통해 '1980 년대'라는 하나의 같은 시간 축에서 '에너지'와 '경제' 무대 위 다양한 주인공들의 연기가 어떻게 복합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미·일 원자력 협정에 관한 청문회 자료를 통해 앞선 상황적 맥락이 반영되었는지 재확인함으로써 당시 협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한다. 이처럼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국내정치와 미·일 간의 양자 관계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 과정과 결과를 재구성함으로써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여 체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각 사례 연구에서 도출한 경험적

결과에 기초하여 미국의 관점에서 원자력협력 개정의 요인을 추적할 것이다.

1980년대 미·일 관계: 에너지와 경제 무대

1. 레이건 – 나카소네 정상회담

초기 레이건 행정부는 기존 카터 행정부와 달리 일본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구했으며 나카소네 총리와는 소련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시각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81-1988, Volume XXX, Japan; Korea, 1981-1984 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81-1988, Volume XXX, Japan; Korea, 1985-1989 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사이에 어떤 긴밀한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확인하기에 아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로서 1985 년을 기점으로 1980 년대 이루어진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의 정상회담 성명문을 크게 세 가지 주요 사안들(①평화/안보/국방, ②경제/무역, ③자유민주주의/진영 논리)으로 나누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983 년 5 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①평화/안보/국방과 ③자유민주주의/진영 논리에 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미·일 동반자 관계와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agan

Library, 1983). 같은 해 11 월 30 일 정상회담에선 당시 아시아, 중동, 카리브 해의 정세와 미-소 간의 중거리핵전력 협상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군비통제와 동서관계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공통적인 사상과 가치를 기반으로 미·일 안보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를 약속하였다. 두 차례의 회담에서 ②경제/무역 사안은 전반적으로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의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 퇴치,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 발전, 개발도상국 지원 등 거시적인 경제 문제와 세계 자유무역체제 공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 협상이 강조되었다. 미·일 관계에선 엔-달러 환율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감시하기 위한 장관급 실무반을 설치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만약 무역 분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일 사이의 국제 파트너십의 비전의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나카소네 총리를 압박하였다(Reagan Library, 1983).

1985 년 정상회담에서 미·일 무역 분쟁은 가시화되었다. 비록 성명문은 미-소 간의 제네바 무기 감축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정치 현안(①평화/안보/국방+③자유민주주의/진영 논리)을 논의했지만 이후 양국 간의 무역 관계(②경제/무역)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 성명문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미국은 일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보호주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일본에게 자본 시장 조치와 같은 긴급한 협력 조치의

시행을 촉구하였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적극적 협력과 자본 교류가 특징인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보다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도 내수 주도의 성장을 강화하고 시장 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공동 후속조치를 약속했다(Reagan Library, 1985).

1986 년 4 월 정상회담도 ①평화/안보/국방에 관한 사안을 짧게 제시한 후, ②경제/무역 사안의 일환으로 미·일 무역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일 무역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역 불균형'을 꼽으면서, 제조업과 기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시장접근성 향상과 무역 확대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에 나카소네 총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지적하면서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일본 정부는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국제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꾀할 것을 약속했다(Reagan Library, 1986).

1987 년 5 월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마찰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책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②경제/무역). 두 정상은 양국 간에 심각한 무역 불균형에 더 이상의 달러화 가치 하락은 저해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나카소네 총리가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확대를 비롯하여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300 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등을 약속했다고

밝히면서 그 대신 자신은 보호무역의 압력을 완강히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카소네 총리도 미국에 대한 일본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내 성장 정책과 일본 소비자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예상대로 치열한 논의의 영역이었다. 일본과 미국 모두 현재의 무역 불균형이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긴급한 주의가 요구된다. 총리는 나에게 그의 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을 설명했고, 나는 그러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지지하며 우리는 곧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동성명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경제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물론 미국도 제 몫을 해야 하며, 우리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나카소네 총리와 내가 동의한 접근법과 일관되게, 태평양 양쪽에서 보호무역주의는 강력하게 반대될 것이다(Reagan Library, 1987).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공정한 자유 무역'이라는 정책 기조를 토대로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또 다시 촉구하였다. 각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국내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제조업, 농업, 건설업, 금융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일본 시장 확대를 요구했던 것이다.

>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다. 우리 두 민족의 노력과 상업적인 천재성, 그리고 생산적인 힘에 의해 건설된 다리다. 우리는 그것이 질서 정연하게 유지되고, 삶을 개선하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운반하며, 양쪽 방향에서 동등한 강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agan Library, 1987).

한편 나카소네 총리는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레이건 대통령과 달리 군비 통제 문제를 먼저 거론하면서 세계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즉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는 미일 간에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그런 상황이 양국 간의 우정과 상호 신뢰를 해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도, 기존 회담과 달리 상대적으로 일본이 취한 기존 조치들의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 우리의 막대한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국이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결의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동성명에 기술된 바와 같이 미시경제 정책과 환율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중략) 대통령과 나는 다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보이는 만족스러운 경과를 언급했다. 양국 정부는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는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특별 예산 조치를 통해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Reagan Library, 1987).

또한 나카소네 총리는 베니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반도체 산업에 관한 미국의 규제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에서 나카소네 총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체제를 붕괴시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제 하원을 통과한 무역법안이 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세계 무역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며 하원 무역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현안인 반도체 보복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베니스

회의까지 해당 사안을 유보하는 등 두 정상은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2. 에너지: 1980년대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발전

세 가지 주요 사안 외에 주목할 점은 1983 년과 1985 년 정상회담에서 모두 미국이 에너지 무역의 확대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으로 미국은 호주와 캐나다와 함께 일본에 석탄을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은 에너지 협력 협정에 대한 이행 가속화와 에너지 무역 확대가 가져올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안보의 강화 효과도 재차 언급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노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의 상호 취약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카소네 총리는 성명문에서 에너지 무역에 관하여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1980 년대 들어 일본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수요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하였다(방기열, 2007). 에너지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효과적인 정부-기업 협력을 통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력과 천연가스 도입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이 가운데 전통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관여했던 통업산업성(통산성, Ministry of Internationl Trade and Industry, MITI)이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었다(Morse 1981, 5). 그들은

먼저 산업용 석탄 화력 설비을 위한 증기 석탄 수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석탄은 화력 발전소 건설에 있어 기술적·환경적 제약이 많고 원자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또한 대량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이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적대감만 악화시킬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대일 의존과 같이 자국의 잠재적 미국산 석탄 의존도가 양국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Gale in Morse 1981, 85-105). 비록 미국으로부터 석탄을 구입하면 수지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미국 시장을 점점 더 파고들 고부가 전자제품의 영향을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은 외국 석유와 기타 원자재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감소시켜 일본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Suttmeier in Morse 1981, 106-109). 당시 일본은 원자력 발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원자력을 독자적인 에너지원으로 삼고자 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핵의 평화적 이용' 선언 이후 미국의 원자력 계획에 동참한 첫 국가였던 일본은 1955 년 미국과의 '원자력연구협정' 체결 이후 빠른 속도로 원자력산업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1956 년 원자력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핵기술 통제 요건인 농축과 재처리 기술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자국의 원자력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고도화된 원자력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인식될 수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의 선진화된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영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술적 자율성이 달성되었다... 핵연료주기에서 보다 많은 공급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에너지 안보 목표이기는 하나, 특히 미국과의 국제협력이 일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이다(Reagan 1987, 206-209).

1980 년대 초까지 이 목표를 향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않고 프랑스 아레바(AREVA)와 코제마(Cogema)와 같은 원자력 기업들의 설계 지원을 받아 구축된 토카이무라 재처리시설이 연간 90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보다 자율적인 원자력산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었다. 일본 내 상업적인 재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핵 정책에 대한 정부 권한은 공식적으로 총리실에 집중되었으며, 일본원자력위원회(JAEC)가 자문 역할을 맡았다. 통산성도 면허, 안전 규제 및 발전소 검사, 부지 선정 및 원자력 발전의 대중 수용 촉진, 그리고 공공요금 설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처럼

일본의 원자력 기술 개발의 진전은 산업 구조, 연구개발, 착석 및 인허가, 우라늄 획득에서 비확산까지 다양한 활동에서 정부와 산업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였다.

3. 경제/무역: 1980년대 미·일 경제와 무역 분쟁의 배경

1980 년대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의 정상회담은 각 시기에 따라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으나, 점차 ①평화/안보/국방과 ③자유민주주의/진영 논리와 같은 군사적·안보적 현안에서 ②경제/무역, 특히 미·일 간의 무역 분쟁에 관한 사안으로 주요 논점이 옮겨갔다. 이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함께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불거진 것이었다.

1970 년대 이후 발생한 일련의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3·1979 년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난 오일쇼크와 그로 인한 자원 파동,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등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졌다. 무엇보다 1980-1985 년간 40% 가까이 상승한 달러화 가치는 당장의 수입비용 하락 효과보다는 수출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져 전례 없는 무역 적자를 불러왔다. 단순히 무역적자 문제만이 아닌 경기 둔화, 생산성의 구조적 하락, 주변국의 추격 등이 맞물리며 미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본질적인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미·일 무역 분쟁의 시작은 이러한 미국의 위기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당시 미국의 주요 통상협상 상대국이자 최대 무역불균형 상대국은 바로 일본이었기에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no date). 1980 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정책과 국방비 증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하여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감세로 인한 수입확대와 국방비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재정적자폭이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었다. 국내 제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은 미국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1985 년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미·일 무역 분쟁의 초점은 첨단산업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으며 미국 통상 정책도 자유무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유롭지만 공정 무역(free but fair trade)'을 추구하는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으로 변화하였다. 첨단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이 아닌 미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통한 보호무역이 필요했다(Tyson 1992, 258; Gandolfo 2014, 277-278). 당시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과 경쟁력이 미국의 산업 건전성과 동의어인 동시에 선진 산업경제의 미래로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분쟁은 레이건 행정부의 크나큰 시험대로 여겨졌다.

에너지 무대: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

1. 레이건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핵 비확산법

1970 년대 미국은 핵기술 통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1974 년 인도의 핵실험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의 재고와 미국의 핵기술 및 핵물질 수출에 대한 보다 보편적이고 강경한 통제 요건을 촉발시켰다. 당시 산업용 원자로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고도로 집약된 과학기술로 그 가능성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의 핵실험 성공은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카터 행정부는 강력한 다자 핵수출 레짐을 구축함으로써 재처리와 농축 시설에 대한 규제와 민감한 핵물질과 핵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통제 조치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양자 관계에서 핵기술 통제 강화를 위해 '핵 비확산법(The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1978, NNPA(1978))'를 제정하여 엄격한 비확산 규제를 의무화하고 미국 원자력협력에 대한 의회의 참여를 강화하였다(US Govinfo, 1978). 이 가운데

원자력법 제 123 조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협력 상대국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원자력 협력을 맺고자 할 경우 엄격한 핵비확산 요건을 신규체결 또는 개정 협상 시 협정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OCED, no date).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협력 상대국에게 원자력 산업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제약을 의미하였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1978 년 미국 핵 비확산법으로 인해 주춤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발 연료의 재처리 또는 재전송에 대한 새로운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적 연료 주기 개발 계획도 새로운 불확실성에서 직면하였다.

1980 년대 미 의회에서 핵확산금지의 분위기가 강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는 '핵확산금지'를 미국의 대외 원자력정책의 기본정책으로 그대로 계승하였다(Beckman, 1985).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국내 원자력 정책에서 카터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비판하며 기존 정책의 상당 부분을 변경하였다. 무엇보다 1970 년대 석유위기 이후 새로운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원자력을 에너지 공급의 주요 원천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81 년 10 월 발표한 '원자력정책 이니셔티브'는 원자력에 대한 규제 및 허가 절차에 대해 보다 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나는 이전 행정부가 미국에서 상업적 재처리 활동에 부과한 무기한 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관련하여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적절한 보호장치를 보장함에 따라 상업적 이익을 위해 규제를 제거할 것이다(Reagan, 1981).

미국의 경제 회복을 우선시했던 레이건 행정부는 기존의 엄격한 원자력 규제 조치와 수출 통제 정책도 완화하였다. 핵비확산법으로 인해 일본과의 명목적인 협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을 핵확산의 위험이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재처리 및 플루토늄 이용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원자력 선진국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한 것이다(The White House 1981, 2). 1974 년 인도의 평화적 핵실험 이후 재처리 시설에 대한 통제가 비확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1979 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동서 관계가 악화되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노선을 취한 것이다.

>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은 원자력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안전장치 하에서 평화적인 원자력협력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이는 비확산 목표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협력 상대국과의 파트너십을 재건하지 않는다면 협력 상대국들은 자국의 방향을

> 토대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이어 나갈 것이며, 이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핵확산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효율성은 더욱 감퇴할 것이다(Reagan, 1981).

이처럼 레이건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은 동맹국들의 원자력 산업 부흥을 지향하되 자국의 영향력권 내에서 원자력 사용에 대한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집중하였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다른 공급국들이 원자력협정을 통한 핵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국내법적으로 엄격한 비확산 정책을 추구한 미국과 달리 다른 공급국들은 상대적으로 원자력 수출 통제에 대한 완화된 요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급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수요국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수요국들의 원자력 시설 구축에 대한 적극적 입장이 석유 위기 이후 불거진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정적 상황과 결부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핵확산 위험이 없는 고도화된 원자력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에 한하여 재처리 시설과 고속 증식로의 개발을 금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1982-1987)

레이건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화를 감지한 일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장기 사전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82 년

미국과 일본은 본격적인 원자력개정 협상을 시작하였다. 미·일 교섭은 크게 2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 1 단계 협의는 1982 년 8 월에서 1985 년 7 월까지는 주로 재처리문제의 해결과 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1985 년 11 월부터 1986 년 8 월까지는 협정개정을 목표로 제 2 단계 협상이 이루어졌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가 실질적으로 교섭을 주도하였으며, 에너지부, 국방부, 군비관리군축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관여하였다. 국무부는 원자력 협력 사안을 미국 외교정책 및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국방부는 국방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에너지, 과학기술 및 환경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 소유, 사용, 처분인가와 인허가 규제 요건을 수행하며, 군비관리군축국은 군비통제, 핵비확산 및 군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방기관으로 핵확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가운데 협정 개정을 지지하는 국무부와 이를 반대하는 국방부의 대립이 두드러졌으나 국무부가 주요 결정을 독점하고 국방부는 협상에서 배제되었다(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1987, 345-347). 일본 측에서는 원자력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청과 통산성이 협정 개정을 둘러싸고 1 단계 협의에서부터 서로 대립하였으나, 2 단계 협상부터 외무성이

일본에게 유리한 교섭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을 주도하였다(전진호 2001, 185-188).

1 단계 협상에서 일본은 이미 완공된 토카이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에 대한 미국의 허용을 가장 우선적인 협상안으로 고려하였다.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이미 완공한 재처리시설을 미국의 국내법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이 연 3 억불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에너지 무역의 가장 중요한 수요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협상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Yoshida 2018, 2-3). 그러나 일본이 원자력 규제가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협정 개정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면서 초기 교섭 3 년 동안 양국은 뚜렷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결국 미·일 교섭 최종안은 일본이 요구하였던 단체추출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플루토늄 보관방식을 제외한 상업용 재처리시설 및 플루토늄 전환시설 건설이 2 년간 연기되었다. 이는 핵기술 통제에 대한 요건이 일본에게 유리하게끔 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85 년 재처리 교섭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미국은 기존 원자력협정의 핵기술 통제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핵 비확산법을 협정 개정에 반영하라는 국내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원자력관련 외교정책 수행에 있어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협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협정 체결에 대한 의회의 최종 승인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대로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레이건 행정부는 기존 국내법을 수용하면서도 장기 사전동의 방식을 도입하여 일본과의 윈윈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 측도 제 2 재처리 시설 건설 문제와 더불어 미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하는데 동의하였다(전진호 2002, 33-35).

장기 사전동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핵기술 통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었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핵기술 통제권인 사전동의권 내에 포함되지만, 비확산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원자력 산업 활동에 대해 건별 보고 방식이 아닌 30 년의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보다 자율적인 원자력 활동이 가능하였다. 핵기술 통제 요건에 있어 4 대 핵심 요소인 제 3 국 이전, 재처리, 농축,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 저장이 모두 장기 사전동의 방식을 승인받았다. 특히 재처리시설 및 플루토늄 사용에 대한 장기 사전동의 방식의 허용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원자력산업 활동에 있어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현재 일본이 준핵국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경제 무대: 미·일 무역 분쟁

1. 레이건 행정부의 통상법과 통상정책

레이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세계 무역, 생산,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 제기되는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발전하였다. 1980 년대 미국의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는 동등한 경쟁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소위 '잘 봐주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통상법의 변화는 미국의 상품이 해외에서 불공정하게 차별 또는 제약 받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전후 미 통상법의 역사는 1962 년 무역확장법, 1974 년 미국 통상무역법, 1988 년 종합통상경쟁력법을 기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서서히 자유무역의 색채가 희미해지고 보호적, 제한적, 보복적인 성격을 띄었다. 이 가운데 1974 년 미국 통상무역법 301 조(Section 301)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으로 미국 제품의 판매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관세, 수입 제한, 수출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을 행하는 무역 상대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즉 외국의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무역관행에 엄격히 대응하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행정부가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US Govinfo, 1974).

미일 무역 분쟁이 가시화되던 1985 년부터 미 의회는 일본의 시장개방에 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수입제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레이건 행정부를 압박하였다(船橋 1987, 93). 같은 해 9 월 정부는 주요 타깃인 일본과의 무역관계에서 통상법 301 조를 적극 활용하는 '통상정책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새로운 무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Cannon, 198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와 대외 경쟁력 저하로 인한 보호주의 압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의회는 1987 년 4 월 30 일 HR3(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7)에 대한 로스텐코스키와 기본즈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 표결에서 290 대 137 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시켰다(Destler 1986, 96-107; US Congress, 1987). 1988 년 8 월 23 일 레이건 대통령은 HR4848 에 서명함으로써 1988 년 종합통상경쟁력법이 제정되었다(US Congress, 1988). 1988 년 통상법은 1974 년 통상법 301 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슈퍼 301 조라고 불렸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무역대표부에게 허용함으로써 무역 제재의 위협을 의무화하고 특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전문기관인 무역대표부로의 제재 권한 이양은 301 조 운용을 비통상적 요인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조치였다.

1988 년 통상법은 강력하게 보호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초당적 지지 투표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기존 경제 정책의 실패로 재정적자가 증대되고 일본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더욱 누적시킨다는 불안 심리가 증폭된 상황에서 강력한 통상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국내 행위자와 이익집단이 의회에 압력을 가하기 쉬운 반면 행정부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미국내정치 구조상 행정부는 GATT 와 대립되는 301 조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통상법 301 조를 앞세운 미국의 일방주의는 미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무역 상대국의 제도나 관행이 부당하다고 간주하거나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2. 1980년대 대일 통상압력과 미·일 무역 분쟁

1980 년대 미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은 제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무역과 기술 분쟁이라는 'Two Track'에서 진행되었다. 주로 국내 통상법을 토대로 미국이 ①일본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거나 ②일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대일 수출을 늘려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되었다(Ito and Hoshi, 2020). 통상법에 근거한 보호무역조치 외에 GATT 규정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회색 수입제한조치라고 불리는

‘수출자율규제(VER)’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979 년에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재무부에서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상무부로 이관된 것도 수입제한 조치가 급증한 원인이었다(권영민 2005, 59).

1) 자동차(1980-1981): 수출자율규제(VER)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시점은 1970 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해 일본산 소형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부터였다. 상대적으로 연비 효율성이 뛰어난 일본 소형차로 소비자의 수요가 옮겨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된 반면 일부 미국의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은 일련의 해고 사태에 직면했다(Yoffie 1983, 221-230; Winham and Kabashima 1982, 82).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국가 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자동차 무역 분쟁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노조 단체와 자동차 산업과 같은 국내 민간 행위자 사이의 광범위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미국자동차노조(UAW), 빅 3 미국 자동차 회사, 일본 자동차 회사, 일본 정부, 미국 의회, 미국 행정부 등 6 개의 주요 행위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1980 년부터 미국자동차노조는 1974 년 통상법 301 조에 의거하여 정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일본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법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였다(小峰 2011, 53-54). 같은 해 미 대선에선 대중 매체 인터뷰, 의회 청문회 참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의회도 1980-81 년 미·일 자동차 협상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주로 자동차 산업과 깊이 연관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주도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실제 1981 년 3 월 상원은 3 년간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연간 160 만 대로 제한하는 쿼터제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자동차 수입 제한에 관한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의 압력 하에 레이건 대통령은 1981 년 취임과 동시에 일본과의 거래 전략을 조정해야했다. 당시 행정부는 자동차 통상협상을 주도할 각료급 TF 를 설치하여 일본에게 대미 수출자율규제를 요구하는 방침을 구상했지만 자유무역주의자와 보호무역주의자로 나뉘어 통상 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교통부, 상무부, 노동부, 무역대표부는 일본 수입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회사의 실적과 전반적인 고용률 모두에 끼친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보호주의적 접근을 지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무부와 행정예산국은 보호주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수입 규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GATT 체제 하에 자유 무역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자동차 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행동 방침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는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 무역 관계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 대미 무역 관계로부터 반사 이익을 얻고 있었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현상 유지를 추구하였다. 이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시장 의존도(20-40%)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미 수출을 제한하라는 요청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다(Reich 1989, 572). 반면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 분쟁에 대한 일본 정부와 통산성의 선호도는 국내 산업과는 달랐다. 미 국내에서 자동차 무역이 고도로 정치화된 상황에서 특정한 이슈 영역보다는 미·일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Winham and Kabashima 1982, 111-113). 결국 미국과 일본은 미 의회의 쿼터제 법안을 저지하면서도 자동차 문제를 둘러싼 국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공식협상 전략의 일환인 자발적인 수출규제조치(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다. 법안의 예정된 회기를 11 일 앞둔 1981 년 4 월 1 일, 일본 통산성는 3 년 동안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연간 168 만 대 이하로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댄포스 상원의원은 일본의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철회하였다.

2) 미·일 반도체 협정(1986)

1970 년대 후반 일본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한 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높은 자본 비용, 미 달러화 가치 상승,

새로운 프로세스 기술의 채택 지연, 품질 관리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점유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뚜렷한 비교 불이익을 받게 되자,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일본 산업의 강점이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국가 전략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Tyson and Zysman, 1983). 실제 당시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정책 아래 육성되고 있었고,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폐쇄성을 보였다(近藤 2011, 54~55).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1970 년대 말부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안을 시작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수입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일본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였다(김상배, 2002). 결국 일본은 1981 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4.2%로 인하하고, 1982 년 4 월 신설된 미·일 첨단기술산업 워킹그룹 내 반도체 소위원회에서 관세철폐, 상호 무역촉진, 투자 장벽 제거, 일본 진출 외자기업의 투자촉진책 지속, 기술교류 촉진 등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도출하였다(O'Shea 1993, 61).

상황이 급변한 것은 1985 년부터였다. 1984 년과 1985 년 사이에 컴퓨터 산업의 침체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자 궁지에 몰린 미 반도체산업협회는 1985 년 6 월 일본 반도체

시장의 폐쇄성과 반덤핑 행위에 대해 1974 년 통상법 제 301 조 위배협의로 무역대표부에 제소하였다. 덤핑이나 301 조 조사 이전부터 의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7 월 30 일, 상원 국제금융 및 통화정책 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일본의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한 업계 불만과 일본의 약탈적 마케팅 관행의 의혹을 검토하였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도 경쟁력 있는 미국 산업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에게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CIA 와 국방부는 해외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원을 지지하였지만 미 국무부와 재무부, NSC 는 미국 산업 문제가 부분적으로 경영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였다(Prestowitz 1988, 160). 관리예산처, 경제자문위원회, 법무부,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EA), 그리고 the Justice Department 는 자유무역협정 준수와 GATT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의 무역협상 전략에 반발하였다(O'Shea 1993, 72).

그러나 의회와 산업 양측의 강화된 압력과 일본의 불공정한 경쟁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가해지는 위협의 크기를 고려할 때, 행정부 내부에서도 공격적인 협상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마침 재선에 성공한 레이건 행정부도 일본의 불공정 행위를 주시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 안보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정의하라는 내부 압력도 거세지고 있었다. 청원은 대일

무역 적자와 해외 시장 개방에 대한 행정부의 스트레스와 일치하였고, 더 강력한 일본 정책을 원하는 의회를 달래고 무역 정책에 대한 행정권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했다(Irwin 1994, 41). 이에 따라 약간의 초기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무부와 여타 기관들도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를 지원하게 되면서 광범위한 내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측에서는 통산성이 반도체 분쟁을 주도했다. 통산성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료 메커니즘과 무역 협정을 이용하면서도 불공정한 무역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Prestowitz 1988, 64-65). 무엇보다 반덤핑과 301 조 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로비가 미국 무역법에 따른 엄격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서, 대일 제재는 일본에게 반도체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결의를 일깨워 주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반도체 회사들은 협상이 실패하여 일본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반면 미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양보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 회사들 중 다수는 미국의 대미 수출 보복의 잠재적 영향을 염려하는 전기 소비재 같은 제품의 수출업체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반덤핑 부과와 301 조의 제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약속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56K DRAM 반덤핑 절차를 중지하고 청원자의 EPROM 중단 및 반덤핑 절차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86 년 9 월 '미국-일본 반도체 협정(1986 U.S - Japan Semiconductor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본 협정의 핵심은 '5 년 이내에 미국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20%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일본 측이 이해하고 환영하며 노력한다'는 비밀부속서 조항이었다(近藤 2011, 63).

청문회(1987-1988): 미 국내 행위자들의 연기

현재까지 미국은 원자력 공급국 가운데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을 국내법으로 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행정부가 대외정책으로서 다른 국가와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의회가 원자력법 제 123 조를 고려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동학이 나타난다. 특히 미국은 시기적 상황과 협력 상대국에 따라 협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어긋난 원자력협정에 대해선 국내정치적 수준에서 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행위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본 보고서는 당시 미 의회의 협정 개정안 심의 절차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이 참가한 청문회(hearings) 자료인 'United States-Jap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th Congress First and Second Sessions, December 16, 1987 and

March 2, 1988’을 분석함으로써 결정 요인을 추론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련 청문회는 1987 년 12 월 16 일과 1988 년 3 월 2 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청문회에선 교섭을 주도하였던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군비관리군축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두 번째 청문회에선 국내 원자력산업 종사자와 관련 연구소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새로운 원자력협정을 통해 일본이 미국에서 유래한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어 있었다. 미 행정부의 경우, 협상을 주도한 국무부, 에너지부, 군비관리군축국이 협상을 강력히 옹호한 것과 달리 국방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플루토늄을 이용한 시설에 대한 향후 테러 위협과 플루토늄 수송에 따른 물리적 보호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 의회에서는 협의안의 심의를 주도한 상원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를 비롯하여 다수의 하원의원들이 협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감정적 편견 없이 협정의 실질적 성과와 국내법과의 양립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관계자와는 별도로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인 General Electronic 과 전력회사 연합인 Edison Electric Institute(EEI), 그리고 American Nuclear Energy Council 이 협정을 지지한 반면,

Nuclear Control Institute(NC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그리고 Hudson Institute 는 협정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사안에서 네 가지 논점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사안은 원자력 협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기술적인 논점(플루토늄 운송, 새로운 안전조치 적용, 그리고 장기 사전동의 방식)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사안은 경제/무역과 연관된 정치적 사안으로 안보(비확산) vs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어졌다.

1. 원자력 협력 관련 기술적 사안

1) 플루토늄 운송: 환경과 안전

<반대>

◆ 플루토늄은 공기 중에 쉽게 퍼지며 잠시라도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에게 매우 유해한 독성물질이다. 에너지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과거 원자력 생산과 관련된 환경 및 안전 관련 문제를 대부분 무시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저렴하고 보장성이 높은 대안과 비교하였을 때 원자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게도 좋지 않은 협상이다.

◆ 플루토늄 항공 운송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 전역의 플루토늄 항공 운송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엄격한 안전장치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와 캐나다 정부가 플루토늄 운송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캐나다와 알래스카에서 운송이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워싱턴에서 매달 3 회에 걸쳐 300 파운드 이상의 플루토늄을 운송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플루토늄 사용이 장기적으로 핵확산과 테러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럽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을 특정 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이나 해외의 이익에 반하는 무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찬성>

◆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을 참작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환경평가를 마련하였으며 플루토늄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플루토늄 운송은 전용 화물 항공기를 통해 자연 재해나 시민 생활 영역을 피하기 위해 선택된 극지방 노선이나 다른 경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 플루토늄 운송 시 특정

국가를 수반하는 어떤 계획도 해당 국가의 승인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어느 국가도 협력과 지원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협정은 재처리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프랑스와 영국의 특정 시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장기간 사전 동의를 제공하며, EURATOM 으로부터 회수된 원료를 일본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제 운송에 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물리적 방호조치에 대한 국제적 협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침의 갱신도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동의권이 적용되지 않는 일본 플루토늄의 선적과 운송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국제 규범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새로운 안전조치 적용

<반대>

◆ 새로운 안전조치는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사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상의 안전장치에 대한 수용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무엇보다 현재 안전장치의 기술은 완전히 발전되지 않은 개념으로, 협정이 수용 가능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선 여전히 광범위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모르는

미래 시설에 대한 장기적 프로그램 승인을 제공하기보다 기존 협정과 같이 건별 조항에 대한 승인이 바람직하다.

◆ 안전장치 접근방식이 IAEA 안전장치와 검사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떤 성과기준도 목표를 구속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대규모 재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목표를 연간 100kg 이상의 플루토늄으로 책정하면서도, 그러한 계산방식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처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항은 아직 입증되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 비록 새로운 협정이 원자력법에 포함된 법적 요건을 보장하고 핵물질과 핵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구성요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핵확산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찬성>

◆ 협정 개정안은 전체를 포괄하는 일련의 기준뿐만 아니라 아직 건설되지 않은 미래 발전소 시설과 설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과 세부적인 안전조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문서는 IAEA 가 확립한 안전장치 원칙들을 포함할뿐 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기존 원칙을 뛰어넘어 어떤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미국에 이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만약

새로운 시설이 가동되기 직전 일본이 적절한 안전장치 접근법을 고안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해당 시설에 관한 장기 사전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핵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 미국이 전 세계의 플루토늄을 통제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그들이 실제로 사용할 플루토늄에 최첨단 안전장치 개념과 물리적 방호 조치의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협정은 일본의 첨단 핵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장치와 물리적 방호조치의 적용에 있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미국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핵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도 이 협정에 수반된 비확산 정책성명에서 IAEA 가 안전장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 안전장치 기법을 통합하여 안전장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미래 시설의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설 및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IAEA 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전조치의 적용이 가능하다.

◆ 새로운 협정의 제 3 조, 4 조, 5 조에 따르면 협정은 핵확산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본

조항에 명시된 상호 합의 요건을 충족하고 각 국가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법의 목적을 위한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이행 합의서는 제 11 조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협정을 통해 보장한다.

3) 장기 사전 동의방식

<반대>

◆ 기존 사례별 검토방식을 보다 포괄적인 형태인 사전 동의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도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활동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으며 플루토늄 사용에 대한 동의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포괄적 허가인지 아니면 백지 위임인지 또는 실제 협정 기간 동안 검토와 동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 특히 30 년 동안 상황이 변화할 경우 미래에도 여전히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이 접근법을 통해 사례별 검토방식에 따른 의회의 심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도록 30 년간 포괄승인을 제공함으로써 협정은 아직 건설되지도

않은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 부여할 것이다. 이는 핵확산금지를 위한 신중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관련 시설이 비핵국가에서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다른 유형의 시설의 크기에 비례하여 플루토늄의 허용량이 증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찬성>

◆ 기존 사례별 검토방식은 원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얻기 위해 각각의 사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항상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그들이 미국의 증가하는 요구에 몹시 분개하고 있다. 사실상 장기 사전동의 방식에서도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모든 조건들을 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협정은 각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상황적 변화를 반영하기에 유용하다.

◆ 무엇보다 미국은 핵 확산의 위험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증가를 막기 위해 미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부 또는 모든 활동에 대해 사전 동의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양국은 IAEA 와의 안전조치 협정의 종료 또는 기타 명시적 조건의 위반을 포함하여 협정을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나 해지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지만 일방적인 협정 종료 권리를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 제 16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지 또는 정지의 경우에도 계약의 비확산 조건과 통제는 계속 유효하다.

◆ 현재 미국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일본의 플루토늄 사용 여부가 아니다.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 핵 프로그램에 플루토늄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이 열적 재활용과 고속 증식 원자로 프로그램에 다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게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은 플루토늄 사용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장기 사전동의 방식은 미국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절차, 활동에 관한 일반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미국 핵물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전소의 설계와 운영 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정 개정안은 사전 동의를 위해 일본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정확한 조건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행 합의서는 적절한 안전장치 및 물리적 보호와 관련된 기준을 포함하여 미국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협정 대상 핵물질의 특정 재처리, 이전, 변경 및 저장에 대한 장기적 동의를 일본에 제공한다. 그러나 특정

활동에 대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사전 동의는 해당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치적 사안: 안보(비확산) vs 경제적 이익

<반대>

◆ 이번 협정 개정이 일본뿐만 아니라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협력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위험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의 안보보다 경제적 이익을 미국 정책의 배타적인 결정요인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미국이 기존 협정이 보장하는 핵 통제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 비확산금지법이 전면적인 플루토늄 경제에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개정안은 미국법의 요건을 위반하는 사실상 규제되지 않은 무역을 촉진한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당한 양의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폭발 장치에 필요한 양을 실질적으로 초과하여 추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찬성>

◆ 현재까지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연료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농축된 것으로, 기존 협정은 미국의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때 통제권을 행사했으며 개정 이후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사용후연료의 이전과 재처리 승인에 있어 미국의 동의 없이 비-미국산 연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익성이 좋은 일본 우라늄 농축 사업을 유치하려는 유럽의 적극적인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전력회사가 유럽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국제 원자력 협력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 나아가 협정 개정은 일본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십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수출의 지속과 성장을 보장하며, 핵 거래 환경에 있어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일본은 농축 서비스 분야의 최우수 고객으로, 이러한 일본의 구매력은 향후 10 년 동안 증가하여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새로운 협정은 미국을 원자력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다.

◆ 일본은 국제사회에 우수한 비확산 성과를 보여왔다. 일본은 핵 피폭의 경험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방사능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였지만 광범위한 핵 교류를 장려해왔으며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활동을 공개해왔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2 년 일본과의 핵 협력에 대한 특별한 접근법을 승인한

것도 이러한 사실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본은 EURATOM 과 더불어 핵확산 위험이 전혀 없고 엄격한 조건과 통제를 유지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이자, 플루토늄 사용을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로, 안전한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미국 원자력 정책의 기조이다.

◆ 토착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선진 공업국인 일본에게 원자력 발전은 전력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협상 초기 일본은 장기적 에너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재처리 동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였다. 즉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제 방법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일본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협정은 미국과 일본 산업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미국의 원자력 발전이 공백을 채우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기술 및 제도적 혁신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운영 경험 기록도 꾸준히 쌓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과 전력회사는 일본 측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향후 첨단 원자로 설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함께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협력과 관련된

향후 수익이 세기가 바뀌기 전에 30 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 본 협정은 비확산금지의 법적 요건과 일치하며 궁극적으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라는 미국 국가 안보의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한다. 이는 일본이 모든 신규제 조항을 채택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기존 협정보다 엄격한 요구사항과 새롭게 연장된 동의권을 확대 보장한다. 또한 협정은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과거 마찰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협력이 유지되고 개선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협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로서 1988 년부터 매년 두 차례 양자 간 비확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협정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가들이 비확산 체제에 동참하는 것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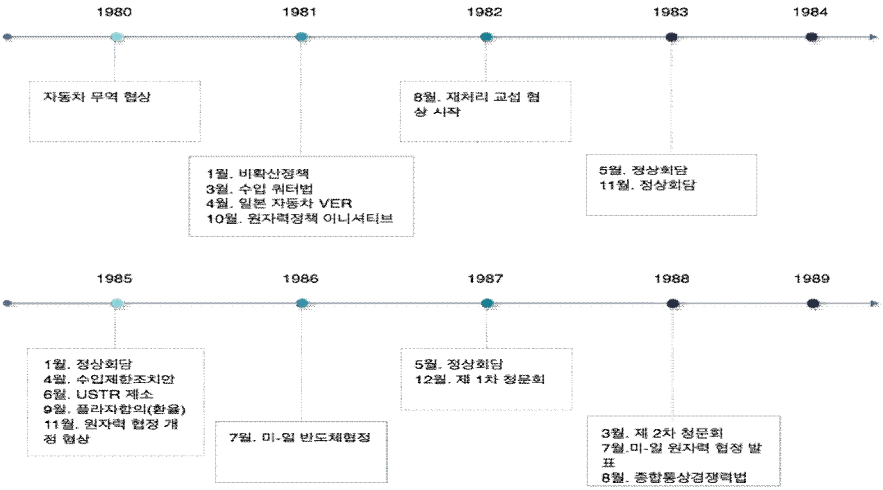
이처럼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에서 ②플루토늄 운송과 ③새로운 안전조치 적용은 협정 개정에서 핵기술 통제 요건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편적이고 기술적인 영향에 관한 논의였으며, ④장기 사전동의 방식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존 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차별성을 가진 조항이었다. 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협정이 위험한 핵물질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확산이나 국가안보, 환경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합의안 승인을 유보하고 최대한 기존 틀에서 원자력 협력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분명 기술적 사안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지만 미국도 모든 논점을 양보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시설 이전 및 플루토늄의 선적과 운송에 대한 장기적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고 핵 확산의 위험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보장받았다. 또한 미국 핵물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 절차, 활동에 관한 일반 규칙과 물리적 방호조치 및 첨단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국제 규범을 확립하였다.

무엇보다 당시 미 국내정치에 있어 가장 큰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가진 사안은 바로 ①안보(비확산) vs 경제적 이익으로, 해당 요인이 미·일 원자력협정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이 해당 사안에서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다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협정이 미국과 일본의 평화적 핵 협력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면서도 미국의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협정은 일본이 모든 신규제 조항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비확산체제 강화'라는

미국 국가 안보의 기본적인 목표와도 일치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향후 미·일 원자력 협력의 문제는 '일본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의 지속이냐 아니면 본질적으로 향후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이냐'의 선택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레이건 행정부도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플루토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원자력 협정을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핵의 평화적 사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나가며: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와 에너지의 복합 무대로



1980 년대 미·일 원자력 협정과 무역 분쟁 사례가 동시에 진행된 시공간에서도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일 무역 분쟁의 협상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자발적 수출규제조치(VER)를 비롯한 일본의 양보를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실제 대부분의 분쟁 사례에서 일본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에게 가치 있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양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GATT 체제 하에서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단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마다, 일본은 자발적인 수출규제조치로 대응하였다. 당시 일본의 수출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일본의 대미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일본의 대미 무역정책의 기동성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먼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 행위자들로부터의 강한 국내적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협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었다.

반면 1980 년대 레이건 행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목표는 국내 경제 회복과 경제적 패권의 확보였다. 미·일 무역 분쟁의 경우, 일본의 경제 성장과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미국의 경제 침제와 자유무역 기조와 상반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 장벽과 불공정 무역 관행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국의 대일 통상 압력은 원자력협정과 달리 국내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주요 정부 부처보다 미국 내 노조 단체와 자동차 제조회사 또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와 국내 이익단체가 국가 간의 통상 마찰을 촉발시키는데 앞장섰다. 무엇보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의 성격 자체가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내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혜택을 누리고 일본 경쟁업체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통상 압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일 통상 위협의 실효성 향상에는 행정부 내부,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대일 무역 전략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복지와 안보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미·일 관계 전반에 더 민감한 정부 부처들조차 일본과의 경제/무역 관계에선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채택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미 의회 역시 대다수의 의원들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과 달리, 1980 년대 미국 의회에 상정된 무역 법안의 대다수가 불공정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을 정도로 무역 분쟁에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국내적 압력은 미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보호주의

정책을 용인할 것이라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시켜 일본 정부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었다.

반면 원자력협정 교섭은 긴 협상 과정을 거쳐 일본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재처리로부터 회수되는 플루토늄의 이용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미국과 달리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경우, 원자력정책결정의 최고기관인 원자력위원회를 필두로 통산성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을, 과학기술청이 연구 및 개발 등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을 분담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사실상 국가정책의 결정권을 독점하고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개별 성청의 이익이 아닌 이익연합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일본 측의 양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전진호 2002, 28-29). 반면 미국의 경우 청문회에서 드러나듯이 원자력협정 개정안을 둘러싸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재처리 문제와 플루토늄 운송 문제와 같은 기술적 사안을 물론 안보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장서서 국내 행위자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던 일본 정부가 원자력협정 개정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1980 년대 원자력협정과 미·일 무역 분쟁 사례 모두 각국의 국내정치적 수준에서 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 사례에서 다양한 연기를 선보였다. 첫 번째 청문회에선 일본과의 협정 교섭을 주도했던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군비관리군축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두 번째 청문회에선 원자력산업, 연구소, 학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1980 년대 미·일 무역 분쟁도 해당 산업이 국제적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 위주의 경쟁을 넘어 노동조합, 기업, 의회를 포함한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정부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얽힌 네트워크 성격의 분쟁 형태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정부 기관은 자동차 무역 분쟁과 반도체 협정, 그리고 원자력협정에 참여했던 미 국무부와 국방부, 의회, 그리고 일본의 통산성이다. 국무부는 미·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여 1980 년대 미·일 통상 압력은 반대했던 반면 원자력협정 개정 교섭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기관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반면 국방부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가져올 국가 안보적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미·일 통상 압력에는 찬성했지만, 같은 이유를 들어 원자력협정 개정에는 반대하였다. 무역 분쟁 사례에서 국내 산업의 이익을 옹호했던 미 의회는 자동차 수출규제조치와 반도체 협정 체결에 있어서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원자력협정에 있어선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였다. 한편 미·일 무역 분쟁과 원자력협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일본 통산성의 경우,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전반적인 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협상에 임했다. 이처럼 같은 시기, 각기 다른 양자 협상에서 상반되는 연기를 펼친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들의 시각에서 각국의 국가 이익을 안보라는 단순 무대를 넘어 경제와 에너지의 복합 무대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청문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핵확산금지를 포함한 안보적 고려나 기술적 문제보다 우선시하고 있었다.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좋은 일본으로의 연료 수출 사업이 유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았으며, 이로 인해 국제 원자력 시장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였다. 반대로 협정 개정이 가져올 미국의 원자력 수출의 지속과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핵 거래 환경을 통해 미국의 원자력 발전의 공백을 채우고 향후 일본 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면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미·일 무역 분쟁은 20 세기 후반 세계경제에서 양국 간의 제조 및 첨단 기술을 둘러싼 라이벌관계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대일 통상 압력은 일본의 불공정 무역행위에서 나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관계적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미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자유무역 원칙을 포기하고 관리형 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처럼 무역 분쟁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세하지만 경제나 기술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은 시대에 경제 패권을 위한 세계적인 투쟁의 일환이었다.

물론 본 보고서의 사례 연구만으로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하나의 결정적 요인을 특정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많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결정되고 특정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에 언제 어떤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더 중요한지를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무엇보다 당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었던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 사이에서 긴밀하게 오갔을 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1980 년대 경제 무대에서 미·일 무역 분쟁의 끊임없는 연쇄 작용 속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양보를 무릅쓰고 원자력협정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일본이 군사·안보 무대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경계에 설 수 있도록 한데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상황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rade in Semiconductor Products,"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L/6076, 6 November 1986. https://docs.wto.org/gattdocs/q/GG/L6199/6076.PDF (검색일: 2021 년 2 월 5 일).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81-1988, Volume XXX, Japan; Korea, 1981-1984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81-88v30 (검색일: 2021 년 2 월 1 일)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81-1988, Volume XXX, Japan; Korea, 1985-1989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81-88v30 (검색일: 2021 년 2 월 1 일).

OCED. no date. U.S. Atomic Energy Act, Section 123.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https://www.oecd-nea.org/law/nlbfr/documents/087_090_USAtomicEnergyAct.pdf (검색일: 2020 년 12 월 18 일).

Reagan, Ronald. 1981. “Statement on United State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July 16)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statement-united-states-nuclear-nonproliferation-policy (검색일: 2021 년 1 월 31 일).

Reagan, Ronald. 1981. “Statement Announcing a Series of Policy Initiatives on Nuclear Energy.” (October 8)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statement-announcing-series-policy-initiatives-nuclear-energy (검색일: 2021 년 1 월 29 일).

Reagan, Ronald. 1987. “Proposed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November 9) https://www.nrc.gov/docs/ML0413/ML041350444.pdf (검색일: 2021 년 1 월 25 일).

Reagan Library. 1983. “Remarks of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of Japan Following Their Meetings.” (May 27)

https://www.reaganlibrary.gov/archives/speech/remarks-president-and-prime-minister-yasuhiro-nakasone-japan-following-their (검색일: 2021 년 2 월 1 일).

Reagan Library. 1983. “Remarks of the President and Prime Minster Yasuhiro Nakasone of Japan Following Their Meetings in Tokyo.” (November 10) https://www.reaganlibrary.gov/archives/speech/remarks-president-and-prime-minister-yasuhiro-nakasone-japan-following-their-1 (검색일: 2021 년 2 월 1 일).

Reagan Library. 1986. “Remarks Follwing Discussion With 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of Japan.” (April 14) https://www.reaganlibrary.gov/archives/speech/remarks-following-discussions-prime-minister-yasuhiro-nakasone-japan (검색일: 2021 년 2 월 1 일).

Reagan Library. 1987. “Remarks Following Meetings With 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of Japan.” (April 30) https://www.reaganlibrary.gov/archives/speech/remarks-welcoming-ceremony-prime-minister-yasuhiro-nakasone-japan (검색일: 2021 년 1 월 27 일).

Regan Library. 1987. “Remarks Following Meetings With 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of Japan.” (May 1)

https://www.reaganlibrary.gov/archives/speech/remarks-following-meetings-prime-minister-yasuhiro-nakasone-japan (검색일: 2021 년 1 월 27 일).

US Congress. 1987. "H.R.3-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7," 100th Congress (1987-1988), (June 1) https://www.congress.gov/bill/100th-congress/house-bill/3 (검색일: 2021 년 1 월 5 일).

US Congress. 1988. "H.R.4848-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00th Congress (1987-1988) (June 16) https://www.congress.gov/bill/100th-congress/house-bill/4848 (검색일: 2021 년 1 월 5 일).

US Govinfo. 1974. "Trade Act of 1974." https://www.govinfo.gov/content/pkg/STATUTE-88/pdf/STATUTE-88-Pg1978-2.pdf (검색일: 2021 년 1 월 5 일).

US Govinfo. 1978.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Public Law 95-242, 95th Congress, Mar 10, 1978, H.R.863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STATUTE-92/pdf/STATUTE-92-Pg120.pdf (검색일: 2020 년 12 월 18 일).

United States Census Bureau. no date. “Foreign Trade: Trade in Goods with Japan.”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880.html#1985 (검색일: 2021 년 1 월 3 일).

United States-Jap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th Congress First and Second Sessions, December 16, 1987 and March 2, 1988.

The White House. 1981. “United States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Policy,” (July 16) https://fas.org/irp/offdocs/nsdd/nsdd-6.pdf (검색일: 2021 년 1 월 29 일).

<2 차 문헌>

1) 단행본

Beckman, Robert L. 1985. *Nuclear Non-Proliferation: Congress and the Control of Peaceful Nuclear Activities*. London: Westveiw Press.

Gandolfo, Giancarlo. 2014.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second edition) Berlin: Springer.

Ito, Takatoshi and Takeo Hoshi. 2020. *The Japanese Economy* (second edition) London, Cambridge: The MIT Press.

Morse Ronald A. (ed.), 1981. *The Politics of Japan's Energy Strategy: Resources-Diplomacy-Security*.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towitz, Clyde V. *Trading Places: How We Are Giving Our Future To Japan & How To Reclaim It*. New York: Basic Books.

Tyson, Laura D'andera. 1992.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lters, Robert S. (ed.), 1993. *Talking Trade*. New York: Routledge.

Yoffie, David B. 1983. *Power and Protectionism: Strategies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船橋洋一. 1987. 《日米経済摩擦―その舞台裏》. 東京: 岩波書店.

小峰隆夫. 2011. 《日本経済の記録－第 2 次石油危機への対応からバブル崩壊まで－》. 東京: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 논문

김상배. 2002.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2 집, 제 2 호.

방기열. 2007. “Country Profile: Japan.”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3C60154FDA9EB0DB4925734D0029B26D/$file/Country%20Profile-JAPAN.pdf (검색일: 2021 년 1 월 31 일).

전진호. 2001. “일본의 원자력정책 결정과정: 원자력의 국제환경에 대한 국내체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1 집, 제 4 호.

전진호. 2002. “미·일 교섭의 정책결정과정: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미·일 교섭의 정치과정.” <국제·지역연구>, 제 11 권, 제 2 호.

Cannon, Lou. 1985. “Reagan Emphasizes Free-Trade Stance.”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1),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85/09/01/reagan-emphasizes-free-trade-stance/2cd984df-cb89-4f2e-ba34-9e9c6bf5d7b9/ (검색일: 2021 년 1 월 5 일).

Destler, I. M. 1986. "Protecting Congress or Protecting Trade." *Foreign Policy*, No. 62 (Spring).

Irwin, Dogulas A. 1994. “Trade Politics a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NBER*, Working Papers 4745.

Reich, Simon. 1989. “Roads to Follow: Regulating Direct Foreign Invest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3.

Tyson, Laura and John Zysman. 1983. “American Industry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Strategi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25, No. 3.

Yoshida, Phyllis Genther. 2018. “U.S-Japan Nuclear Cooperation: The Significance of July 2018.” *Sasakawa USA* (March 26).

2장

두 패러다임의 격전지
_데지마

김재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들어가며

현재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 전략을 천명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였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으로 확장되어 군사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 인권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또한 대중 공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국이 전환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패권 전환이 서구 가치라는 동일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현재의 미중 충돌은 단순한 패권 투쟁일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가치 기반의 패러다임과 그에 대항하여

자신만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패러다임 충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충돌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서구 패러다임에 속한 국가라는 정체성과 중국의 이웃 국가이자 강한 영향을 받는 국가라는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것과 비슷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 나간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과거 일본은 중국 중심의 화이 질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서 양대 질서를 배우며 성공적으로 서구 질서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중화 패러다임과 서구 패러다임이라는 두 패러다임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낸 일본의 사례는 오늘날의 한국이 마주한 미중 패러다임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은 서구 문명과 일본의 접촉지였던 데지마(出島) 입니다.

데지마의 설립 배경

최초로 일본이 서양과 접촉한 곳은 데지마가 아니라 가괴마 남단의 다네가시마입니다. 이후 선교사들과 포르투갈 상인들은 히라도, 나가사키를 거점으로 일본과 교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확산에 부담을 느낀 일본은 1636년 작은 반도에 운하를

판 뒤 다리로만 연결한 구역을 만들고 데지마라 이름지은 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일본인과 서양인의 접촉을 차단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1637년 과도한 세금과 기독교 탄압에 시마바라의 난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란이 일어납니다. 이 민란의 추축에 일본인 기독교도들이 있었다는 점과 포르투갈의 포교를 문제삼은 막부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추방한 뒤 히라도에 위치하던 네덜란드의 상인들을 이 곳으로 이주시켜 통제합니다. 네덜란드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지마 밖으로 나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일본인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데지마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통역 또한 일본에서 네덜란드어를 공부한 통역관들로만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세습되어 다른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를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메이지 유신 이후 데지마가 무역 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사라집니다. 그 때까지의 일본은 중국과 조선, 그리고 네덜란드 세 나라와만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이른바 쇄국(鎖國)정책을 펼칩니다. 비록 데지마는 서구의 문물을 통제하려 설치된 면이 있지만 동시에 서양의 정보를 일본에 전해주는 창구로써의 역할 또한 했습니다. 이렇게 데지마를 통해 소개된 서양의 정보는 일본에서 란가쿠(蘭学) 즉 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기존의 중화 패러다임

당시의 일본은 중국 중심의 화이 질서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기존 질서 체계 하에서 일본과 조선을 비롯한 중국의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이란 사상, 문화, 지식, 규범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일본은 조선이나 베트남처럼 직접적인 조공 책봉관계로 중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시기도 있는 등 화이질서의 변방국으로 존재하였으나, 류큐 왕국과 조선을 통해 중국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동아시아의 중화 세계의 일원으로 존재해 왔습니다(김기혁 2002, 66). 일본 또한 중국의 한문으로 쓰인 중국의 경전인 사서삼경을 읽고 공부하였으며,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는 의학 분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867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복각된 의학 도서는 중국 도서 315종과 조선 도서 7종으로 의학 전 분야의 기초부터 임상까지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그 중 민간이 아닌 에도 막부가 직접 관여하여 인쇄한 도서 또한 자주 존재하는 것에서 일본의 의학 또한 중국의 한방 의학에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真柳誠 2010, 156). 그러나 데지마를 통한 지속적인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은 차츰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그들의 교역품 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 그리고 지식 또한 일본으로 유입시켰습니다. 난학이라 불린 서양의 지식은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지마가 위치한 나가사키로 끌어들였으며, 이로써 나가사키는 난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 난학의 시작으로 꼽히는 사건 중 하나가 스기타 겐파쿠 (杉田玄白), 마에노 료타쿠 (前野良澤), 나카가와 준안 (中川淳庵) 의 해체신서 발간입니다. 스기타 겐파쿠와 마에노 료타쿠는 각각 오바마 번과 나카쓰 번의 번의의자 친구였으며, 둘 모두 네덜란드의 의학에 영향을 받은 '오란다 류' 의학을 행해왔습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요한 아담 쿨무스 (Johan Adam Kulums)가 쓴 『타펠 아나토미아』 라는 책을 입수합니다. 겐파쿠는 이 책을 읽으며 지금껏 자신이 배우고 행해온 의학과는 크게 다른 책의 내용에 놀랍니다. 지금껏 한방 의학에서 말해오던 '오장육부'와 해부도와는 전혀 다르게 인체를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종각, 73).

그 후 1771 년, 한방의학과 서양의학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에노 료타쿠, 나카가와 준안와 함께 처형장에서 사형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인체 해부인 후와케(腑分)를 참관합니다. 당시 후와케를 맡은 아흔 살 노인에게

여러 장기에 대해 질문하자 그 노인은 각 장기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항상 같은 위치에 같은 장기가 있었다며 지금껏 후와케를 참관한 의사들 중 질문을 한 사람은 한번도 없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겐파쿠와 료타로는 사형수의 뼈와 장기 등을 직접 『타펠 아나토미아』의 해부도를 비교하며 이 책의 정확성에 감탄합니다. 물론 이들은 후화케를 참관한 최초의 의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종각, 225)

이들이 참관하기 17 년 전인 1754 년 막부의 관의 중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던 야마와키 토요가 참관한 것이 처음이며 그는 이를 통해 『장지』(藏志) 라는 책을 출판하며 중국의 오장육부설이 실물과 다르며 서양의 책이 더 정확하다고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오카다 요센과 후지모토 립센이라는 의사들 또한 여러번 참관했으나 그들은 중국인과 서양인은 인체구조가 다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편 겐파쿠는 후화케 참관 이후 한방과 양방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행운이라 생각함과 동시에 인체의 구조도 모른 채 의술을 행해온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타펠 아나토미아』를 번역하여 사람들이 인체의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번역을 제안합니다.

『타펠 아나토미아』 번역 시작부터 3 년이 지난 1774 년 드디어 『타펠 아나토미아』 는 『해체신서』 라는 이름과 함께 번역이 완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홍모담』 발매 금지 사건은 이들에게 출판 후 닥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홍모담』은 1765 년 발간된 네덜란드의 풍속이나 이야기들을 엮어 만든 책인데 이 안에 알파벳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저자를 문책하였습니다. 『해체신서』를 출판 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닥칠 것 을 걱정한 스기타 겐파쿠는 두가지의 방법을 내놓습니다. 첫째로 책의 출판에 앞서 『해체신서』의 일부를 『해체약도』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여 세상에 내놓아 세간의 반응을 보는 것이고 둘째로 쇼군에게 이 책을 헌상함으로서 막부의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막부와 세간에서 큰 반발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출판된 『해체신서』는 난의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한방의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패러다임의 충돌과 겐파쿠의 선택

『해체신서』가 출간되자 네덜란드의 의술의 정확성에 놀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동시에 한의학 측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반발을 예상하였던 겐파쿠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광의지언』(狂醫之言) 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를 통해 겐파쿠는 기존의 한방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서양의학이 옳은 이유를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담화는 단순히 한방과 양방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따른 단어 선택까지 두 화자가 달리 말하고 있어 겐파쿠가 전통적 화이사상에서 탈피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광의지언』에서 한방을 대표하는 "친구"는 '중화'는 성인, 현자의 나라이자 문명의 중심국으로, 그들이 전파한 의학을 통해 수천년에 걸쳐 질병을 치료해 왔는데 스기타는 사람은 세계 변두리의 야만국의 질 낮은 지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겐파쿠는 세상에 중심이란 없으며 '지나' 또한 동쪽 한 구석의 소국에 지나지 않으며 각 지역은 각기 환경에 적응할 뿐 '도'는 어느 지역에나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중심의 화이 체계를 부정합니다. 그 뒤 겐파쿠는 지금까지 한방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왔다는 '친구'의 주장에 사람은 새가 먹는 벌레의 맛은 모르더라도 새가 먹을 모이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며 근본 원인을 모르더라도 어느정도 치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겐파쿠는 한방을 "동으로 만든 그릇을 멀리 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하는 것과 같다"며 그릇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뜨거운 물이 들어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화롯불이 들어있기 때문인지 알 지 못하고 단순히 그릇이 뜨겁다는 것만 안 채로 내부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서양의학은 어떠한 상태를 만드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직접 작용하기에 옳은 것이라 말합니다(이예안 2016, 240). 즉 병의 근본 원인을 확실히 하는 것이 '법'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방'인데 서양 의학은 '방'과 '법' 모두를 지니고 있으나 한방은 '방'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담화에서 겐파쿠는 한방을 '한설'(漢説), 중국을 '지나'로 낮잡아 부르는 한편 서양 의학서를 '난서'(蘭書)라고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의지언』의 말미에 중국의 의학을 따르는 자가 많아 중과부적일 지라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며 책은 끝납니다.

이러한 화이 세계에서의 탈피는 책의 내용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까지 일본을 비롯한 화이 질서 속 국가들은 중국이 수도를 '경'(京) 그 주변부를 '기'(畿)로 부르기 시작하자 일본 또한 수도 교토 ('京'都)와 그 주변 긴키(近'畿')지방으로 부르는 등 중국이 만든 글자와 단어들을 통해 개념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체신서』를 번역하며 새로운 단어의 필요성을 느낀 겐파쿠는 '신경', '연골', '동맥' 등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단어들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중국의 뛰어난 문명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던 일본이 창조하는 위치로의 위치 변화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해체신서』의 번역을 효시로 일본에서는 네덜란드 서적 번역의 붐이 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난학을 전파시키는 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이는 당시 학문의 주류였던 유학에서도 난학의 가치를 인정하게 변화시킵니다.

일본의 유학자 타키 카구다이(瀧鶴臺)는 조선 통신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도 만이 귀한 것이 아니며 오랑캐의 도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중화 사상에서의 탈피를 보여줍니다 (구지현 2007, 287). 또한 일본의 국학자인 히라타 아쓰타네는 한학은 무수히 많은 학문 중 하나이며 난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라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중국의 사상이었던 유학에서조차 중국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한 것입니다.

『해체신서』를 출간 후 41 년 뒤인 1815 년 스기타 겐파쿠는 『해체신서』의 번역 과정을 담은 회고록 『난학사시』(蘭学事始) 를 출간합니다. 이 책이 조명을 받은 것은 이후 한참 뒤인 1869 년 일본 근대화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다시 발견되며 재조명됩니다. 그는 이 책을 읽은 뒤 탈아론을 내새웁니다. 아시아의 질서에서 벗어나 유럽의 질서를 지향하자는 그의 주장의 예시를 중화적 질서와의

결별의 시작점인 『해체신서』의 출간을 담은 내용의 『난학사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스기타 겐파쿠가 해체신서를 번역, 출판하고 책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론이 생각났습니다. 이전 일본이 속해있던 중국 중심의 화이 패러다임 속에서 일본은 서양과 접촉하였고, 그들의 지식과 화의 세계관 하의 본인들의 지식을 실제 모습과 비교해 본 뒤 기존의 화이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양의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스기타 겐파쿠는 최초로 한방이 설명하는 인체의 구조가 실제의 인체와 다른 것을 알아낸 사람도 아닐뿐더러 최초로 서양의 의학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또한 오란다류 의사였고 야마와키 토요의 『장지』를 읽고 한방의 인체 구조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화케를 참관한 사람도 이미 이전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양 의학을 한방이라는 패러다임 아래서 설명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양의학의 인체구조도가 더 정확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중국인은 인체구조가 다른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를 단순히 기존 패러다임의 이변으로써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겐파쿠는 이러한 이변들을 서양의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설명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의학 외 적으로도 화이 패러다임의 탈피의 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토마스 쿤은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의 주류 패러다임인 서구 질서 또한 언젠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초창기 아시아에서 환자가 급증할 당시 서구 언론은 서방 국가들은 선진적이고 개화된, 그리고 민주적인 국민들로 인해 서구 국가들에서의 확진자 수치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구 국가에서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아시아 국가들에서 확진자 수치가 안정되자 아시아 국가들은 사생활 보호를 하지 않고 통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하며 이변들을 자신들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어느 패러다임을 선택할 지 결정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양 쪽의 인식론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시기가 임박해서 비교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기존 서구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중국의 신 패러다임에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야마와키 토요나 오카다 요센, 혹은 후지모토 립센처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이변을 기존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분석하는 시도를 병행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선택의 시기가 왔을 때 더욱 정확한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구지현. 2007. “필담을 통한 한일 문사 교류의 전개 양상 – 적간관(赤間關)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38-269.

김기혁. 2002.「1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신편 한국사』 37. 국사편찬위원회.

스기타 겐파쿠 외. 2014. 《해체신서》. 김성수 역. 파주: 한길사.

이예안. 2016.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광의지언(狂醫之言).” 제 17호: 223-243.

이종각. 2013. 《일본 난학의 개척자 스기타 겐파쿠》. 서울: 서해문집.

여인석, 황상인. 1994.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 과정.” <의사학> 제 3권 제 2호: 218-229.

真柳誠. 2010.「日韓越の医学と中国医書」. 『日本医史学雑誌』 56巻2: 151-159.

Leslie, C., Young, A.,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Meeting 1985 : Washington, D.C.). 1992. *Paths to Asian Medical Knowledge* / Edited by Charles Leslie and Allan Young.

Beukers, & Beukers, H. 1991. *Red-hair Medicine : Dutch-japanese Medical Relations* / Edited by H. Beukers... [et Al.].

3장

메이지 유신 전야 글로버와 기도의 만남
_글로버 가든

김대영
고려대학교

I. 머리말

스코틀랜드 출신의 상인인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Thomas Blake Glover)는 매디슨 상회의 직원으로 상하이에서 근무하다 일본으로 옮겨 간 인물입니다. 1863년 나가사키항이 보이는 미나미야마테 지역에 대저택을 지어 살았을 정도로 출세했고,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훈2등 욱일중광장을 수훈받는 등 일본 정부로부터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고 1911년 도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목조 서양식 건물이 현존해 있는 글로버의 저택은 현재 나가사키 시에서 글로버공원 [구로바엔] 및 기념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9세기 일본은 쇄국 정책으로 고립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페리의 흑선 출몰 이후 나가사키를 개항하며 막부는 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며 개국을 결단합니다. 외국 상인들은 나가사키에 거류지를 형성하며 무역을

이어갔고 글로버 역시 차 위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 천황은 실권이 없었고, 도쿠가와 가의 쇼군이 실권을 쥐었지만 전국은 '한'으로 나눠져 있어 각 지방에서 다이묘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슈, 사쓰마와 같은 서남쪽의 가문들은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다 시모노세키 전투에서 패한 이후 변두리에서 웅거하고 있었는데, 해외와 밀무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쇼군이 무역을 독점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일본 각지에서는 막부가 외국과 수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천황을 옹립하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손노조이라는 표어가 확산되며 갈등의 불씨는 커져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구 열강과 사쓰마, 조슈는 1862년에 각자 부딪히게 됩니다. 1862년 9월에는 요코하마 인근에서 영국 상인들이 사쓰마의 다이묘 행렬과 맞닥뜨리며 충돌이 발생하는 나마무기 사건과 조슈의 양이전쟁 이후 구미 각국은 보복 공격에 나섭니다. 1863년 7월 2일 영국 함대는 암스트롱포를 장착한 7척의 함선을 동원하여 가고시마를 공격해 다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기고 다음해 8월 5일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4개국 연합함대가 조슈 해안에 나타나 조슈의 지상 포대와 요새를 포격합니다. 이는 조슈와 사쓰마가 서구 군사력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대외 정책과 군사 정책 추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주목한 글로버는 무기 교역에

뛰어들어 총포를 팔기 시작하고 사쓰마 측의 인물과 접촉하여 1864년에는 산업 근대화, 외국인 전문가 고용 및 서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 유학생 파견을 권하는 제안서를 보내는 데 이릅니다. 1863년 글로버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등 조슈 번의 젊은 사무라이 다섯 명의 영국 밀항을 도왔고, 1865년 고다이 도모아쓰를 비롯한 사쓰마 번 청년 열다섯 명의 영국행도 주선했습니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물을 배우고 귀국해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65년 조슈는 서양식 개편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식 무기를 구하려고 했지만 대립하던 막부는 외국과 조슈 번의 밀무역을 금지하도록 하여 4국 대표의 공동각서를 받아냅니다. 막부의 조슈 정벌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가쓰라 고고로 [기도 다카요시]는 밀무역 금지에 대한 대책을 글로버에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쓰마의 명의로 대신 선박과 소총을 구입하는 방안이 등장하고 추후 1866년 삿초동맹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신전쟁이 발발하며 구질서는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며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게 될 발판을 마련합니다.

글로버는 조슈에게 무기를 왜 판매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Sidney DeVere Brown은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낭만주의에 고취한 글로버가 자신을 정치적 모험가로 인식하여 도쿠가와 막부의 가장 큰 적수를 자칭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기도 다카요시나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젊은 조슈 지사들에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젊은 영국 통역가들 (Ernest Satow, Algernon B. Mitford) 역시 나가사키 안팎을 돌아다니며 천황을 지지했는데 이들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둘째로는 막부를 지지한 프랑스에 반해 스코틀랜드인으로서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해 영국 제국주의의 첨병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Gordon Daniels가 지적했듯이, 영국은 개혁주의자들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완만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조건 하에서만 지지를 표하며 Harry Parkes 공사의 1865년 중립 노선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으나 글로버는 이 노선을 초월하여 조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회주의와 실용주의 노선 하에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이기에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활동의 일환이라는 해석입니다. 글로버는 조슈 그리고 바쿠후에게도 무기를 파는 면모를 보여줬기에, 전쟁 준비를 위해 무기와 상선을 구입하고자 한 조슈와 접선하며 1865년 10월 15일 기도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II. 기도와 글로버의 젊은 나날 (~1865)

글로버는 1859년 상하이로부터 21살 때 매디슨 상회의 점원으로

나가사키에 도착합니다. 외국인 거류지가 구획되어 초반에 중국의 아편 무역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자딘매디슨 상회(Jardine Matheson Holdings Limited)에서 진로를 시작한 것입니다. 멘토인 Mackenzie만 하더라도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불법 무역에 종사하다 일본으로 Jardine에 의해 파견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중국에서 일본으로 무역 활동을 옮긴 일은 매우 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글로버가 막번에 무기를 판매하는 면모를 보여주며 거상으로 부상하는 자취를 관찰하면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9년 7월 4일에 개항한 나가사키는 4만 명 인구의 소도시로, 250에서 3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했습니다. 에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막부의 정치적 권위가 미치지 않았고 나가사키는 서양으로의 창의 역할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느슨하게 통제되던 나가사키를 가장 잘 활용한 것은 글로버로, 면직물을 영국에서 수입하고 차와 쌀을 각종 번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1862년 자기의 이름이 달린 회사를 출범해 글로버 상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해 9월에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가나가와/나마무기 사건이 발발하여 영국인 찰스 리처드슨이 살해되며 영국의 이목이 사쓰마에 집중되며 19세기의 영일관계를 장식합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막부의 쇼군과 사쓰마 가문에 책임자의 처형과 1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 시기에 글로버는 24살의 어린 나이에 영국과 대치하고 있던 사쓰마와

교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리처드슨의 죽음 1년 후, 1863년 7월에 배상금과 사죄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을 받아내지 못한 영국은 해군을 투입해 사쓰마 가문의 중심지인 일본 남부의 카고시마에 포격을 가합니다. 비록 도시의 대피령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종이와 목재로 이루어진 도시는 불타면서 사쓰마 번은 근대화의 위력을 느끼고 개화를 꾀합니다. 당시 글로버는 1863년에 사쓰마 및 사쓰마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타 번 그리고 막부의 쇼군에게도 총포를 팔게 됩니다. 특히 1864년과 1867년 사이 글로버의 교역은 정점을 찍으며 일본 내 각종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막부 세력과 벌족들 간 싸움에서 필요한 군함과 총, 은 등의 금괴를 공급하였습니다. 1864년 9월경 일본에서 고향 애버딘(Aberdeen)에서 건조된 <사쓰마> 호를 시작으로 선박 판매를 시작한 글로버는 4월에는 사쓰마 번으로부터 미니에식 소총 3,000정도 구입 요청을 받았으며 이후 글로버 상회를 통해 나가사키에 입수된 소총은 약 17만 193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1860년과 1867년 사이의 무기 거래로 인해 25살 때 사쓰마 번의 주요한 브로커가 되어 이후 사쓰마와 조슈의 삿쵸동맹(薩長同盟)의 주요 브로커 역할도 맡게 됩니다.

기도 고인, 가쓰라 고고로라고도 불리는 기도 다카요시는 메이지 유신의 3걸 중 하나로 천황을 받들어 외국을 격퇴하는 목표로 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864년 6월 5일 저녁,

교토의 이케다 여관에서 존왕양이파 지사 20여 명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교토 치안부대 신센구미가 급습하며 이들을 일망타진하는 이른바 '이케다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존왕양이의 지도자 기도 다카요시도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 도착했으나 참석들이 보이지 않자 이웃에 있는 쓰시마 저택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낸 덕에 목숨을 건집니다. 이로 인해 뺑소니의 명수라고도 불리게 되는 기도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카스기 신사쿠가 번정을 다시 장악한 뒤에야 조슈로 귀환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격분한 조슈의 존왕양이파들은 천 수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영주의 억울한 죄를 천황에게 호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교토로 출동합니다. 교토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병사를 이끌고 교토로 쳐들어갔다가 사쓰마, 아이즈, 에치젠, 구아나 연합군에게 패하며 황궁 앞에서 총격전까지 벌였던 이 사건은 금문의 전투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조슈는 조정의 적으로 낙인찍히며 최악의 위기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8월에는 시모노세키 연안에 열강 4국 연합 함대 17척이 정박하면서 대포 288문, 병력 약 5천 명의 대부대가 8월 5일 포격을 개시하여 조슈번의 포대를 침묵시킨 뒤 약 2천 명의 병사가 상륙하여 포대를 점령하고 조슈의 기병대와 '시모노세키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1863년 5월 10일 조슈의 존왕양이파 지도자 구사카 겐즈이가 군함 두 척을 동원하여 시모노세키 해협에서 폭풍우를 피해 피난 중이던 미국 상선을 기습적으로

포격하고, 그 뒤에도 프랑스, 네덜란드의 군함에 포격하는 양이 무력행동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4일 간의 전투에서 조슈번은 15명의 전사자를 내고 완패했고, 관문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의 안전 보장과 식수 및 연료 제공, 그리고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모노세키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함선이 파괴되어 조슈는 실질적인 해군력을 상실합니다. 이 강화 회담에 조슈 측 통역으로 활약한 인물은 영국 유학 중 급히 귀국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는 1863년에 글로버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공부한 '조슈 파이브' 중 하나였습니다.

조슈 번은 본래 외세 배척을 주창했으나 패배를 계기로 '존왕양이'에서 '존왕도막'으로, 쇄국에서 개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1864-65년을 기점으로 조슈는 사쓰마와 마찬가지로 개항을 통한 교역의 추진, 군사력의 강화와 막부와의 대립적 자세라는 공통된 입장을 갖추게 됩니다. 1865년 조슈 번에서는 다카스기 신사쿠가 구상한 할거정책이 추진되며 4월 26일에 '가쓰라 고고로'의 이름으로 기도는 복귀하여 번주의 측근으로서 민정과 군정을 총괄합니다. 보수 세력과 연합하여 막부에 대항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야마구치에 제철소를 건설하고 제납, 제철, 조선 등을 민간에 불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산업 정책도 병행합니다. 육군의 서구식 개혁도 추진하면서 번 재정의 여유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적 위기 상황에서 막부의 해군력에

대항하기에는 무리였기에 함선 구입과 해군 증강을 꾀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패전의 경험을 통해 조슈 번은 우수한 무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지만 막부가 장악하고 있는 개항장에서 무기를 구입할 수는 없었고, 밀무역에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서구 열국 역시 일본의 합법정부로서 승인된 막부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인 <개항되지 않은 항구에서는 무역을 금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지지를 표명하여 영국정부도 막부가 요구한 각서의 작성에 참여합니다. 윈체스터 영사(대리공사)는, "나가사키에 있는 한두 개의 영국상회가 시모노세키에서 적극적으로 무역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영국국민에게 불법무역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공시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글로버 상회도 포함된다고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막부가 외부에서 공인된 일본의 합법적인 정부였으며 외국의 영사들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영국은 막부에 적대적인 번 세력의 대의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주일 영국 공사 러더퍼드 올콕의 후임으로 해리 파크스가 6월 27일 나가사키에 도착합니다. 글로버는 항구에서 파크스와의 저녁 식사 당시 서남 번의 다이묘에 일본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파크스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다음날 글로버는 '일본 정부'를 위해 암스트롱 총 35정과 탄약

(183,847달러어치의 총기)을 주문하는 편지를 뉴캐슬로 보내 4만 달러의 수익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쇼군과의 거래에서 얻은 수익 중 3만 달러는 선불로 동월 6월에 사쓰마에 건네줍니다(이후에도 글로버는 자딘 매디슨 상회로부터 '일본 투자'를 위한 자금을 선불받아 영국에 있는 사쓰마 19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도는 글로버에 접근하게 됩니다.

III. 기도와 글로버의 첫 만남 (1865년)

1865년 당시 글로버가 친분에 있던 조슈 사무라이(이토와 이노우에)는 나가사키에 오기 전 사쓰마 관저에 피신하고 있었으며, 무기류와 증기선을 사러 올 때에는 사쓰마 사무라이로 변장하고 방문했습니다. 이 당시 글로버는 아오키, 기도와 같은 조슈 반군 지도자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관리 중 일부가 영국 영사관에 이를 제보했고 글로버는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나가사키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글로버는 '개항과 서구 문명을 향해 일본을 이끌고자 했던' 기도에 호감을 느꼈고, 친쇼군 사무라이에 쫓기며 도움을 요청하던 기도를 자신의 배에 태워 항해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추궁을 받자 배를 수리해야 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당시 글로버는 쇼군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암스트롱 총포를 쇼군에 팔아 4만 달러의 이익을 거두었지만 3만 달러를 사쓰마에 빌려주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편지를 통한 연락 끝에, 글로버는 나가사키로부터 총기를 직접 보급하고자 했으며 1865년 10월 15일 시모노세키에 이토 히로부미를 따라가 기도와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밀무역 금지에 대한 대책을 글로버에게 묻자, “막부가 영국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부탁을 한 것 같으며 그 진의는 결국 조슈번을 방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어쨌든 막부는 조약을 체결한 상대이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 때문에 조슈번은 이후 무기를 구할 수단이 전혀 없어졌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어서 “조슈번주의 선박으로 상하이에 가서 구입한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만약 배가 없다면 상하이에 한두 사람이 밀항하여 기선을 구입하고 그 배에 소총을 몰래 실은 다음 수송하는 일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협력해주겠다”는 방책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이 무렵의 글로버가 매우 침통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글로버도 밀무역 금지로 거액을 벌 수 있는 대상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 역시 이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 무기상들이 잉여 총포를 처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시점으로, 상하이 항구에 쌓여 있었습니다. 료마는 이 정보를 나가사키를 통해 입수하고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의를 얻은 후 야마구치의 온천장으로 가 기도에게 사쓰마가 조슈의

무기거래를 도와준다는 제안을 합니다. 당시 사쓰마 번의 실력자인 사이고 다카모리와 조슈의 기도 다카요시 간 회담이 사이고의 갑작스러운 상경으로 무산되자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을 근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 사이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료마는 기도를 5월에 만나 설득합니다. 조슈 번의 다카스기와 이노우에를 만나서는 “막부군에 대항하려면 총과 기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 상인들은 조슈 번에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니 사쓰마 번의 명의로 대신 구입해달라고 부탁해보라. 구입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사쓰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동해 음력 윤 5월에 사카모토 료마와 나카오카 신타로 두 사람이 잇달아 시모노세키를 방문해 두 사람(이노우에 몬타와 이토 슌스케)과 상담해 조슈번이 사쓰마번의 명의를 빌려 기선을 사들이는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소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때 아오키 군페이가 소총 천 정을 구입하라는 명을 받고 이미 나가사키에 가 있었기 때문인데 나가사키에서 막부 관리들의 방해로 소총 구입에 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무역단체 가메야마 모임을 운영하던 료마는 거상 글로버에게 이를 의뢰하는데, 조정의 적인 조슈나 일개 낭인인 료마가 거래 상대라면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에 대량의 무기를 구입한 바 있는

사쓰마 명의라면 괜찮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준비 교섭 끝에 조슈 번 지도자들은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끄는 무기구매단을 7월 나가사키에 파견하고 이들은 사쓰마 번사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글로버와의 교섭이 조슈 번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글로버의 도움으로 1863년 영국에 밀항한 '조슈 파이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카오루가 사카모토 료마의 중개로 고마쓰 다테와키와 협의하여 사쓰마의 명의를 빌려 (구식) 게베르식 소총 3,000정과 (최신식) 미니에식 소총 4,300정을 약 9만 2400냥에 구입하기로 계약합니다. 당시 막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번이 도입하고 있던 게벨총은 재래식 전장총으로, 총알을 총구 앞에서 막대기로 밀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1850년대에는 소총의 제작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총과 같은 장전 방식인 미니에총이 대량으로 보급되어 크림전쟁에서는 영국군이 처음 사용해 러시아군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작이 간편하여 사격 속도가 빠르고 명중률이 높아 게벨총 10정과 같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사거리의 경우 (막부군의 주력 무기였던) 게벨총은 100미터에 불과했으나 미니에총은 300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토는 사쓰마 번 무사인 것처럼 흉내를 내며 사쓰마 소속 증기선으로 조슈의 미타지리 항구에 총포를 대량으로 반입하는 등 소총을 시모노세키까지 나르고, 나가사키에 머물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군함 함장, 그리고 글로버와 만나 정보를 모아 기도에게 보고합니다.

이 무기거래를 통하여 사쓰마에 대한 조슈의 신뢰는 회복됩니다. 동시에 료마를 지원했던 사쓰마 번 사람들이 그에게 선박 한 척을 맡겨 가스 린타로 밑에서 습득한 항해 지식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조직의 책임자라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 조직에 '샤추'(회사)라는 이름을 붙이나 이후 이는 '해상 지원 부대'라는 의미를 가진 '가이엔타이'로 개칭됩니다. 작은 상회를 연상시키는 이 명칭은 사쓰마 번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막부령 항구 도시에서 서양 국가들과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료마는 외국 상인들과의 교섭 업무 대부분을 맡게 되었고, 상회는 우선 막부의 봉쇄 조치가 내려진 조슈 번의 외국 무기 입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사키에 파견된 조슈 번 대표는 엄격한 감시 때문에 외국 상인들과 거래를 할 수 없었지만 료마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승인을 받아 그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쓰마 번의 명의를 사용해서 수입한 미니에 총 4,300정이 8월에 조슈번에 도착하고, 증기선 구입도 실현을 향해 나아갑니다. 조슈 번주 모리 다카치카는 사쓰마 번의 히사미스 부자에게 서한을 보내 사쓰마 번과의 대립은 "만단, 오해가 풀렸다."라고 전하고 군함 구입도 공식적으로 의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865년 12월 4일(게이오 원년 10월)에는 조슈 번은 사쓰마의

중개로 토마스 글로버를 통해 증기군함 <잇츄마루/오초마루>(the Union호, 사쓰마에서는 사쿠라지지마루: 70마력 205톤)을 37,500냥의 비용으로 구매하게 되고 사쓰마의 군사적 지원을 계기로 두 번은 반막부 비밀동맹까지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조슈가 사쓰마에 일방적으로 신세를 지게 되어 발언권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료마는 그해 10월, 조슈 번의 곡물을 사쓰마 번의 군량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사쓰마가 있던 가고시마는 쌀이 부족한 지역으로 교토에 주둔한 사쓰마 번 병력에 대한 병량 공급처를 확보하는 문제로 사이고가 고심한 것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료마의 제안을 기도가 수락하면서 1865년 가을에는 사쓰마와 조슈 간의 통상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마스 글로버로부터 구입한 유니언호는 시모노세키 해협의 해전에 참전한 이후 조슈 번의 통제 하에 완전히 넘어가고 오초마루라는 이름으로 바뀐 후 조슈 번 해군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는 사쓰마 측과의 협력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물이었지만 료마의 상회 입장에서는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별도로 사쓰마 번을 경유해 구입한 스쿠너형 범선<와일드웨이브>호는 유니언호에 이어 상회가 구입한 두 번째 선박으로, 가고시마로 유니언호와 함께 첫 항해에 나섰지만 격랑이 두 척의 배를 덮치자 증기 기관을 갖지 못한 스쿠너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시오야사키에서 풍랑을 만나 잃게 된 12명의 동료 중에는 료마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이케 구라타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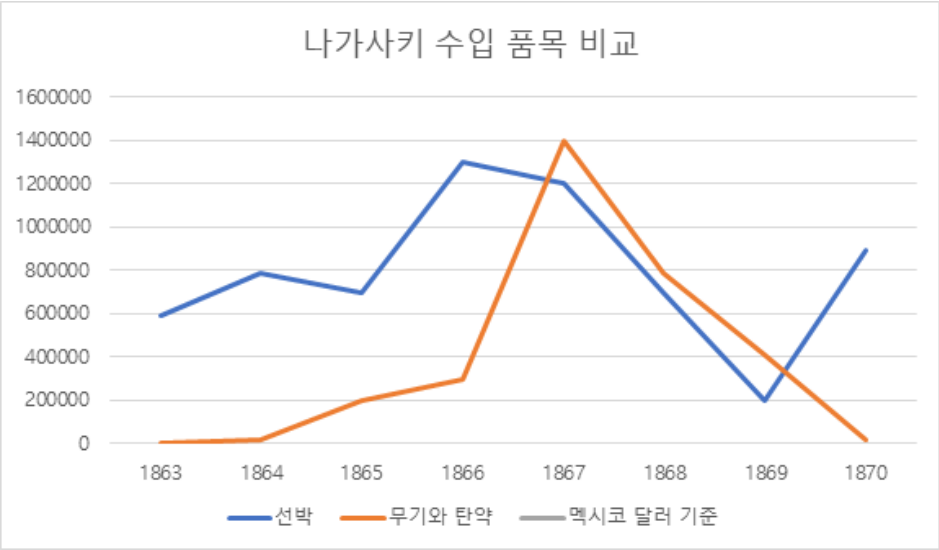
IV. **삿쵸 동맹과 무기 거래** (1866~1867)

1866년 3월 7일 조슈 번을 대표하는 기도,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중재자 료마 사카모토가 삿쵸동맹을 성사시키며 6월에 쇼군의 군대는 조슈를 공격(막부군의 2차 조슈 정벌)하지만 격퇴당합니다. 막부가 동원한 제번의 병력은 약 10만 명으로 조슈 번 병력의 약 10배에 달했지만 유럽 전술에 훈련받고 글로버의 우수한 총기 덕분에 쇼군의 군대에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삿쵸밀약에 따라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가진 사쓰마군이 막부군에 가담하지 않았고, 다카스기 신사쿠가 구입한 군함을 이끌고 막부 함대를 야간기습해 승리한 것이 승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글로버가 제공한 증기선 Union 역시 7월 28일 해전에 참전합니다. 이 전쟁 초기 이토는 이시카와 방면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번 정부로부터 돌아와 중국으로 가서 군함을 사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토는 나가사키로 가서 영국 상인 글로버의 도움을 받아 상하이로 건너가 군함 2척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고 8월 말 귀국합니다. 군함은 전쟁이 끝난 10월에 도착했으나 그 후 부대 수송 등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기존에 사쓰마에 냉담했던 영국은 입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고, 사쓰마 가문의 수장인 시마즈는 글로버를 통해 파크스 영국 공사에게 카고시마로 초청합니다. 초대받은 파크스와 글로버는 저녁 만찬에서 영국 정부가 더 이상 쇼군을 지지하지

않고 일본의 내전에서 막부의 편을 들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국은 사쓰마, 시모노세키와의 전쟁을 거쳐 사쓰마와 조슈를 비롯한 번과 만남으로써 정치와 무역 참가를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게 되고, 특히 사쓰마와 조슈에 접근한 것은 영국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서기관 사토(Ernest Satow)와 나가사키 영사 가워 등이었습니다. 사토는 회고록 <한 외교관이 본 메이지 유신>(A Diplomat In Japan)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테 무네나리나 사이고 다카모리 등 서남 유력 번의 다이묘와 번사와도 친밀하게 교류하여 다이묘 세력을 포함하는 일본의 정체 변혁을 기록한 <영국책론>을 공표했고 공사 파크스도 이를 묵인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 조약 칙허로부터 개세약서 체결이라고 하는 1866년경의 막부 외교에 대해서 파크스는 “쇼군은 우리에게 성심성의껏 행동하고 있다. 다이묘보다 쇼군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다이묘 간 어쩔 수 없는 질투심과 불화를 간파하고 본국 외무부에 보고합니다. 또 사쓰마 번이 종종 조약 칙허를 방해하고 외교 문제를 이용하여 쇼군을 공격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1866년 조슈 제2차 정벌 이후 서구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1867년에 들어 일본 국내 긴장이 고조되고 전운이 돌자 화기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수입품이 됩니다. 이는 영국 공식 자료로 인해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영국 외무부, 일본 나가사키 영사관, 1859-1870 기록 Shinya Sugiyama, “Thomas B. Glover: A British Merchant in Japan, 1861-70,” *Business History* 26, no. 2 (1984):120

영국 영사관의 무역 보고서에는 1865-8년 나가사키에서만 17만 정 이상의 총기가 수입되었으며 이는 2,400만 달러의 규모로 50만 파운드 상당어치라고 합니다.

1866년에서 1867년까지 나가사키에서의 공식 무기 교역의 대부분 (85퍼센트)은 영국 혹은 네덜란드/독일 상인들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 기록을 통해 33,875 소규모 화기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는 나가사키 수입액의 약 40퍼센트에

1863-1869년도 항구당 소형 무기 수입 규모

연도	요코하마	나가사키	고베	일본
1863	5,817			5,817
1864	11,568			11,568
1865	56,843	25,850		82,693
1866	53,000 (추정)	21,620		74,620
1867	102,333	65,367		167,700
1868	106,036	36,514		142,550
1869	58,613	19,163	7,120	84,896
총합	394,210	168,514	7,120	569,844

출처: Hoya Toru, *Boshin senso* [The Boshin War] (Tokyo: Yoshikawa Kobunkan, 2007), p.99.

해당하는 수치로 당대 국제무역을 양호하게 문서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1위인 글로버와 2위 니플러(Kniffler)는 점유율 과반을 누리면서 상위 5개의 상인 가문이 총포의 72퍼센트를 차지하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구분 시, 글로버와 영국 상인들은 53퍼센트를 차지하며 선두에 섰고 니플러를 비롯한 독일 상인들(프러시아와 함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은 32퍼센트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 가문 로우레이로(Loureiro)는 1,780정의 소규모

화기를 판매하며 5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 상인들을 합한 교역량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프랑스' 상인은 William F. Gaymans로 스위스 국적자임을 내세우고 프랑스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네덜란드 태생이며 독일에서 죽은 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서남부 일본으로 흘러들어오는 소규모 화기의 95퍼센트 이상은 유럽 상인들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	국적	1866 (1/2)	1867	합
1	글로버(Glover)	British	685	12,140	12,825
2	Kniffler	German	3,100	1,901	5,001
3	Alt	British	250	2,829	3,079
4	Hughes	British		1,810	1,810
5	Loureiro	Portuguese		1,780	1,780
6	Lehmann	German	926	526	1,452
7	Bauduin	Dutch	1,000	300	1,300
8	Gaymans	French		1,120	1,120
9	French	USA	500	366	866
10	Bohlens	German	268	500	768

IV. **메이지유신과 글로버의 쇠락** (1868년)

1864년과 1867년 사이, 글로버는 나가사키에서만 20척의 배를 팔아 117만 달러의 이익을 거둡니다. 하지만 메이지 원년, 1868년에 쇼군이 실권을 천황에 넘겨주면서 전쟁 상황이 종식되자 더 이상 군함과 총포로 수익을 거둘 길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글로버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첫 신군함, Ho Sho Maru와 Jho Sho Maru (Ryojomaru) 건축은 1868년에 이루어지면서 1860년대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일본의 첫 근대적인 탄광을 운영하지만 수익을 거두기 전 1870년 파산하여 소유권을 싼값에 처분해야 하고 글로버 상회도 잃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후 미쓰비시로 발전하게 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기린 맥주 주식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일본 맥주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바쿠후 말기에 바쿠후와 신정부 세력이 대결하면서 '도바-후시미 전투'에서 5천 명의 신정부군은 1만 5천명의 바쿠후군을 격퇴하는데, 이는 대포와 함께 사용한 영국 직수입 화약의 정밀 사격으로 적군에 훨씬 큰 피해를 주면서 3배의 인원 차이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때 사쓰마 부대가 소지한, 영국제를 능가하는 미국제 무기인 스펜서 총 1만 6,015자루는 글로버가 조달한 것입니다. 스펜서 총은 레버 액션 라이플(lever action rifle)로, 방아쇠울과 연결된 레버를 앞으로 젖혀 탄피를 배출하고 원

위치시켜 장전하는 수동 연사식 소총으로, 빠른 속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조정은 바쿠후를 적으로 공식 선포하고 서일본 지역 대부분 번들은 신정부에 굴복했습니다. 에도를 장악하고, 항전파를 격퇴한 결과 다이묘들이 지배하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고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면서 보신전쟁은 신정부군의 승리로 끝을 맞이합니다.

기도는 메이지 원년인 1868년 4월부터 1877년 5월 타계 전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고, <기도 다카요시 일기>는 도쿄대학 출판부에서 영역본으로도 간행되는 등 메이지 시기 초기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기도는 1868년 5월 12일, 오사카에서 메이지 천황을 접견하러 갔을 당시 글로버와 만나 지난 3년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고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굉장한 친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헤어지는 자리에서 글로버는 권총을 기도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1866년 막부 군대에 조슈 군대가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한 인물의 조치로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 6월 1일 조슈 가문의 후예가 귀환할 수 있도록 군함을 글로버 상회로부터 빌리는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기도 다카요시, 혹은 기도 고인은 분명히 천황 그리고 나라를 위해 열정이 넘치던 인물이라는 것을 일기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1868년 8월 6일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메이지

유신의 성공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들이 다수 희생하였기에 이룰 수 있었으며 친구 중 수십 명이 제국을 위해 순교한 만큼 자신도 몸을 다 바쳐야 한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에 대해 빚을 지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여 구천을 떠도는 이들의 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연초 야마구치에서 자신이 제국 정부의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고향인 조슈를 내팽개치고 주군인 다이묘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돌았다고 한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것은 맞지만, 쓰러진 사무라이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그런 것이며 이를 통해 다이묘에 충성을 다한다고 역설하는 동시에 고향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오해를 풀지 못한 것을 매우 슬피 여기고 있습니다. 1868년 8월 12일에는 존왕양이의 거사를 진행한 지사들 중 오로지 열 중 두셋만이 살아남은 것,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정에 빠져든다고 기록합니다.

V. 맺음말

글로버는 무기 교역을 주도한 유일한 서구 상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타고 자신과 동년배인 젊은 타국의 열정적인

지사들과 교류하며 손익을 넘나드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며 사석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가장 큰 반역자라고 할만큼 역할에 몰입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을 뒤집어 엎게 되는 사쓰마-조슈 동맹 형성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도 다카요시라는 조슈의 인사와 친분을 쌓는데, 추측하건대 나마무기 사건과 사쓰에이 전쟁, 그리고 양이 전쟁과 시모노세키 전쟁 등을 목격하며 서양 무기의 위력을 느낀 것과 더불어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인해 막부에 적대적이라는 공통된 개인적 경험을 지닌 것이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무기 교섭 과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버는 영국과 막부의 협약으로 인해 밀무역은 큰 리스크를 갖추고 있었고, 수익이 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도는 막부의 조슈 정벌을 앞두고 군제 개혁 추진 상황에서 무기는 사활을 가르는 일이기에 절박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최대한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쓰마를 통해 위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쓰마와 깊은 관계를 맺은 글로버가 기도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슈와 사쓰마의 협력을 통해 무역망 확장하고자 했던 상인 글로버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글로버 특성상 사업의 여러 방면에 진출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차원을 계속해서 개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던

나머지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한 사업에 집중 못 해서 추후 몰락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던 점을 고려할 시, 글로버는 조슈와 밀거래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기도가 글로버와 만나기까지에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으며, 만난 후 무기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까지에 있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버의 무기 중개 덕분에 조슈 번은 1865년의 군정 개혁으로 전번일치 군제를 성공적으로 확립하면서 국민개병제에 의한 군대를 보유한 최초의 번이 되고, 막부군을 격파하면서 전투력을 입증합니다. 이들은 개개인의 노력과 국제무역이 얽히고설켜 결과물을 도출해낸 반면, 반대로 막부의 경우 오히려 자본과 물자가 풍부하며 심지어 서구 열강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이점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일본 열도의 패권을 사쓰마와 조슈 등에 넘겨주고 맙니다. 19세기에도 이토록 사람 간 네트워크가 중층적으로 얽혀 전개되었는데, 정보혁명과 세계화가 심화된 21세기의 국제질서를 곱씹어봄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The Diary of Kido Takayoshi. Vol.1: 1868-1871, Translated by Sidney Brown and Akiko Hirota.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5.

The diaries and letters of Sir Ernest Mason Satow (1843-1929), a scholar-diplomat in East Asia / selected, edited, and annotated by Ian C. Ruxton.

단행본

박영준 지음. 2015.《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 서울: 그물.

박훈 지음. 2020.《메이지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 : 그들은 왜 칼 대신 책을 들었나》. 파주: 21세기북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지음. 2012.《한국의 국제정치학도, 일본 근대화를 만나다 : 서울대생들의 규슈와 도쿄이야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성회엽 지음. 2016.《조용한 혁명》. 서울: 소명출판.

이광훈 지음. 2016.《(조선을 탐한) 사무라이 : 상투 잡은 선비, 상투 자른 사무라이》. 서울: for book.

이종각 지음. 2010.《이토 히로부미: 원흉과 원훈의 두 얼굴》. 서울: 동아일보사.

조용준 지음. 2018.《메이지 유신이 조선에 묻다: 일본이 감추고 싶은 비밀들》. 서울: 도도.

하영선, 김상배 엮음. 2012.《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마리우스 B. 잰슨 지음. 2014.《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손일, 이동민 옮김. 서울: 푸른길.

이노우에 가스오 지음. 2013.《막말 유신》. 이원우 옮김. 서울: 어문학사.

이시이 다카시 지음. 2008.《메이지유신의 무대 뒤》. 김영작 옮김. 서울: 일조각.

Craig, Albert M. 2000. *Choshu in the Meiji Restoration* Lanham, Md.: Lexington Books.

Daniels, Gordon. 1996. *Sir Harry Parkes, British representative in Japan, 1865-83* .

Richmond, Surrey : Japan Library.

Fuess, Harald. 2020. *The Meiji restoration: Japan as a global n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Kay, Alexander. 1997. *Scottish samurai: Thomas Blake Glover 1838-1911*. Edinburgh: Canongate.

Spence, Alan. 2006. *The pure land.* Edinburgh: Canongate U.S.

웹페이지

글로버 가든 홈페이지: http://www.glover-garden.jp

나가사키시 공식 관광 사이트: https://travel.at-nagasaki.jp/ko/what-to-see/11/

미츠비시 그룹 홈페이지: https://www.mitsubishi.com

애버딘 선박 홈페이지: http://www.aberdeenships.com

https://www.undiscoveredscotland.co.uk/usbiography/g/thomasblakeglover.html

BBC Documentary. 2011. “Thomas Blake Glover.” December 13.

NAGASAKI IN THE MEIJI RESTORATION: CHOSHU LOYALISTS AND BRITISH ARMS MERCHANTS (Sidney DeVere Brown) 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_staff/earns/meiji.html

4장

흙을 통해 동서양의 삶을 빚어내다
버나드 리치의 '동서양의 결혼'
_규슈도자문화관

강우승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문화를 둘러싼 담론은 급격한 세계화 및 지구화의 흐름에 따라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 및 문화권 사이의 만남은 안보와 경제 분야를 벗어나 문화적인 무대에서도 활발해지고 있고,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문화가 가진 권력(power)과 영향력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 학파의 대표주자인 조지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는 기존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 국가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매력, 또는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문화 무대는 안보, 경제라는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무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ISIS 등 특정한 문화권과 종교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의 테러행위는 문화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화갈등은 기존의 안보개념에 한계를 드러내며, 안보화(securitization) 담론의 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즉 문화 무대의 등장은 국제정치학 분야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문화라는 무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학자들이 문화의 무대에 주목하고 있지만, 문화라는 새로운 무대의 등장으로 더욱 복합적으로 변해가는 세계무대의 현상을 올바르게 분석해내기란 쉽지 않다. 특정한 문화는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에드워드 사이드(2003)의 오리엔탈리즘 주장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탈식민주의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은 현재의 국제정치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topos)와 주체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서구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관점의 보편화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와 보편적 세계규범, 또는 체제(system)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인권 담론에서 문화적 상대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인권규범과

특정한 문화적 전통 속에서 전래되어 오는 반인권적 가치관 내지 행태 사이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과 실천의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아시아지역의 FTA가 지니는 독특한 상향/하향 네트워크의 동학에 대한 이승주(2012)의 정치경제적 분석은 문화적 요인이 세계경제체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각각의 문화 속에서 고유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행위자와 전세계를 단위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체제(system)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 사이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들은 현재 가장 시의성 있는 화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차리아와 부잔(2019)이 주장하는 지구 국제정치학(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등장의 필요성은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담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기반에 의해 서로 다른 메타이론적 입장을 가진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다원적 보편주의(Pluralistic universalism)가 변화하는 세계무대를 더욱 적실히 설명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주장한다. 다원적 보편주의란 다양한 존재론과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입장들의 통합을 통해 전지구적인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보편적인 국제정치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들의 주장이 현재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이전에는 전혀 대두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의식인 것일까?

영국의 도예가 버나드 리치(Bernard Howell Leach, 1887-1979)는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양과, 유럽 중심의 서양 사이의 문화적 만남에 대해 고민하였던 인물이다. 현재의 논의에 견주어 보았을 때 선구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의 문화결합에 대한 주장들이 현재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다. 리치의 노력은 예술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은 리치가 일본으로 간 이유는 동양 문화를 이해하고자 함이었다. 일본에서 도예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한편, 그는 도자기라는 예술을 통해 동서양의 경계 넘어, 인류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모색하고자 했다. 리치는 20세기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의 만남이 심화되는 국제정치적 변화 속에서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인류 전체의 문화 및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삶의 양식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특수한 지위 및 그에 부여될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동서양의 결합(the Marriage of East and West)’이라는 문구는 리치가 자신의 생애 속에서 탐구했던 주된 테마를 함축하고 있다”(Suzuki, 2004). 그는 동양과 서양이 가진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들 사이의 바람직한 결합 방식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러한 그의 고민들은 그의 작품과 저술들 속에 투영되어 있다. 즉 리치는 도자기라는 오브제를 통해

인류 문화의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꿈꾸고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본 글에서는 버나드 리치의 예술가로서의 삶과 그의 예술작품을 살펴보며, 그가 이해한 동양과 서양이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문화 사이의 어떠한 만남을 그리고 있었는지를 엿보고자 한다. 그리고 리치의 사상이 21세기 문화 담론을 이해함에 있어 제공해줄 수 있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양의 탐구자, 그리고 도예가 리치

리치의 동양과의 만남은 1910년 일본으로의 여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87년 홍콩에서 태어나 일본 및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던 리치에게 동양은 서양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등한 세계였다. 라프카디오 헌(Lafcadio Hearn, 1850-1904)의 책을 통해 일본의 삶과 문화를 접한 리치는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동양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10년 일본으로 향하게 된다.

리치가 동양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이들은 일본의 젊은 지식인 집단인 시라카바 파(白樺)였다. 영국에서 드로잉과 동판화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았던 리치는 1910년, 도쿄의 한 갤러리 전시에서 자신의 에칭

판화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자 하였는데, 이곳에서 리치는 시라카바파와의 첫 만남을 갖게 된다. 시라카바파는 서양의 철학과 예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젊은 지식인 집단으로써, 이들은 잡지 〈시라카바〉를 발간하고, 서양작품들, 특히 후기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서양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그룹이었다. 서양을 알고자 하는 이들과 동양을 알고자 하는 리치와의 만남이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은 필연적이었다. 리치는 이들과 함께 예술문화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동양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나갔다. 이후 리치는 시라카바 파와 함께 예술문화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이들과의 지적 교류를 통해 동양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갔다. 그 중에서도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1961)와의 교류는 리치가 동양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민예운동의 지도자 중 한나로, 종교적 신비주의와 미학을 결합한 독특한 사상을 전개한 지식인이다. 그는 선종 불교를 기반으로 한 불교미학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예술관의 형성 과정에서 리치와 상호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았으며, 리치 또한 이러한 야나기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도예가로서의 훈련을 지속하는 한편, 리치는 동양 문화 탐구의 일환으로서 예술과 교육, 철학에 대해 깊고 넓은 인식을 가진 지도자를 구하고자 했고,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저술가

알프레드 웨스트하프(Alfred Westharp)의 글을 접하게 되며 큰 감명을 받는다. 이에 리치는 그를 스승삼아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적 고민을 수행하고자 중국으로 향하였다. 웨스트하프 박사와의 지적 교류가 리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송대와 당대 생산되었던 청자와 백자 등, 양질의 도자기들을 다수 접한 경험은 그가 도자 미학의 표준을 고민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행사했다.

1916년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리치는 본격적으로 도예가로서의 삶에 정진하게 된다. 야나기 무네요시 등 시라카바파와의 교류가 리치의 동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경험이었다면, 도예가 리치의 성장 과정에서는 도미모토 겐키치(富本憲吉, 1886-1963), 하마다 쇼지(濱田庄司, 1894-1978) 두 인물과의 만남이 핵심적이었다. 시라카바파의 동인들은 주로 일본 제국대학 출신의 지식인 엘리트 계층의 인물들로, 이들의 활동은 철학과 정치사상, 예술 등에 대한 학술적 탐구와 문화비평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반면 도미모토와 하마다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택한 사람들이었다. 도미모토는 일본에 방문한 초기 만나게 된 자로, 이후 리치와 도예 활동을 함께하며 예술적 표현의 차원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도미모토는 리치와 함께 에도 시대의 유명한 도예가 오가타 켄잔의 계승자인 6대 켄잔 우라노 시게키치(浦野繁吉, 1851-1923) 아래에서 도예에 입문하였으며, 리치가 일본에서 살았던 1910년대에 리치와 함께 도자기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류하였다.

하마다 쇼지와의 만남은 1919년에 이루어졌다. 일본 내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통해 리치의 작품을 본 하마다는 리치의 작업장을 찾아왔고, 이 만남을 계기로 하마다는 리치가 1920년 영국으로 귀국하여 도예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0년 리치가 영국으로 귀국하여 콘월(Cornwall) 지역 세인트 아이브스(St. Ives)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장을 차릴 때에도 하마다는 함께 하였고, 그곳에서 하마다는 리치의 가마를 짓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그는 리치의 작업 초기 많은 작업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후 하마다는 일본을 대표하는 도예가로 활동하였고, 리치는 높은 숙련도를 지닌 하마다의 작업을 통해 공예품 제작에서의 직관적이고 무의식적인, 또는 몰아적(沒我的)인 가치에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을 엿볼 수 있다(Leach, 2012).

한국 및 한국 도자기와의 만남 또한 리치의 도예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야나기의 민예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리치는 야나기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치는 중국 생활 당시 보았던 송대와 당대 도자기와 함께 한국의 도자기를 '표준적인 도자기'의 전형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 실용성과 과하지 않은 장식, 귀얄 기법 등을 통한 유약 처리를 통해 드러나는 흙의 자연적인 질감, 선의 강조를 통해 표현되는 한국적인 분위기는 리치가 자신의 저서

《도공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표준적인 도자기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리치가 조선 및 고려의 도자기에서 받은 인상이 그의 도예의 표준에 대한 생각을 형성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음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Leach, 2012).

'동서양의 결혼' - 리치의 도예관과 세계관

1. '동서양의 결혼'에 내재된 리치의 도예관과 세계관

동양과의 만남 이후, 영국에 돌아간 리치는 자신의 공방을 설립하고 작품활동을 이어나가며 점차 도예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해나갔다. 드 발(2014)의 주장과 같이, 동양에서의 삶과 도자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점이 리치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내놓았던 도자기의 미적 기준과 장식기법, 생산양식,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되는 미학과 사상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리치가 제시하는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한 매력을 지녔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동양과의 만남 속에서 리치가 내적으로 형성하였던 동양과 도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아가 동양과 서양 사이의 문화적 만남에 대한 리치의 생각을 분석하여 리치가 당대에 매력있는 존재로서 부상할 수 있었던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버나드 리치의 도예활동은 미학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였다. '동서양의 결합'은 공예의 동양적 전통에 내재된 관념적 차원의 충만함과 서양의 과학 및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물질적 실용주의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미적 기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치는 각각의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지닌 특성을 서로 대립되는 항들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립항들 사이의 이원성이 극복됨으로써 일자(一者)로서의 전 인류의 문화로 통합되어가는 이상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한 문화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미쳐 해당 지역의 문화를 대체하는 과정이 아니라, 굳건한 전통적 기반 위에 서있는 대등한 두 문화가 상호작용해 나가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문화 간의 만남에 대한 리치의 사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천인 그의 작품활동과 공방 공예 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리치의 동양문화와 서양문화, 그리고 결합에 대한 인식

동양과의 만남을 기반으로 서양에서의 도예활동을 통해 추구해나갔던 리치의 세계관은 '동서양의 결합'이라는 핵심 어구에서 잘 나타난다. 리치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사용하였던 '동양(Oriental)'과 '서양(Occidental)'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들 간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특정한 '결합(marriage)'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동양에 대한 이해는 서양의 근대화, 또는 산업화의 심화로 이해되는 당대 서양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작된다. 리치는 20세기 초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다른 발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느꼈고, 동서양의 만남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과 그러한 경향이 미래로 갈수록 점차 심화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Leach, 2012).

리치는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형성된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여러 대립항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각각의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로 다른 '극단' 사이의 만남과 적절한 결합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의 서양에 대한 이해는 산업화의 심화 속에서 발생하였던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리치는 서양의 산업화와 함께 등장한 대량생산체제가 공예품의 질과 아름다움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대량생산체제 속 공예품의 생산과정에서 미의 추구보다 경제적 이윤의 추구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공예품 생산에 있어 훌륭한 형태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리치는 물질(materials)과 정신(spirits)의 대립항 중, 물질의 영향력이 과도해졌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응하여 리치는 동양에 정신을 대응시킨다. 시라카바파와의 만남 속에서 느낀 정신적 요소의 충만함과 활력, 그리고 중국의 고전(classic)을 중시하는 교육 등 속에서 리치는 동양에 정신적 가치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동양의 문제를 '부패(decay)'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동양의 부패는 이성과 사물에 대한 정확한 실용적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영적 삶, 이상주의 등의 과잉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Suzuki 2004, 5에서 재인용).

동양과 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첫 번째 이중성이 물질과 관념의 대립항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이다. 리치는 서양의 과도한 개인주의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자 고귀하고 변화를 가져다주는 영향력이었던 집단적 요소(communal element)들의 상실을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인본주의적 가치를 담지해왔던 심리적이고, 종교적이며 미적인 기준이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Leach, 1951). 현대에 들어 자신의 개성만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서양의 개인주의적 경향성 속에서, 미적 기준은 공동체의 합의된 전통적 기반을 상실하고, 독특함과 희귀성으로 대체된다.

리치는 동양에서 전통에 기반한 집단주의적인 특성이 남아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동양문화에 부여되는 집단주의적 특성은 서양의 개인중심주의의 발달로 인한 것이지, 이를

동양만의 특성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동양과 서양은 각각의 서로 다른 전통을 기반으로 존재해왔고, 리치가 이러한 대립항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것은 서양의 전통적 가치의 부활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차원에서 리치는 영국의 전통적 도자 장식 기법이었던 슬립웨어(slip-ware) 기법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이중성의 부여는 서양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중성의 개념을 통해 정의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리치에게 있어 우열의 관계가 아닌 다양성의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리치는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전통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두 문화는 어느 것에도 우월성이 존재하지 않는 동등한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 동양과 서양이란 서로 다른 극단에 있는 다른 존재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단에 있는 문화의 결합이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는 상기하였듯, 각각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문화는 그로 인해 각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가 증대되는 것을 현실이자 필연적인 미래로 보았던 리치는 특정한 결합의 방식을 통해서만 그러한 결합이 상호보완적인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 방식이란 무엇인가? 리치가 동양과 서양의 바람직한 '만남(meeting)'의 방식을 '결합(marriage)'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리치는 불교 사상 속의 '이중성(dualism)의 극복을 통한 합일(Oneness)'의 개념에 의거하여 특정한 결합의 방식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야나기가 정립한 불교 미학과 중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접했던 공자와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치에게 지대한 사상적 영향력을 제공한 야나기는 불교 미학의 차원에서 동양과 서양이 지닌 이중성의 극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동양과 서양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양성이 반목으로 빠져들지 않으면서 다양성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화의 영역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이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동양에서만 또는 서양에서만 찾으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로서 그것은 무엇보다 불행한 결론이기도 하다(야나기, 1989).

불교미학의 관점에서 이중성의 극복을 통한 합일이란 모두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가 되되, 그 속에서 각자의 다름을 유지하고 있는 조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리치 또한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리치는 이러한 합일의 과정을 '결혼(marriage)'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문화 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부부 간의 만남 속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과 같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아이는 각 부모의 서로 다른 고유한 특성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새로운 특성을 지닌 존재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리치의 결합에 대한 생각은 《Beyond East and West》의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해진다. 리치는 그의 저서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내고 있다: "나는 동양과 서양의 결합에 대한 미래를 보았고, 시간의 길 저 너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의 반향을 들었다. 얼마나 더? 얼마나 더(Leach, 2012)?" 이때 '시간의 길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의 반향'이란 동양과 서양의 결합을 통해 탄생할 조화롭고 합일된 전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버나드 리치를 의미하는 '나'에게 '얼마나 더? 얼마나 더?'라는 보채는 듯한 말을 건내고 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결합을 통해 탄생할 미래의 도래를 향한 리치의 열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리치는 그러한 미래를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목소리를 듣는 주체로 '나'를 설정함으로써 리치는 이러한 결합을 주도할 인물로서 자신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즉 리치에게 있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결합이란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 문화의 고유성을 견지하면서도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리치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이러한 만남이 '매춘(prostitution)'이나 '강혼(mesalience)'이 되어선 안 되며, 결혼(marriage)의 문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Leach, 2012). 이는 결혼이라는 과정, 즉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두 존재는 동등한 주체로서 마주하여, 서로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부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도출될 신테제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의 의지와 열정, 헌신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속에서만 동양과 서양은 자신의 서로의 자아를 파괴하는 매춘과, 주체성의 결여와 비대칭성 속의 불행을 낳는 강혼이 아닌, 결혼이라는 관계로서 외부 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수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만남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필요조건은 각각의 문화가 가진 전통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전통 부활의 중요성은 타문화의 영향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동화의 힘(assimilating force)과 연관되어 있다. 동화의 힘은 '주체적 수용'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리치에 따르면 예술이나 산업에의 외부 문화로부터의 영향력이 자기 문화권의 성장요소로 수용될 수 있기 위해선 반드시 조직적인 동화(organic assimil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건강한 조직을 필요로 한다. 즉, 결합의 주체로서 동양과 서양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적 가치의 기반을 견고히 갖춰야 한다.

도예활동에 이를 적용해보면, 송(宋)대와 당(唐)대 도자기의

형태와 패턴, 색채와 기술들에 대한 피상적인 모방은 외부 문화가 발현되는 양식들의 모방에 그칠 뿐,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새로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출현하는 가능성을 배제당한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진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모방의 과정이란 자신의 문화가 가진 전통적인 도자 양식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바, 미적 기준을 잃는 "끔찍한 혼종(miserable half-mixture)"(Suzuki 2004, 6에서 재인용)을 낳을 뿐이다. 도자기라는 오브제 속에 내재된 송대와 당대의 미적 기반과 전통적 가치 등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전통적 기반을 잃지 않는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만 문화 간 결합의 긍정적 결과가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수용을 위해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활력있는 사회조직, 즉 전통적 가치의 견고함과 외부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조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리치의 도예관과 공방공예운동

리치는 전통을 기반으로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양식으로서의 공예 혹은 도예를 연결 짓는 독특한 주장을 펼친다. 이는 도자기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작품임과 동시에 일상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치는 도자기의 아름다움이란 형태와 패턴, 색채 질감 등을 통해 발현되는 미적

탁월함과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다는 공예미의 기준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기준이 공동체에 수용되고, 이러한 기준을 통해 도자기가 제작됨으로써 기계식 생산으로 인해 상실된 일상 속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치는 물질주의의 과잉으로 인한 서양의 문제를 동양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리치의 공예관 및 세계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리치는 서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동양과의 결합을 생각하였고, 이를 도예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크게 도자기 1)생산의 주체, 2)사용의 주체, 3)생산 과정, 그리고 4) 형태, 질감, 재료 등 도자 양식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리치는 산업화로 인한 기계식 생산과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분리를 비판하고, 생산 과정에서 길드와 같은 집단적 생산방식을 주장하며, 인공적 재료의 사용을 배제시키고, 실용성과 무의도성, 그리고 전통성의 요건을 갖춘 형태 및 표현 양식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생활용품으로서의 도자기가 대중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공동체가 미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리치는 도자기 생산의 주체인 도예가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각각 특정한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야나기의 공예관 및 민예미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다. 야나기는

"'개인적인 아름다움'이란 '개인을 초월하는 아름다움'보다 못하다"(야나기, 1989)고 주장한다. 그는 개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성을 초월하는 것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무식한 직인(職人)들'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자연과 전통에 순응하는 이들의 태도 속에서 자연과 전통이 이들에게 미를 보장해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주의적인 관점 및 몰아적(沒我的) 관점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작가가 아닌 공예품이 아름다움을 품는 존재이기에, 수도 없이 많은 반복과 숙련을 통해 자연과 전통을 도자기에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자연적 재료와 전통적 표현양식에 대한 체화된 이해를 갖춘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예품이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야나기에게 있어 '개인 작가'들의 가치란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무식한 직인들'과 달리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 민중예술이 퇴보하는 오늘날, 무엇이 아름다움의 목표인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개인작가이다. 모두가 제각각인 오늘날의 우리는 작품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감상하고 인색해낼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공예분야는 이러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며, 개인작가는 다음의 시대가 다시 민예의 시대로 되기 위한 매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치는

작품보다도 오히려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능력, 즉 사상적 기여로서 의의를 가진다(야나기, 1989).

리치의 도예가에 대한 분류법 또한 이러한 야나기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리치가 일본에서 만난 도예가들은 6대 켄잔, 농촌 및 도자 마을의 도공집단과 같이 도제관계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는 이들이거나 집단적 작업을 통해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무식한 직인', 또는 리치의 표현으로 '직인 도예가(craftsman-potter, 또는 artisan-potter)'였다. 이들은 현대에 등장한 '개인작가', 또는 리치식 표현의 '예술가적 도예가(artist-potter)'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세대를 거치며 전통의 보호의식 속에서 작업을 수행한 이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몰아적인 상태에서 타력적(他力的) 힘이 발휘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서양의 문제점은 수작업 공예를 행하는 이들이 더 이상 일본에서 보았던 이러한 소박한 소작농들(peasants)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제 서양, 또는 영국에서는 예술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의식을 가진(self-conscious) 예술 학생들이 도자 제작을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리치는 "과거에는 전통이 자신의 온건한 기질을 발휘하였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발휘되지 않으며 많은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됨"(Leach, 1951)을 지적한다.

그러나 리치는 야나기와 같이 현실적 변화의 수용 속에서

예술가적 도예가가 수행해야 할 규범적 역할을 제안한다. 리치는 자의식을 가진 예술가적 도예가들이 전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이러한 전통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활력(vitality)을 유지해나가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활력이란 예술가들의 영혼과 문화의 표현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력을 통해 공예품이 지니는 인본주의적, 심미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결국 전통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인 미적 기준의 수용을 통해서만이 심미적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인간적 표현이 작품 속에 녹아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치는 현대의 도예 시스템에 있어 중세의 길드 시스템과 같은 집단적인 작업 시스템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리치는 자신의 작업장인 리치 포테리에서 이러한 작업 형태를 시도한다. 집단적 작업 속에서 도예가들은 미적 기준을 공유하고, 이를 체화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중심주의의 만연 속에서 사라졌던 공통의 미의 기준을 집단적 작업형태를 통해 부활시키고, 이를 작업자들로 하여금 내재화할 수 있는 작업방식을 고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야나기와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리치는 자신의 작업장에 있는 예술가적 도예가들 각각이 지니고 있는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 제작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치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란 과거의 최고의 기준들을 현재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 기반을

두어야"(Leach, 2012) 한다고 보았다. 미적 기준이 전통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한편, 이러한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개인의 창조성을 통해 변화해나가야 한다. 즉 이러한 집단적인 공예시스템을 통해서 리치가 추구한 것은 전통에 대한 적절한 이해 내지는 내재화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의식적 영역의 발휘를 통한 창조성의 건강한 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동체적 요소의 상실로 말미암아 독특함과 희귀성으로 대체되어버린 미의 기준을 창조적으로 변화하는 전통에 의거한 공동체적 미적 기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용의 주체의 차원에서 이러한 생산주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품은 공예품은 소수의 애호가들이 아닌 인민(people) 전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리치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문구 속에서 잘 드러난다:

> 콘월(Conrwall)에서 우리는 집단작업을 통해 공동의 이상으로부터 추동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시작하였고, 개인과 인민(people)의 요구를 결합시켰다고 믿는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은 (구성원들에 의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작곡가-지휘자 아래의 소규모 오케스트라일 것이다. 집단 작업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강압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 순수하게 기술적인 종류의 것이 아니다. 또한 저급한 미학이 가치를 타협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위원회도 아닐 것이다(Leach, 2012).

세 번째로, 생산의 과정에 있어 리치는 수공예의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대량생산체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리치에게 있어 수공예란 인간성의 표현이다. 인간의 손으로 전통과 자연에 의해 부여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의 손을 대체한 공장식 대량생산체제는 인간성이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이는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진다(Leach, 1951).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인민이 이러한 공예품을 사용하기 위해선 생산량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리치가 채택한 집단작업 방식은 분업화를 통해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자기의 조형과 장식, 재료에 관해 리치는 자연주의적 태도와 실용성의 덕목을 강조한다. 작품의 재료가 지닌 자연적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질감과 형태, 그리고 실용성을 함께 겸비한 적절한 균형을 통해 도자기는 활력(vitality)을 가질 수 있게 된다(Leach, 1951). 공예품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용성을 잃은 채 순수예술과 같은 장식적 효과만이 부각된다면 이는 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또한 도자기의 형태와 질감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리치는

소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에 의한 간섭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리치에게 있어 의도되지 않은 균열과 유약의 발색, 불균형 등은 인간에게 우발적인 것(accidental to human)일지 모르나, 자연에게 있어서 그것은 의도적이고 자연스러운(incidental to nature) 결과이다. 그리고 리치는 기계식 생산과정에서 추구되는 과도한 정밀함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이러한 도자기에서 더욱 큰 활력을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그의 공방 공예 시스템에서 수공예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버나드 리치의 '동양'에 대한 이해– Orientalism?

1. 버나드 리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

버나드 리치의 활약은 서양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가 명성을 얻은 20세기동안 도예계에서의 주된 논쟁은 '리치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정도였으며, 그 외에 화학적 기술을 이용한 유약의 개발과 같은 의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de Waal, 2014).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리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리치가 도예계와 공예의 미적 기준 형성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과 그 성과를 인정하는 한편, 리치의 동양 및 서양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버나드

리치, 야나기 무네요시 등 동양과 서양의 매개자(interlocuter)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이 수행한 민예운동, 공방 공예 운동은 과연 동양과 서양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리치에 대한 비판은 주로 리치의 동양문화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리치의 동양에 대한 경험이 편파적이고 제한적이진 않았는가? 리치가 이해한 동양 문화의 특성이란 진정 동양 문화의 특성이 맞는가? 리치는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을 정의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비판들은 리치의 개인사적 차원, 리치 사상의 메타이론적 차원, 사상의 내용과 사회적 실천 사이의 모순 등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드 발(2014)은 리치의 업적이 제국주의적 관점에서의 피상적인 동양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리치가 접했던 일본이란 시라카바파 등과 같이 예술을 사랑했던 소수 지식인 그룹을 통해서만 보았던 일본의 모습이었으며, 야나기를 비롯해 리치가 교류해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모두 사회경제적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리치의 동양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고 중재된(mediated), 또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드 발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드 발(1997)은 리치와 야나기가 영국 및 서양의 산업화를 '타락(lapsarian)'으로 규정하고, '자연적인', '직접적인', '진정성 있는',

‘배우지 않은’ 등 타락 이전의 것들을 묘사하는 용어들을 자신들의 미학의 내용으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일본 시골 지역의 직인들은 이러한 ‘타락’ 이전의 것들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호모 오리엔탈리스(Homo Orientalis)’로 규정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야나기와 리치를 통해 전달된 동양에 대한 이미지라고 거세게 비판을 가한다. 리치는 오로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만 거슬리는 자아의 존재가 지워진 전통적인 직인의 순수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시골의, 글을 읽지 못하는, 겸손한, 때묻지 않은, 그렇지 않으면 ‘하이 칼라’적 사고에 의해 망쳐지는 존재들로서 이들을 단정지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유코 키쿠치(2004)는 리치와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었던 야나기의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해를 ‘동양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 Orientalism)’으로 규정한다. 키쿠치는 야나기가 자신의 민예관을 형성함에 있어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의 미술공예운동(Art & Craft Movement) 등 서양의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가진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야나기의 민예관이 고유성(originality)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또한 야나기의 불교 미학은 서양을 정의하기 위해 동양을 타자화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며, 그러한 동양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일본을

동양의 선구자적 지위로서 위치시키기 위해 일본 외 동양 지역을 다시 한 번 타자화하는 이중 타자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야나기의 불교 미학과 공예에 대한 정의는 이중의 타자화를 거쳐 만들어진 동양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이다.

키쿠치(2004)는 이를 탈근대주의 담론이 가진 비본질주의적 특성(anti-essentialism)을 갖지 못한 채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분법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기반 하에서 혼합(hybridization)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존재론적 차원의 한계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야나기의 불교 미학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민예운동의 전지구적 수용은 서양에 의해 세워진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에 대한 정의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나타나는 알지 못하는 동양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예술과 종교를 동일시하는 야나기의 신비주의적인 사상적 기반이 맞물리게 되며 가능하게 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또한, 키쿠치에 따르면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와 러스킨 등에 의해 서양에서 미술공예운동이 이미 한 차례 진행되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 또한 야나기의 민예운동의 수용을 원활하게 한 요인이다. 즉, 야나기의 사상은 서양 근대의 사상적 영향력을 받은 결과로서 탄생한 것이기도 하며, 이것이 동양적인 것, 또는 일본적인 것으로 재명명되었으나, 결국 그 근본이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과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었기에 쉽게 수용이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적인 차원에서 드 발(1997)과 키쿠치(2004)가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판 지점은 이들의 사상 속에서 드러나는 신비주의적 측면(mysticism)에 대한 비판이다. 키쿠치는 전통을 중시하는 관점 그들의 관점과 몰아적 특징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사상이 실제 그들의 도예 활동 및 작품에 대한 평가 행태와 모순을 띠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Kikuchi, 2004). 사상적 경향성과 실제 도예활동 사이의 이러한 모호성은 리치와 야나기의 공예에 대한 생각과 미적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도록 만들고, 그 결과 이를 교조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이들의 계보를 잇는 이들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드 발은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수행한다. 그는 라프카디오 헌과 휘슬러 등에 의해 제시되었던 동양에 대한 이국적이고 맬랑콜리한 느낌으로 점철된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리치는 동양, 그리고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신비로운' 대상으로 존재지웠고, 이러한 동양에 대한 관점이 야나기에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한다(de Waal, 1997). 이는 야나기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도 연결된다. 드 발은 "야나기 자신과 일본 시골 지역의 관계는 민족지학자들과 같은 것이었다"(de Waal, 1997)고 주장한다. 시골의 도예가 등 직인들은 리치에게만큼이나 야나기에게도 이국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드 발은

야나기가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신비주의 관점을 일본 및 동양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하였으며, 야나기의 사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상적 발전을 이루어나갔던 리치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보인다.

2. 버나드 리치의 꿈 – Marriage of Cultures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결합을 꿈꾸며, 그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자임하려 했던 리치와 야나기가 사실상 동양에 대한 피상적 수준의, 또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위와 같은 비판들에 따르면 그들이 추구했던 동양과 서양의 만남과 결합이란 또 다른 왜곡과 타자화를 낳는 과정이 되어버린다.

드 발과 키쿠치 등의 비판적 연구는 리치와 야나기가 처해있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촉발되는 한계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 보이기도 하다. 리치가 동양을 탐구하기 시작했던 20세기 초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과 제국주의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또한 동양과 서양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가 막 시작되던 당시, 국제적인 삶의 시작과 함께 서양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최초로 시도한 일본은 동양에 대한 이미지를 점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 동양에서의 삶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냈던 리치가 동양을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일본행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개인사적인 흐름 속에서 리치와 야나기가 동양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대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시도 속에서 이러한 한계는 그들이 극복해내기 힘든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비판적 평가가 오히려 리치가 추구했던 문화결합이라는 목표와 이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리치는 자신을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특수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이를 목표로 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나갔지만, 그가 자신을 동양과 서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결합방식을 온전히 깨우친 이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동양에 대한 애착과 동양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서양이 동양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기본위적이고 피상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리치는 서양이 동양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양을 알기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노력을 수행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그의 온 생애 또한 동양을 이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었다(Suzuki, 2004).

또한 어린 시절부터 동양 문화에 노출되었던 그에게 동양과 서양이란 “지구 상에 존재하는 문화들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말이었”(Suzuki, 2004)다. 즉 리치는 동양과 서양에 평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이는 그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방식이 그가 표현하는 결혼이라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중성의 극복이라는 사상적 구조 하에서 따라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특성을 여러 대립항을 통해 설명해낸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그의 타문화에 대한 다원주의적인 태도는 타문화를 타자화하는 서양중심의 오리엔탈리즘적 관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리치에게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 있어 두 문화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만남과 소통, 화해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리치의 문화 탐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리치는 시대의 변화로 말미암은 문화 간 결합의 필연성과 함께 그것의 어려움 또한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리치는 동양과 서양을 그저 다른 것이 아닌, 이중성의 개념 하에서 서로 다른 두 극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극단 사이의 조화란 굉장히 어려운 것임에도 그러한 어려움은 곧 이러한 결합의 시도가 더욱 큰 결실을 가져올 것임을 반증하는 증거였다.

> 오늘에서야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극단들 사이의 진정한 혼합, 또는 섞임이, 그것이 삶에서든 예술에서든 간에,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 분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ai no ko"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 따라오는 경멸의 어조란 동서양이 만남에 따라 결혼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끔찍한 혼종의 결과에 대한 정당한 경멸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라는 점 또한 명확해졌다. 오늘 아침 이전까지 나는 일본과 영미권 사이의 결혼이란 그 자식에 대한 순전한 잘못이라고 믿었다. 설령 그것이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 극단이 온전히 새로운 전체로서의 하나가 됨은 두 극단 사이의 차이에 따라 그 어려움과 가치가 함께 증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Suzuki 2004, 6-7에서 재인용).

결국 요약해보면, 설령 내용적으로 그의 동양 문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의 부단한 철학적 고민과 실천적 삶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속에서 보편적인 인본주의 가치를 향한 그의 열망의 표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삶과 예술이란 20세기의 역동적인 문화적 교류의 주목할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문화의 이해와 갈등이라는 문제가 21세기에 접어들며 핵심적인 화두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점은 리치의 직관적 통찰이 적절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의 삶이란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본 채, 하나의 보편 인류의 달성이라는 원대하고 대담한 사회적 기획을 위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인 고민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실천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리치의 문화에 대한 이해에 비판점을 제시하고 있는 드 발과 키쿠치의 주장은 동서양의 주체적 상호 이해를 원했던 리치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맺으며

리치에게 있어 인간의 본성, 아름다움 등의 진리는 이성이 아닌 직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에게 이성이란 "직관적 깨달음을 돕는 훌륭한 조수"(Leach, 1951)였다. 이는 20세기 지성사에 큰 충격을 주었던 토마스 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 지식의 발전이 더욱 뛰어난 미학적 가치를 지닌 패러다임의 대체과정을 통해 수행된다는 그의 말은 이성적 도구의 충분한 활용 속에서, 결국 세상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직관적 통찰이 지식의 진보를 궁극적으로 추동하게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인류의 지식이란 이성에 기반한 합리주의적 차원의 것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리치를 둘러싼 오리엔탈리즘 비판은 재고해볼 지점이 있다. 우리는 하나의 문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서양 문화로부터의 영향이 시라카바파와 야나기의 동양에 대한 이해를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면, 동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양인이라는 존재론적 특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이들만이 자신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의 존재론적 특성들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주체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인식론적인 태도일 것이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탈아(脫我)적 과정, 즉 나 자신과의 거리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마주하게 되는 문화적 현상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현상의 이면으로 들어가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마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마주한 문화의 근원의 지평과 나 자신의 지평 사이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내'가 그 '문화'를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버나드 리치가 동양에 대한 직관적 통찰을 추구했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일본에서의 삶 속에서 마주한 경험들 속에 내재된 문화적 특성들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주체적 수용의 과정 속에서 리치는 동양을 이해하였으며, 그러한 주체적인 수용과 만남의 과정을 문화권 사이의 만남의 과정으로 확장시키려 시도한다. 그는 주로 도자기라는 문화적 표현물을 통해 동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는 도자기와 인간의 본질을 동근원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기에 도자기의 본질과 공예미에 대한 탐구는 간결성(parsimony)과 설명력(explanatory

power)을 갖춘 미적 기준에 대한 아름다운 주장을 도출해내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양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나아가 통합 인류의 문화적 기반이 되는 새로운 인본주의적 가치가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던 리치에 대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그는 이성중심적인 서양적 사고에서 벗어나, 문화를 이해하는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맑스주의 정치학자 샹탈 무페의 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리치의 사상과 실천이 지니는 적절성과 중요성을 대변해준다.

> 『경합들』에서 나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실천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만약 예술적 실천이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정적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들의 사용 속에서 예술적 실천들이 인간존재의 감정적 영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같은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것이 예술이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는 지점이다(Mouffe, 2018).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아름다움이 반영된 수공예 도자기는 리치에게 있어 무페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규범적 의미를 지니는 예술적 실천이었다. 동서양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조화롭게 투영해낸 도자기와 그것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의 대중화와 일상화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리치의 상정적 모티프인 '생명의 나무' 모티프는 이러한 지적 고민의 결과를 담아내는 예술적 표현이다. 인류라는 하나의 뿌리 위에서 갈라져나온 서로 다른 문화는 나무의 줄기들로 표현된다. 좌우로 뻗은 두 개의 가지는 각각 동양과 서양을 암시한다. 가지들은 얽히는 형태로 끊임없이 겹쳐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문화들 사이의 만남을 뜻한다. 나뭇가지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은 각각의 문화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로서, 리치가 추구하고자 한 이상화된 예술가의 형상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변부에는 리치가 초기부터 즐겨 사용하던 물고기의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양의 장식적 특징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표현 기법은 영국의 전통적인 기법인 슬립웨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전통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림1] 버나드 리치, <생명의 나무>, 1923, 슬립웨어, 43cm, V&A 소장

현재 국제정치학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절충주의(eclecticism)의 흐름은 리치가 추구했던 결합의 시도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결합, 합일은 리치에게 있어선 삶의 최상의 목표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의 복합성의 증대되고, 국제정치학 분야의 성숙과 함께 보다 복합적으로 세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증대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아차리아와 부잔(2019)의 지구 국제정치학(Global IR) 주장, 자연과학의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을 국제정치학에 적용하려는 시도, 영국 학파(English

School)의 국제사회론 등이 모두 그러한 시도와 맥을 함께 한다. 이러한 학문적 조류의 형성은 리치의 사상과 실천이 예술계를 넘어 인류의 지적 탐구 과정의 전반 속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치에 대한 탐구는 문화의 무대가 대두되는 현재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 간 결합이라는 전인류적 목표의 선구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그의 모습은 그가 만년에 제작한 도자에 순례자의 모습으로 자화상처럼 투영되어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살아 숨쉬는 듯하다.



[그림2] 버나드 리치, <순례자>, 1968, 스톤웨어, 33cm, Bonhams 소장

참고문헌

<1차 자료>

柳宗悅. 1989.《공예가의 길》. Bernard Leach 편, 이대일 역. 서울: 미진사.

Leach, Bernard. 2012. *Beyond East and West: Memoirs, Portraits an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Ltd.

Leach, Bernard. 1951. *A Potter's Book.* New York: TRANSATLANTIC ARTS INC.

Yanagi, Soestsu and Leach, Bernard. 2014. *Soetsu Yanagi and Bernard Leach Letters – from 1912 to 1959.* Dokyo: Japan Folks Craft Museum.

<2차 자료>

단행본

이승주. 2012. 〈복합네트워크화와 동아시아지역주의〉. 《복합세계정치론》. 하영선, 김상배 편. 파주: 한울아카데미.

Acharya, Amitav and Buzan, Berry. 2019. *The Making of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Origins and Evolution of IR at its Centen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 Waal, Edmund. 2014. *Bernard Leach.* London: Tate Publishing.

Kikuchi, Yuko. 2004. *Japan's Modernism and Mingei Theory: Cultural Nationalism and Oriental Orientalism.* New York: RoutledgeCurzon.

Mouffe, Chantal. 2018. *For a Left Populism.* New York: Verso.

Said, Adward W. 2003. *Orientalism.* London: Penguin Classics.

학술논문

윤소림. 2020. “버나드 리치 도자에서 ‘동서양의 결합’에 대하여.” 〈미학 예술학 연구〉, 59, 1: 3-32.

de Waal, Edmund. 1997. “Homo Orientalis: Bernard Leach and the Image of the Japanese Craftsman”. *Craft, Culture and Identity(Journal of Design History)*, 10, 4: 355-362.

Kavalski, Emilian. 2007. “The fifth debate and the emergence of complex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otes on the application of complex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ife”.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0, 3: 435-454.

Suzuki, Sadahiro. 2004. “‘The Marriage of East and West’: Bernard Leach as a Cultural Pilgrim”. *The 17th Trienni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iterature Association(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Doi: https://www.ailc-icla.org/2004-hong-kong/.

5장

왜 삼국간섭이 한반도에선 일어나지 않았나? _청일강화박물관

차지윤

북경대학교

I. 들어가며

시간을 되돌려 136년전으로 돌아가 보자.

일본의 항구도시 시모노세키에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배 위에선 리훙장은 어떤 심정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 보았을까.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이 일본에 패배하고 굴욕적인 청일강화조약에 도장을 찍을때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 그런 그를 바라보는 이토 히로부미는 어떠한 꿈을 꾸었고, 요동반도를 드디어 손에 넣었다고 생각 했을 때 일어난 삼국간섭에 그는 요동반도와 한반도 사이에서 어떤 저울질을 했을까.

19세기 말 일본은 조선에서의 타국 간섭 최소화를 목표로

대외전략을 차근차근 짜고 있었다. 한 예로 동학농민운동 초기엔 일본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청나라와 함께 조선의 내정간섭을 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켄일전쟁의 승리를 얻은 일본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의 내정간섭을 도모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청으로부터 요동반도를 얻고 또 조선의 '자주독립'을 약속 받았다. 이렇게 극동지역에서 청일전쟁의 막이 내릴 줄 알았지만 일본은 곧바로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하 프러독) 삼국간섭이라는 커다란 장애물 앞에 서게 된다.

본문은 삼국간섭을 서구열강이 극동지역에서 국익과 영향력 유지의 수단으로 본다. 동시에 삼국간섭은 청일간 요동반도 할양 문제를 국제화시킨 러시아의 묘책으로 본다. 만일 삼국간섭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면 서구열강들이 한반도에서 이익 존재 여부를 따져 봐야 하고 둘째로 간섭 필요 유무도 고려해 봐야 하는거다. 조건이 모두 갖춰졌음에도 간섭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텐데 본문에선 19세기말 일본이 극동지역 주역으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전후 요동반도 할양 문제의 국제화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액터(actor) 수를 최소화 시킴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일전쟁 후 국력이 다소 쇠퇴한 악조건 하 서구열강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면하는 절묘한 줄타기를 한 것 이라고 가정한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일본은 교묘히 요동반도에 프러독

삼국의 간섭을 허용함으로써 구미국가의 관심을 요동반도에 두게 했다. 궁극적으로 승전으로 인한 서구열강의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일본의 대조선 정책노선 조정간에 시너지가 생겨 한반도에서의 액터 수를 최소화시켰다. 그 외에 구미국가들의 직접적인 이익 소재의 요동반도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타협을 봐 조선에서의 삼국간섭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본다. 일본이 보여줬던 태도의 전환, 즉 강경한 입장에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일본이 삼국간섭이라는 "악재" 속에 뒀던 묘수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후 조선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지만 이를 본문에선 러시아의 외교적 실수로 간주하고 일본의 반러 정서를 불 붙임과 동시에 러일전쟁의 시발점으로 본다.

II. **청일전쟁 전후**(前後)**약사**

일본은 페리 제독 흑선(黑船) 사건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비약적인 속도로 근대화를 이뤄냈다. 그 사이 일본은 적극적으로 구미국가에 유학생을 보내 선진 문물을 배워 오고 국내에선 자본주의의 꽃이 만개하게 되었다.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구 열강들을 초청해 파티도 열고 회의를 갖는 등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청나라는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전 자국 영토가 열강에 의해 나눠 먹혔다. 청은 러시아와 신장(新疆)과 동북지역 영토를 놓고 다툼이 잦았다. 영국은 자신들의 제국에 티벳을 포함시키려 했고 프랑스와의 청프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였다. 물론 청나라도 자신 나름대로 중체서용(中體西用)론을 내건 양무(洋务)운동으로 부국강병의 꿈을 꾸었지만 결국 꿈이였을 뿐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청나라 정부에 실망감이 나날히 커져만 갔다. 리훙장은 일본에 경계심을 갖기 보단 오히려 믿는쪽을 선택했고 19세기 80년대에는 연일방아(联日防俄, 일본과 연합해 러시아를 견제하자)라는 생각조차 하게 된다.

19세기말 한반도에서는 잠깐이나마 권력의 진공상태라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 사이 한반도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삶은 고단했으며 왕실은 국내에서 터진 사건들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 이는 훗날 무쓰 무네미쓰(陆奥宗光)가 말했듯이 일본 정부에게 조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핑계거리를 주었다.

조선 정부는 결국 청나라에 손을 내밀게 되었고 청이 파병을 하자 일본도 청일 톈진조약의 내용에 의거해 군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후에도 일본이 철병 거부하였고 수개월 뒤 일본이 청을 급습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은 육지와 바다 두 전장에서 수차례의 충돌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황해해전에서 청의 대패로 전의를 상실한 청은 3월 9일 일본의 육지전 승리를 끝으로 청일전쟁의 막이 내렸다.

청일전쟁의 본질에 대해 이미 많은 토론과 연구가 이뤄졌다. 본문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밑거름 삼아 청일전쟁의 본질은 추상적 관습적 역사적인 국가 간 관계를 근대 국제정치에 투영해 제도를 정리하려는 청의 시도와 실제의 힘의 차이에 기반 및 그 차이를 반영한 제도를 구축하려는 일본의 시도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즉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인 것이지 조선의 속방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청일전쟁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청일전쟁의 주된 목적은 간략하게 발판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륙으로의 진출의 꿈을 실현해 대일본제국을 세우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물론 기존 청일전쟁의 연구 중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 무게를 둬 청일전쟁에서 조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존재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실제로 회담 이전부터 일본이 조선의 땅을 욕심냈다는 걸 리훙장은 알고 있었다.[1] 리훙장 그리고 청에게 있어 조선이 가진 의미는 상당했다. 많은 왕국들이 청의 천하질서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목격해 온 청은 사대관계의 전통을 고수하는 조선에 집착을 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883년부터 프랑스에 2차례 연달아 패전한 청나라는 1885년 3월에 일어난

1 “日本欲吞朝鲜已久”(번역: 일본은 조선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싶어했다.),《李文忠公全集》,《译署函稿》, 第1卷, 第13页。

영국의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본래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던 조청의 속방관계를 공개적으로 승인하게끔 했다. 이러한 집착은 청나라의 마지막 멘즈(面子,자존심)으로 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앞서 말한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된 청일전쟁에 관한 내용이 아닌 그 후의 일이다. 중국 요동반도에서는 열강들의 이익 다툼이 삼국간섭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삼국간섭과 비슷한 맥락의 다툼 또는 서방국가들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한반도에선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부분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일본의 대(對)조선 외교정책의 변화가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청과 타 서방국가들의 개입을 최소화시켰고 그들의 시선을 요동반도에 집중시킨 결과 조선에서의 장악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본문에서 다루는 가설은 총 3가지 부분을 입증해야 설득력이 충분해진다. 첫째로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였는지. 둘째로 일본이 청은 물론이고 어떻게 요동반도에는 간섭을 한 서방열강들을 한반도에서는 관심을 못두게 했는지. 마지막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간섭을 도모한 러시아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였고 그 결과가 어떤지가 중요하다.

III. 요동반도에서의 삼국간섭과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

3.1. 삼국간섭과 요동반도가 가진 전략적 의미

삼국간섭이란 1895년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下关条约)에서 인정된 일본의 요동반도(辽东半岛) 영유(领有)에 반대하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공동간섭이다.

요동반도에는 뤼순항는 물론 다롄항등 매우 좋은 부동항들이 있었고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와 교역을하기 위해 서방국가들은 그 항구들을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동반도를 점유하는게 제일 효과적이였고 프러독 삼국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 3국간섭은 결과적으로 서구 열강에도 청국을 분할하는 단서를 열어주어, 1898년 3월에는 독일군이 교주만(胶州湾)에 상륙하였고, 러시아는 만주에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 요동반도를 조차하였다. 그만큼 요동반도를 점유하고자 하는 열강들이 많았고 그 중 일본이 선수를 쳤지만 삼국간섭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었다.

시모노세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리훙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회담에서 일본 측은 요동반도의 영유를 희망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구화 조약이 담긴 내용 총 10조을 리훙장에게 전달했는데 그 중 제1조이 조선의 자주독립이고 총10조중 4조가 요동반도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일본 측의 이러한 요구를 리훙장은 일본이 "조선의 자주, 요동반도와 대만 할양, 배상, 항구도시 개방을 추가적으로 원하다"고 정리해 청나라에 전보를 보냈다. 4일 뒤 리훙장은 요동반도 지역은 할양이 어렵다고 제시했다. 일본 측에서 계속해서 양보를 못 한다고 어필하자 요동반도 전부는 어렵고 부분적인 할양은 가능하다고 한 발짝 물러서는 듯했다.[2] 일본의 입장이 얼마나 강경한지 이토 히로부미는 마지막 담화였던 5번째 회동 때 마지막으로 조약 내용을 검토할 때 리훙장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체결 즉시 바로 인원을 보내 할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3] 청은 마지막까지 요동반도를 잃는걸 두려워 했고 이는 수도 경사(京师, 현 북경)에 바로 침입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한 이유이기도 하다.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 요동반도 반환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여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판단은 경제와 무역에 있어 자국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 판단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 근거는 일본 주미 공사 쿠리노 신이치로(栗野 慎一郎)가 주영국 공사 가토 다카아키에게 보낸 편지인데 편지에는 일 번이 받은 삼국 항의서의 요약본과 함께 일본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첫째는

2 《马关议和中之伊李问答（戊戌前后的痛与梦)》'第三次问答节略'

3 《马关议和中之伊李问答（戊戌前后的痛与梦)》"'第五次问答节略', 换约后, 立即派人前往。"(번역: 조약 교환 후에 바로 사람을 보내겠다.)

러시아의 우려가 담긴 '조선국의 독립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였고 둘째는 '유럽의 통상무역에 있어 해를 가한다'이다. 셋째는 '중국의 수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극동지역의 평화가 위험해진다'였다.

프랑스에 있어 무역도 중요했지만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러불 동맹이 존재했기에 러시아 편에 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였다. 또한 청을 도와줌으로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 독일 또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극동지역에서의 자국 거점을 얻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과 더불어 러시아가 신경을 극동지역에 쓰게 함으로 유럽의 위협을 줄이는데 일조할 거라 생각했던 거다.

삼국 간섭은 러시아가 주도한 만큼 실제로 항의서에 담긴 내용 중 제 2항만 빼고 나머진 다 러시아의 이익과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 진출을 위해 항구가 특히 부동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를 희망했다. 이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신문 보도를 보면 알 수 가 있다. 비엔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러시아에게 부동항 한 곳을 주길 희망한다는 내용이였다(《马关议和中之伊李问答》pp.152). 그 당시 러시아제국 신문은 일제히 일본이 요동반도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며 거센 비판을 했다. 물론 3년 뒤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조차 했을때 일본 국내에선 반러정서가극에 달았다고 하니 일본이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간다.

3.2. 전후 일본에 대한 각국 인식의 변화

청일 전쟁의 결과는 일본에 대한 서방 열강의 인식의 변화였다. 혹자는 옛 중국, 신 일본이라고 칭하기도 했으며(Old China, New Japan) 벤자민 엘만은 Rise of Japan, Fall of China이라고 요약하며 청일 전쟁을 신구(新旧) 질서 간의 충돌(the clash of two orders)로 봤다.

청일간 해상전투능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청일간 작전 수행 능력 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질과 양에서도 차이를 보여 청의 패전은 필연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刘致 2014, 628-676; 李玉生 2014, 677-714). 물론 일본의 승리가 운적 요소가 녹아 있다는 연구 또한 중국 연구자 측에서 거론되고 있지만(费志杰 2014, 779-789) 이는 주류가 아니다.

그만큼 현재 이루어진 연구들은 수많은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승패에 대해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19세기 말에는 그만큼 정보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쟁의 승패에 대한 예측은 매우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므로 당시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패전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왜소한 체격의 사무라이가 중국 복장을 한 거인을 쓰러트린

모습의 그림이 그려질 정도였다.[4]

한 국가에 대한 인식이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당시 일본은 적극적으로 외교에 참여했고 30년이란 시간 동안 근대화를 일궈내 공업 생산능력이 매우 발달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까지만 해도 서구 열강들은 일제히 중국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대반전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자 일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열강들이 일본을 적어도 극동지역에서는 명실상부 강대국이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예로 1902년 영국은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게 된다.

IV. 청일전쟁 후 일본의 적극적인 대(対)조선 외교 노선 수정

앞서 얘기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책이 필요했고 蹇蹇録(켄켄로쿠)를 선택하게 되었다. 켄켄로쿠는 陸奥宗光(무쓰 무네미쓰)가 훗날 집필한 청일전쟁에 관한 서적이다. 그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토 히로부미가

4 Author: Anonymous, Punch,29 September 1894, Cartoon on the First Sino-Japanese War.

정리한 일본 외교 문서집 또한 참고 서적으로 정하였다. 그 외에도 일본의 정책 변화와 실제 행동에 대응하는 청의 입장 변화를 알 수 있는 리훙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대담 내용을 자세히 고찰했다. 상술 서적들을 참고함으로 청일전쟁의 승리가 일본에 안겨준 외교적 의미와 더불어 일본의 승리로 얻게 된 요동반도와 한반도에서의 저울질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4.1. 청일전쟁 전 대(对)조선 외교노선

기존 연구들은 일본이 우발적으로 청일전쟁에 휩쓸리게 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조선 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해 매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논증한다(戚俊杰 2014, 493-515; 王贤钟 2014: 516-532). 우발적이진 않았지만 일본은 매우 조심스러지만 초조한 입장을 고수했다는 걸 1895년 이전 청과 맺은 조약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분명 1876년에 같은 독립국 지위를 소지한 국가 대 국가로서 일조 수호조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부단히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조선 사이의 종속관계를 각인시키고 국제법적으로도 확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막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질려는 일본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특히 청은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조차 '유럽은 유럽의 방식대로, 아시아는 아시아의 방식대로'라며 일본을 형제라 칭하며 청의 '천하' 논리를 고집했다. 일본은 조선과 독립국 지위를 소지한 국가 대 국가로서

일조 수호조약을 체결하였기에 사실 청나라와 조선 간의 애매모호한 종주국-속방 관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분명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생김을 앎에 더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싶다.

하물며 천진조약에서는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조항이 없었기에 일본에겐 청나라가 순순히 받아 들이게 하는 확실한 '한방'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에 파병 전에 일본에 알려야 하는 천진조약의 조항이 조선에서의 청일 권리의 균형추 잡아주었다면 청나라가 1894년에 파병한 사건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가 과연 천진 조약을 잘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첫 사건이었을 것이다. 즉 쌍방 다 균등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일본 측에선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지하고 청나라 측에선 조선은 속방을 인지하며, 일본이 청나라의 통보 중 "속방을 보호하는 건 청나라의 오래된 관습"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청일전쟁의 진정한 발화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사실 이 논리를 약간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속방과 독립국대 독립국으로서 조선수호조규를 맺었는데 조청간에 조공-책봉의 관계가 남아있다면 이건 추후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우려와 다르게 회담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1895년에 이르렀을 때 청은 조선의 명운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은 자국의 손익을 따졌다. 이는 청나라가 당장

자신의 땅도 할양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조선의 명운까지 고려하는가에서 출발한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토 히로부미와 리훙장은 조약 내용에 관해 타협을 하기 위해 총 6차례 공식 만남을 가졌다. 앞서 만남을 가지기 전부터 리훙장은 일본측으로부터 그들이 조약에 포함시킬 내용을 전달받았다 한들 앞서 언급한 대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공공연히 인정한다는 것은 청의 마지막 자존심인 멘즈를 짓밟는거와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전권대신 리훙장이라고 한 지어라도 조정에서 지시를 받기 이전인 4월 5일에 일본의 10가지 요구 사항 중 제1조인 조선의 자주독립을 최종적으로 시인한다고 답한 시점으로부터 리훙장은 이미 청의 몰락을, 일본의 부상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4.2. 전후 대(対)조선 외교노선

무쓰 무네미쓰의 말을 빌려 얘기하자면 일본은 그 당시 “이미 조선에서의 청일 양국 간 기울어진 권리관계”가 존재했다고 믿었고 또 결과적으로 동학당의 난을 제압하지 못해 조선이 중앙정부로서의 능력 부족을 핑계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른 서방 국가들을 조선에서 배제시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다. 청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가히 치밀하고 신속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요구했을 정도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청일전쟁의 다양한 목적중 하나였다.

또한 일본은 조선의 조정 내에 각기 다른 분파가 존재해 엘리트들이 구미 국가와의 교섭을 통해 구미 국가의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우려해 메이지27년과 28년에 약 2년에 걸쳐(1894-1895년) 조선에서의 정책을 수정하는 방침을 세운다. 특히 이노우에 카오루이 보고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시피,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조선왕조가 한반도에서의 실질적 통치권을 상실하게 만들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그는 일본에게 조선 내정 간섭에 타당한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5] 그래도 강행하기로 한다.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중국의 리훙장과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 관해 의견차를 좁혀 나가던 상황이었고, 4월5일에 조선의 자주독립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은 직후 8일에 바로 조선의 내정간섭을 도모하는 정책 토의를 가졌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일본군 주둔 2. 조선에서의 철도와 통신 건설계획 3. 일본을 통한 내정 개혁이다.[6]

---

5 <日淸平和後ニ於ケル對韓方針ヲ定ムル義ニ付井上伯具申>p. 630 “我ハ表面朝鮮ノ独立ヲ唱フレドモ，其實之レヲ屬隷トスル野心アリトノ疑心ヲ懐カシメ、我ガ宣言ト事業ト相矛盾セリトノ擬論ヲ受クルヲ免レザル可シ。"(번역: 우리는 겉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속국으로 삼으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을 살만하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전과 하는 짓에 모순되어 의론을 받게 될 것이다.)

6 <日淸平和後ニ於ケル對韓方針ヲ定ムル義ニ付井上伯具申> pp. 631-632

특히 일본은 일본만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 했다. 일본은 조선정부의 재정적 문제와 국내 문제를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았고 또 내정개혁에 관해선 조선과 외국의 연락을 차단해 일본을 거쳐가게 하는 정책을 구상했다.[7]

일본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적극적인 서신 외교를 펼쳐 외부로 부터 일본의 이익에 충돌됨을 최소화시켰다.

대표적으로 켄켄로쿠를 보면 무쓰 무네요쓰는 서구 열강의 관심을 요동반도에만 놓게 하려고 이토 히로부미를 설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돌려 얘기했지만 의도는 확실했다. "만일 삼국간섭을 국제회의를 열어 해결하려 한다면 분명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려고 하며 그 회의는 분명 요동반도 반환 외 다른 의제(예: 조선의 자주독립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도 제기 될게 뻔하며 이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실패로 몰아갈 것이고 유럽대국의 새로운 간섭을 끌어 들이는것이다"[8] 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는 곧바로 주일 러시아공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조선 독립 문제에 관해 러시아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한반도에서의 액터 수를 최소화시키는 데에 공을 들인 데는 일본 나름의 논리가 있다. 청나라의

7 <韓廷ト歐米使臣トノ關係並ニ之ニ處スル方策日置益> pp. 668

8 陆奥宗光,《 蹇蹇録 》pp. 167-168

관리들이 일본과 접촉하면 할수록 일본의 욕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예로 1879년 6월 중국 관리 정일창(丁日昌)은 황제께 "일본이 조선을 삼키려는 욕심이 있고, 태서(구미국가)들은 조선과 무역을 하고 싶으니 조선에게 태서(구미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걸 권해도 괜찮을 듯싶다"고 말씀을 올렸다.

리훙장은 당시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에게 비슷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그때부터 청나라는 적극적으로 서방국가 세력을 끌어들여 한반도를 국제화시킴에 따라 가령 일본이 한반도에 혹심을 품어 점유하려고 할 시 일본과 서구 국가 간 이익 충돌을 기대하는 "이이제이" 정책을 고안했다. 나중엔 심지어 조선을 벨기에 스위스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일본은 삼국간섭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요동반도에서 삼국간섭의 여파가 조선까지 미치지 않도록 독일, 러시아, 프랑스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편으론 “(요동반도 반환 문제를 제외한) 청과 맺은 기타 조약들은 청나라가 완전히 이행한 후에야 금주반도(요동반도)를 반환한다”며 최소한 다른 국가들이 한반도에 간섭 하는걸 꺼려한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천명했다.

4.3. 완전히 포기한 청과 그 반대인 러시아

청나라는 이에 완전히 포기했다.

우선 청일전쟁은 청의 양무운동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일종의 시험대와 같은 것이었다. 30년에 가까운 청의 부국강병 계획은 등세창이 이끄는 북양함대 치원호가 황해해전에서의 패전을 끝으로 씁쓸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조선은 '자주'(自主) 했고 '독립'（独立) 했지만 그 어느때 보다 약했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다.

사실 청과 조선의 조공-책봉의 종속 관계는 1876년 조일수호조약을 맺을 때 부터 이미 근간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1885년 양국이 천진조약을 맺음으로 팽팽했던 재조선(在朝鮮) 권리의 저울이 일본측으로 확실히 기울어지기 시작한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후 부터였다. 이는 리훙장이 전권대신으로 방국(邦国)과 주고 받았던 서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895년 청일강화조약을 맺기 이전 조선 주재 대신들 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 내부와도 서한을 주고 받았었다.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칭하는 문서들도 광서21년(光绪二十一年, 1895년)까지만 존재했고 1899년엔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이 맺어진다. 여담으로 1899년에 리훙장이 청나라 주 대한제국 공사 서수붕에게 보낸 편지 안엔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에게 둘러 싸였다'라고 대한제국의 미래에 안쓰러움을 표했다. 어떻든 간에 이 조약은 한국과 중국의 통일 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근대적 평등조약이란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청나라와 관심을 끈 서구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도리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청일전쟁 초기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고 자국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러시아는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소극 정책이었다. 그러나 애초 청국의 승리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이 승리하고 요동반도의 여순을 점령하자 러시아는 개입을 결정하고 적극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러시아는 청일 양국의 강화회의 교섭 내용을 주시하다가 마침내 삼국간섭을 주도하여 일본의 전쟁 승리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한반도 식민지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대륙 진출을 의도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청일전쟁기의 러시아의 조선 정책은 삼국간섭을 계기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기다리며 관망하는 자세에서 주도적 자세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바, 그것은 조선의 자주 와 독립을 전제로 한 현상 유지책을 기조로 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앞서 말한 대로 육지는 넓지만 좋은 항구가 없어서 극동지역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땅과 항구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9] 바다로

9 1860년 러시아은 중국과 '북경조약'을 체결해 극동지역 사할린섬을 얻

나가는 길을 비롯해 항구를 둘러싼 러시아와 다른 나라 간의 잡음이 현재까지 끊이지 않는 것도 비슷한 논리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항로를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한반도는 러시아에게 있어 지정학적 완충지대'의 의미가 컸다고 한 연구자는 힘줘 말한다(张智从地缘政治角度看日本发动甲午战争). 러시아는 일본군이 청일 강화가 이루어지고 삼국간섭의 성과로 요동반도를 통해 러시아를 위협할 발판을 제거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 주요 도시에 일본군을 주둔하는 것에 경계심을 가졌다. 19세기 중순부터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지역으로 부단히 확장을 해왔다. 그러기에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건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중국으로 부터 얻은 중국 동북지역의 땅을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즉 요동반도와 한반도는 러시아에게 있어 양날의 칼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두 곳이 러시아가 다른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었다.

V. 나아가며

"Angriff ist die beste Verteidigung" 라는 말이 있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에 쓰여있는 글귀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뜻이다. 일본은 항상 19세기말 20세기 초 무리한 확장을 할때마다 선제공격을 해왔다. 그리고 일본이 얻은 전리품들을 수호하기 위해 꼼꼼히 전략 전술을 짰다.

상술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한반도에서 다른 서방 열강들의 이익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걸 우려했다. 추후 조선을 식민지화 할때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초반부터 매우 계획적으로 다른 서방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이익 최대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벌어지는 사건에 개입하는 액터 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로 청일전쟁 후 러시아 외에는 별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선 조정 내부와 외국과의 소통을 끊으려 했고 또 일본은 다른 국가와의 서신교류를 통해 일본의 의도를 '보호'라는 명분 하에 포장해 알렸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성공했고 추후 러시아로 들어가는 발판을 지켜내 전쟁에서 더욱 순탄하게 승리를 거머쥐지 않았나 생각든다.

일몰은 천천히 시작해 단숨에 끝난다. 시모노세키에서 천천히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리훙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리훙장은 일본을 보면서 과거 휘황했던 청의 과거를 떠오르지

않았을까. 청일 강화 박물관에 한달음에 달려 가고픈 심정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1. Compiled by Jukichi Inouye. 1895. "A Concise history of the war between Japan and China".
2. S. C. M. Paine. 2005.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Benjamin Elman. 2013. "The 'Rise' of Japan and the 'Fall of China' after 1895." Chapt. 5 in *The Chinese Chameleon Revisited: From the Jesuits to Zhang Yimou.*
4. 李鸿章. 2008.《李鸿章全集 36 (信函八)》顾廷龙, 戴逸编. 安徽教育出版社.
5. 广西师范大学出版社编. 2008.《马关议和中之伊李问答(戊戌前后的痛与梦)》. 广西师范大学出版社.
6. 李鸿章. 1965.《李文忠公全集》. 第1卷,《译署函稿》. 吴汝纶选编. 文海书局, 据光绪三十一年(1905) 刊本影印.
7. 郭阳 王记华主编. 2018. 《甲午战争与东亚近代历史120周年国际学术研讨会文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8. [日] 原田敬一. 2007. 《日清、日露戰爭》, 岩波書店.

9. [日] 陆奥宗光. 2018. 《蹇蹇録：甲午战争外交秘录》. 赵戈非, 王宗瑜译. 三联书店.
10. 伊藤博文 編[他]. 1936.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上, 中, 下)》. 秘書類纂刊行会.
11. 伊藤博文 編[他]. 1933. 《秘書類纂 第1卷 日清事件》. 秘書類纂刊行会.

논문

1. 김원수. 2015.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과 러시아의 조선 정책.” 〈한국 정치 외교사 논총〉, 36, 2: 37-65.
2. 구선희. 2006. “청일전쟁의 의미 : 조·청 '속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37: 92-125.
3. 권무혁. 2006. “청일전쟁 시기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중소연구〉, 30, 1: 151-184.
4. 【韩】 王贤钟. 2018. “2014 中日甲午战争期间朝鲜政府的协助战争行为及对日依附问题.” 《甲午战争与东亚近代历史120周年国际学术研讨会文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516-532.
5.权赫秀. 2014. "《马关条约》第一款有关朝鲜问题内容的形成过程研究." 《抗日战争研究》, 2014年 第4期.
6.戚俊杰. 2018. "日本挑起甲午战争的前因后果." 《甲午战争与东亚近代历史120周年国际学术研讨会文集》. 社会科学文

献出版社, 493-515.

7.刘致. 2018. "甲午战争中日鱼雷艇部队之比较." 《甲午战争与东亚近代历史120周年国际学术研讨会文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628-676.

8.李玉生. 2018. "甲午战争时期海军观瞄射控技术及中日舰队炮战运动." 《甲午战争与东亚近代历史120周年国际学术研讨会文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677-714.

9.费志杰. 2018. "甲午战争中日本获胜的侥幸因素分析甲午战争中日本获胜的侥幸因素探析." 《甲午战争与东亚近代历史120周年国际学术研讨会文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771-779.

10.张双智. 2018. "从地缘政治角度看日本发动甲午战争." 《甲午战争与东亚近代历史120周年国际学术研讨会文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69-179.

6장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_규슈국립박물관

김민정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전락하였지만 20세기 들어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조선과 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서구 세력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동양삼국연대론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지식층들이 조선과 중국, 일본 등 삼국의 연대를 통하여 서구 세력의 침탈을 막아내자는 것으로, 동양 전국의 위기를 자각하면서 발생한 시국관이자 정치이론이었다. 삼국의 연대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던 아시아주의와 아시아연대론에 영향을 받았다. 일본 측의 아시아연대론은 종전의 정한론과는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를 외관상 부드럽게 재포장한 것이었다.

일본이 주장한 '아시아연대론'은 한·중·일 삼국이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서양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조선의 조사시찰단 인사들은 아시아연대론의 위험성을 간파하지 못했기에 지식층 일각에서는 동양 삼국이 문화적 언어·역사·독특한 감정·지리적 공간 등 삼국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조선에 대한 공략론(攻略論)인 정한론과 1894년 청일전쟁이라는 일본의 당시 국내 분위기와 역사적 사건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연대론의 진의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수립된 현대 일본 정부의 대對아시아 정책의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베 정부 시기의 공식 자료 및 담화 등을 통해 일본몽을 분석하고 아베 정부의 다이아몬드 안보동맹 구상은 부서지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1세기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대국굴기 '중국몽'과 비교하였을 때, 일본은 일본몽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다.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 건축(architecture)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등 구체적 구상을 내놓고 있는 중국에 비해 일본은 그들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본의 꿈'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하여 일본의 꿈이 그들의 것보다 더 작거나 일본이 미국의 꿈에 편승하여 그대로

좇아간다는 사실은 아니다.

19세기 말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 아시아연대론을 주장했던 일본 정부를 살펴보면, 그들의 심상에 일본몽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극히 자명하다. 일본은 당시 조선, 청, 일본의 동양 3국 중 가장 과감하게 자신들의 야망을 펼쳐보였다. 그러나 21세기 중반 일본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단계를 밟고 있다. 일본의 혼네와 다테마에를 생각해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본의 태도로 그 이면에 일본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아베 정부의 담화와 방위백서 및 일본의 공식 자료를 분석하면서 일본의 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혼네라고 불리는 일본의 심상에 어떤 일본몽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 정부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질서 건축학개론의 변화가능성에 일본몽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몽과 미국몽보다 일본몽이 더 작은 꿈이라고 해석한다. 동맹을 잘 활용하는 일본으로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이른바 미국행 편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베 정부의 “21세기 구상간담회” 보고서(2015)와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혼네에는 어떤 꿈이 자리 잡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이 보다 강렬한 꿈을 그들의 심상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일본 총리 교체로 인한 새로운 주인공의 등장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일본의 행보에 더욱 주목할 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아베 정부의 꿈: "21세기 구상간담회" 보고서(2015) 를 중심으로

아베 정부는 2015년 8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다. 총리 자문 회의로 구성되었던 '20세기를 되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는 지식인 간담회'(이하 21세기 구상간담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베 신조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다. '전후' 70주년 기념 담화라는 명목 하에, 작성된 보고서는 20세기가 주는 교훈, 전후 일본의 발자취, 동아시아 지역과의 화해 및 협력 등에 논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통해 전후 세계 번영과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과의 화해 및 협력 부분에서도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앞장서서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하였다.

"21세기 구상간담회" 보고서(2015)는 아베 정부의 국제주의적

시각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그들의 꿈을 조심스레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이 아시아의 독립을 이끌었다는 대목이다. 구상간담회 보고서 5장에서는 일본의 제 2차 세계대전 패망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독립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독립이 이후 자립(自立)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하며 일본에 있어서 제 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전투였다고 주장한다. 군국주의로 인한 패권 확장이 그들을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독립'을 위한 목표로서 참전했다는 것을 피력한다. 또, 이들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 실패 원인에는 일본이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일본의 덕으로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 *"Whether or not Japan intended to liberate Asia, it did wind up promoting the independence of the colonies in Asia."*

이것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을 아시아 국가의 독립과 인과관계 혹은 선후관계로 연결 지으며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혼네(ほんね)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고서 5장의 세 번째 대목이다. 여기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심상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와 세계의 번영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지식인 간담회 패널은 첫 번째로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것”을 답하고 있다. 패널은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니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성(stability)을 위해 해온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져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즉,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 균형(the Balance of Power)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획득’이라는 꿈은 단순히 심상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할이 아시아라는 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이 국제 질서의 안정화에 있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냈다며 주장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에 국제 사회가 그 공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지구적 규모의 안보 분야에서 전과는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일본의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21세기 구상간담회 보고서 5장 세 번째 대목에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는 협조하되, 아시아 대륙으로 눈을 돌려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의 심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First, we would like to turn our eyes to Asia.”

21세기 구상간담회 보고서 5장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다. ‘Turn eyes to Asia’는 언뜻 미국 힐러리 클린턴의 ‘Pivot to Asia’를 연상케 한다. 구상간담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5년 전후 70주년 아베 신조의 담화(2015)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명확한 표현은 없다. 그러나 2014년 5월에 제출된 안보법제간담회의 최종 보고서를 반영하여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는 2016년 3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효되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의 변경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평화헌법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담화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21세기 구상간담회 보고서와 아베 담화(2015)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깨달은 20세기로부터의 교훈을 나열하면서, 강제력으로 교착 상태를 깨려고 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We will engrave in our hearts the past, when Japan attempted to break its deadlock with force.”

여기에는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 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 헌법 제 2장 9조에 명시되어 있는 '3대 원칙'에 따라 전력(戰力)의 포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제한 없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21세기 구상 간담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한 아베 담화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법률안이 이듬해인 2016년 곧바로 개정된 것은 아베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점이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국내외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일본의 심상에는 아시아 지역의 이웃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견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3년 2월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 이하 안보법제간담회)'를 출범시켰다. 아베 정권은 2014년 5월에 제출된 안보법제간담회의 최종 보고서를 반영하여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 및 담화보다 먼저 결정된 것으로, 이전의 2010년대 초의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임을 보여준다. “21세기 구상간담회” 보고서(2015) 이전의 일본의 군사적 동향과 구상간담회 보고서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에서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과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 역할(proactive role)의 연기를 수행하는 주인공(actor)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017년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이하 FOIP)을 외교청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전략적(geo-strategy) 관점에서 일본의 지역구상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구상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제 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VI: Six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대외정책기조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과 인도양이라는 두 대양,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두 대륙이 교차하는 해양 공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공간’이라고 특징지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갖는 중요성은 일본의

지역구상의 구심점의 변화라는 것이다. 기존의 일본 지역구상의 구심점이 동아시아라는 '대륙'이었다면,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지역구상의 구심점을 육상 공간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 공간까지 확대할 것임을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일본이 외교 안보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해양'으로 설정한 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 경쟁이 그 배경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단순히 인태지역 질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목적으로만 형성된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신(新)안보동맹과 안보 체제의 강화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의 협조가 더욱 그 중요성을 갖게 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행보는 그들의 새로운 지역구상의 이면을 분석하게 한다.

2019년 일본국 방위성은 '신방위계획대강'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국 방위성의 일본 방위정책 개관에 따르면, 방위계획의 대강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 비추어 일본의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2019년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방위백서에 따른 '신'방위계획대강은 일본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의 변화는 가속화, 복잡화되고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신방위계획대강을 정당화한다. 특히 일본은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있어 '일본으로서의 우위성을 획득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력 증가를 생존의 문제와 결부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육, 해, 공의 기존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와 신 新영역에서의 군사 활동 확대 및 활발화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양극 체제 속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확대에 따른 일본의 대응 조치다. 특히, 2020년 방위대강에서는 '해양안전보장의 확보'를 이유로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린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7년 이후 매년 이즈모(いずも) 가가(かが)라는 대형 호위함을 포함한 함정에 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 파견 행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훈련 강화와 우호국과의 공동 훈련 등은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구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측면의 강화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R, 2017)의 지역전략 부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가장 먼저 다루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시적을 억지하고 이길 군사적 능력을 유지할 것임을 군사 안보 영역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과의 군사적 협력과 방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는 하드파워(hard power)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an) 수석보좌관이 공개한 『2018년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R)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 보존'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안보 목표로 정의하였다. 이 문서에서 나타난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 4가지는 그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적 압박을 견제하고 그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함이 주요 목표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국가안보전략보고서(2017)에서

"States throughout the region are calling for sustained U.S. leadership."

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리더십을 확인하고 정당화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늑대며 그들의 연기(performance)의 중심에는 힘이 자리 잡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연기에 힘의 측면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일본은 규범외교의 측면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은 비군사적인 무대가 크게 작동한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2017)에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중동과 아프리카에까지 확장할 것임을 이야기하며 대륙 간의 “연결성”의 제고를 주장한다. 2018년에 발표된 외교청서에서는 연결성의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인프라 사업(Quality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me)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퍼시픽을 위한 일본의 노력(Japan’s effort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고속도로, 항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대륙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성을 위한 지역전략은 소프트파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 무대(stage)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일본 일본 참의원 국제 경제 및 외교활동에 대한 보고서(Research Report on International Economy and Foreign Affairs, 2019)에서도 나타난다. 보고서에는 일본의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은 명시적으로 강조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및 인권과 같은 기본 가치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평화에 주도적 기여(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를 할 것이다”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일본 참의원 보고서에는 힘의 각축을 바탕으로 연기하는 근대국제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무대에서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참의원 보고서에는 ‘일본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더 많이 보급하고 일본어를 전파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화적 전략은 가치외교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일본의 심상을 보여준다. 일본의 문화를 더욱 보급하여 세계적으로 일본 문화를 통해 연결성(connectivity)을 향상시켜 평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힘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는 확실히 대비된다. 일본 참의원 보고서를 통해 주장된 일본 문화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언어 사용 증가가 아닌 문화로써 소프트파워를 축적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진의(眞意)가 담겨 있다.

일본 2050의 꿈 :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보고서 (2019)를 중심으로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2019년에 『Future Society 2050』을 제목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보고서는 2050년을 향한 두 세계와 여섯 동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꿈꾸는 2050년의 세상의 모습은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자간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쓰비시 연구소는 2050년에 다극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중 이외에도 인도 등 신흥 경제권과 기존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이 치열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여섯 동향에 있어서는 특히 두 번째 동향과 네 번째 동향이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 동향은 '패권 국가가 없는 국제질서'로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인 패권국이 없는 세상의 도래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약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2050년에는 미중 경제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인도의 경제력이 부상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일본 행정 부처들의 계획, 특히 일본 정부와 외무성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퍼시픽 구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인도를 견제하는 새로운 전략들이 추가될 것이다. 네 번째 동향은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디지털 공간과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경제의 부상을 가져오는 동시에 정부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방위기술(defense technology)의 변화로 인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망(safety-nets)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디지털 기술이 불평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잘 다루면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이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함의를 나타낸다. 이들은 이러한 조류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고 일본만의 장점과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와 기업, 개인에 의한 적극적인 도전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인의 도전정신을 고취한다. 『미래 사회 구상 2050』을 통해 일본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국제 사회의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보고서는 앞선 장에서 살펴본 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 동맹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맹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군사, 경제, 문화, 디지털 공간으로 구성된 보다 복합적 무대에서의 주인공 일본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역시 일본의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인정하고 소프트파워를 통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세계에서의 일본의 역할>의 장에서 세계의 파편화와 디지털 경제의 확대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소프트파워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프트파워의 측면에서 일본이 더 진보할 수 있는 방법은 1. 국제 협력의 틀을 만들고, 2. 성장과 안정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고, 3.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과 국제질서의 형성을 주장하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미래 사회 구상 2050』 보고서를 통해 일본몽은 정치·군사의 측면에 방점을 찍은 중국몽, 미국몽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가며

혹자는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을 따라 일본의 야심이 가득 찼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또 다른 이는 중국의 대국굴기처럼 대(大)의 모습이 아니니 꿈을 꾸기는 하는 건가,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몽은 분명히 존재한다. 21세기 일본몽은 제 2차 세계대전 전후의 힘의 무대에서 그들의 야심을 마구 펼쳐보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정치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은 채, 문화, 디지털, 소프트파워의 삼박의 합으로 구성된 새로운 무대에서의 주연으로서 연기하고자 하는 꿈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전략에서의 방향을 대륙에서 해양으로 재설정하면서 국제무대로 더욱 뻗어나가려는 원심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대 초 아베 정부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발표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몽은 상대적으로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았다.' 일본은 공식 문서나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꿈이 있음을 드러냈다. 21세기 구상간담회 보고서,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에서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의원 보고서,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보고서까지 명백히 일본몽이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자위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본의 행보에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심상이 존재한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 방법은 협력, 기술력 등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한 정치군사적 무대가 아닌 복합적인 무대 위에서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일본몽이 군사, 경제적 분야에서의 우위가 아닌 문화, 과학 기술, 정보 등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가치외교, 규범외교적 측면의 강조를 통해 일본이 국제정치의 무대(stage)를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알 수 있다. 복합무대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꿈꾸는 일본은, 앞으로도 주변국과 많은 국가들과 함께 또 다른 다이아몬드를 계속해서 구상해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황보가람, 박창건. 2020.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6권(4호), pp. 179-208.

조은일. 2020.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2호), pp. 73-103.

<일본 방위정책 개관>. 일본 : 일본국 방위성. 2004.

Aydin, Cemil. “Japan's Pan-Asianism and the egitimacy of Imperial World Order, 1931-1945”. *The Asia-Pacific Journal, no 6(2008).*

Saaler, Sven. “Pan-Asianism: A Documentary History, 1920–Presen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W. A. SZPILMAN, Christopher. 1998. *“The Dream of One Asia: Ōkawa Shūmei and Japanese Pan-Asianism”*. Munich: Iudicium. 49-63.

W. A. Szpilman, Christopher and Saaler, Sven. 2011. “Pan-Asianism as an Ideal of Asian Identity and Solidarity, 1850–Present アジアの主体性・団結の理想としての汎アジア主義――１８５０年から今日まで”. *The Asia-Pacific Journal, no 9(2011).*

“Diplomatic Bluebook”. Japa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1971-2019.

“Future Society 2050”. Japan :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2019.

“Japanese Defense White Paper”. Japan : Ministry of Defense. 2019.

“Japanese Defense White Paper”. Japan : Ministry of Defense. 2020.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Department of State. 2017.

“Report of the Advisory Panel on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and on Japan’s Role and the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Japan : The Advisory Panel on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and on Japan’s Rol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2015.

“Research Committee on International Economy and Foreign Affairs(Excerpt)”. Japan : House of Councillors, The National Diet of Japan, 2019.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 GDP growth (annual %) – China”. World Bank. 2019.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SFIP)”.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2021.

7장

The Role of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and U.S.-Japan Alliance in Deterring Chinese Gray Zone Strategy
_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조민
서울대학교

Introduction

China and its neighbor states are involved in multiple maritime disputes in both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ECS, SCS). These disputes range from territorial sovereignty to legal rights in different maritime zones. In the EC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overlapping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claims while China and Japan are in a stalemate over Senkaku/Diaoyu Islands. On the other hand, in the SCS, China, Brunei,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Taiwan, and Vietnam are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over numerous rocks and islands spread across the region. Furthermore, in the SCS, the U.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naval operations intended to preserve freedom of the seas, have also been fomenting much protest from China as it claims the operations 'undermine Chinese sovereignty.' The U.S. and Japan both see China's behaviors in ESCS as coercive and threatening to the establish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Some scholars characterize such Chinese behaviors as gray zone coercion. For this paper, the Asia Maritime Security Initiative's report on gray zone strateg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will draw from the report's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ray zone strategy. First, the authors of the report define gray zone coercion as "an effort of series or series of efforts beyond steady-state deterrence and assurance that attempts to achieve one's security objectives without resort to direct and sizable use of force" (Green, Hicks, Cooper, Schaus and Douglas 2017). For example, the use of proxies, covert military operations, and paramilitary activities each constitutes a gray zone activity. While some scholars use the term 'hybrid strategy' and gray zone strategy interchangeably, this definition views gray zone strategy to be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than the concept of hybrid strategy since hybrid strategy combines "military tactics across traditional nuclear, conventional, and or unconventional divisions" (Green, Hicks, Cooper, Schaus and Douglas 2017). Gray zone coercion is characterized by asymmetry, ambiguity, and incrementalism.

'Neither fully war nor fully peace' is another phrase often used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gray zone activities. However, if one considers Clasuwitz's definition of war that views wars to exists on continuum, it is difficult to define a threshold that separates a war from gray zone conflict (Green, Hicks, Cooper, Schaus and Douglas 2017). Due to this ambiguity, there are varying definitions of gray zone activities. However, despite this difficulty in delineation, most of those varying definitions tend to use 'conventional war' as the ceiling. An actor is more likely to employ gray zone strategies under two conditions; when it attempts to alter some element of status quo and when it perceives its opponent as having an advantage at higher levels of escalation.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in which the stability at a higher level of conflict incentivizes challenges at a lower level of conflict well explains this tactic; US conventional military dominance encourages competitors to seek more limited changes to the status quo (Green, Hicks, Cooper, Schaus and Douglas 2017).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ole of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JMSDF) in deterring such gray zone strategies, specifically those employed by China. JMSDF operates as Japan's nav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dissolution of Imperial Japanese Navy. As an island country with the sixth largest EEZ in the world and 90% of its trade dependent on seal lanes of communication (SLOCs), maritime

stability is critical to Japan's security and prosperity.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rom 2013 and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rom 2018 define three goals for the force; to defend Japan's territory and surrounding areas, to secure the safety of maritime traffic, and create desirable security environment (JMSDF 2020).

Due to the increasing tensions in the ESCS and the subsequently mounting pressure, the U.S. has been promoting Japan's assumption of a bigger security role in the region. In harmony with this, until the recent resignation,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ere eager to find policy options to further this movement. Indeed, Japan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ts role in the SCS, which is not its direct domain, by enhancing its defense cooperation and capability-building activities with various Sou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Philippines, another U.S. treaty ally.

In examining these situations, a few questions emerge. In countering China's slowly increasing assertiveness in the region, what role can the JMSDF play? What implications does the U.S.-Japan alliance have in the context of such Asian maritime disputes and U.S.-China competition? Probing these questions will not only give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maritime disputes in Asia but also shed light on what role the U.S. alliances in Asia can affect the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n era of low-intensity conflict.

Literature Review

Asian maritime disputes and U.S.-Japan alliance In the context of U.S.-Japan alliance, deterring China's coercive behaviors means incorporating components of general-extended deterrence. In the specific case of U.S.-Japan alliance, reassurance and burden-sharing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Defense Guideline between the two allies; while the former clearly ensures the U.S. commitment to Japanese defense, the latter reveals that both parties want an expanded Japanese security role in maintain the existing global order by sharing greater responsibilities (Satake 2016). Maintaining a united front among the allies and displaying resolve and commitment, all widely understood components of alliance success, are also drawn from the U.S. alliance experiences in the face of SCS disputes as well (Holmes and Yoshihara 2017).

The role of JMSDF in countering Chinese Coercion In examining the role of JMSDF in the ECS, some argue that Japan's Coast Guard (JCG) and JMSDF must increase their interoperability and integration since the binary system limits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ian agency and military agency and further challenges successfully coping with gray zone operations (Pajon 2017). Meanwhile, some call on

drastic changes to the self-defense force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emerging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gion (Shimodaira 2014). While different authors have different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for how the JMSDF could transform so as to counter China's coercive maritime behaviors, many agree that there is room for change to better address the issues.

China's activities as gray zone operations With the exception of some who argue that the term 'hybrid strategy' is more appropriate, most scholars use the term 'gray zone activities' in describing China's coercive behavior in the ESCS (Patalano 2018). In most literature discussing the issue, gray zone situation represents neither peacetime nor wartime situation and gray zone strategy constitutes a strategy through which a country tries to achieve its security objectives without direct and sizable use of force (Pajon 2017). In the ECS, both components of time and space in China's strategy for the region fit the definition of gray-zone; while in terms of time, China is trying to slowly change the status quo as it rises, in terms of space, it is gradually increasing its presence around Senkaku/Diaoyu Islands space. Both are done at a pace slow enough to avoid stepping over Japan's red line (Saito 2018). Furthermore, China's behavior in the SCS are also largely looked through the lens of gray zone activities; examples include China's integration of paramilitary forces comprising

of fishing and merchant vessels, the seizure of Scarborough Shoal after a standoff with the Philippine Navy, and the massive land reclamation and island-building activities. These gray zone activities that tiptoe around the red line are also quite not enough to provide a *casus belli*, and as a result, the U.S. has been finding itself with limited options to come to the defense of its treaty allies more aggressively. This, in turn, raises questions about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its Asian allies, a potentially powerful trigger that could gradually alter the established regional order and security architecture (Holmes and Yoshihara 2017).

Gap in the literature While it is generally agreed that China's activities in ESCS could be understood through the lens of gray zone operations, there is some disconnect between the established literature on U.S.-Japan alliance and China's gray zone strategies. Contextualizing the former in terms of the latter will enable us to further understand how general-extended deterrence and alliances transpire in a world where a full-blown interstate military conflict is becoming increasingly rare but the tensions between great powers are mounting. Furthermore, by focusing on the role of JMSDF, this paper will add to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ecurity cooperation as well as Japan's future security role in the region.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will employ the framework of classical bargaining theory's means of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Bargaining theory is often referred to as 'the workhorse' theory of war and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approaches for explaining war initiation, escalation, and termination (Lake 2010). Fearon's costly signals further explain important aspects of the bargaining theory. Two means of signaling an actor's foreign policy interests are important for this paper. One is tying hands, which is deterrence by punishment. Militarily, formal alliance treaties or trip-wire forces serve this purpose while diplomatically, public statements that create domestic audience cost that will incur *ex post* if not followed through are an example. On the other hand, sinking costs is deterrence by denial; taking actions that are costly *ex ante*. For instance, militarily, increased defense spending, troop mobilization, arms buildup, foreign land troop stationing all constitute cost-sinking. Economically, sanctions on target actors and increase in trade ties with allies serve this purpose (Fearon 1997).

Additionally, Huth's work on extended deterrence will guide the U.S.-Japan alliance and extended deterrence aspect of this paper. Two variables in measurement of extended deterrence credibility and stability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here. The first is the value of the

Protégé state to the Defender state, measured b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alliance, Defender to Protégé arms transfer, and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Another is the scale of escalation; the first level, a symbolic show of force or display of military presence (naval visits to ports of protégé, the dispatch of a warship to a coast of protégé, naval reconnaissance off cost of protégé) and the second level, a demonstra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naval exercises or war games held near the coast of the protégé or adversary) will be used (Huth 1991).

Methodology

This paper will employ the qualitative method. It will first collect information relevant to national interest, security strategy, regional strategy and recent military activities from official documents from the respective governments of the U.S. and Japan. These will include defense white papers and strategy report documents. Then, employing deductive reasoning, this paper will examine them through the lens of the previously 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borrowing from bargaining theory, foreign policy interest signaling, and Huth's work on extended deterrence. The analysis will focus on the role of JMSDF and the U.S.-Japan alliance in deterring Chinese gray zone strategy.

Analysis

China's Gray Zone Activities in the SECS The U.S. defines China's campaign of low-level coercion aimed to assert control of disputed spaces as gray zone activities. Such a perception is clear in the quote "China is using a steady progression of small, incremental steps in the "gray zone" between peaceful relations and overt hostilities to secure its aims, while remaining below the threshold of armed conflict." In this definition, political warfare, disinformation, use of anti-access/area denial (A2/AD) networks, and economic leverage are categorized as gray zone coerc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A plethora of specific Chinese activities represent this strategy. For example, in the SCS, the Scarborough Shoal standoff which started in 2012 is a low-level coercion that continues to pressure the comparatively weak Philippines. Through the use of fishing vessels, import bans and fishing bans on the Philippines, China incrementally pushed for its *de facto* control of the feature. In the present day, Chinese Coast Guard maintains a constant presence in the area. In this instance, China did not engage in a full-scale armed conflict, but still escalated

low-level tensions and at the end coerced the Philippines out of Scarborough Shoal (Mazarr 2015).

On the other hand, in the ECS, China's proclamation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and frequent scrambling of its fighter jets exemplify China's gray zone strategy in the region. Like its actions in the SCS, China's actions surrounding the contested Senkaku/Diaoyu Islands are also intimidation short of full-scale warfare; China has been not only increasing its naval presence around the feature but has also been employing media fusillades and diplomatic protests as well as economic tools of coercion. For instance, in 2010, when the Japan Coast Guard boats and a Chinese fishing boat collided and JCG took the Chinese crew, China put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rare earth mineral to Japan (Hornung 2020).

These Chinese activities display all three of the previously mentioned characteristics of gray zone strategy; asymmetric capabilities, ambiguous status between clear aggression and low-intensity conflict, and most of all, incrementalism. Especially in the SCS, China has been "salami slicing its way" to achieving its objectives while cautiously and intentionally avoiding high-intensity conflict or military conflict so as to create a "sufficient balancing dynamic to effectively check its activities" (Mazaar 2015).

U.S. Interests and Strategie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published by the White House clearly lists China as the biggest threat in the region. The document emphasizes that while the U.S. seeks to cooperate with China, it strongly disagrees with China's use of economic inducements and penalties, influence operations, and implied military threats aiming to engage in low-level coercion and advance it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As some of the American efforts at countering these gray zone activities, this document emphasize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its regional allies. South Korea, followed by Japan and Australia are mentioned in stating that the U.S. welcomes and supports the strong leadership role of its allies. Additionally, this document sets the assurance of freedom of the seas and "peaceful resolution of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its priority goal (The White House 2017).

On the other hand, *Free and Open Indo 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a document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emphasizes the U.S. commitment to upholding the open seas in the region in which all states are "secure in their sovereignty and able to pursue economic growth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nd principles of fair competition." This document highlights four values; (1) respect for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all nations; (2)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3) free, fair, and reciprocal trade based on open investment,

transparent agreements, and connectivity; and (4) adherence to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s NSS does, this document also puts a strong emphasis on cooperation collective action with its like-minded allies and partners in managing transnational issues such as piracy and terrorism and protecting the maritime freedom. Japan in specific is mentioned in two ways; one is through the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which engages the U.S., Australia, and Japan on "matters in such as sustainab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maritime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while the other is the Quadrilateral Consultation with Australia, India, and Japan. Additionally, the document's emphasis of its policy overlap with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concept, India's Act East Policy, Australia's Indo-Pacific concept, and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displays the value the U.S. puts on a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The Department of State 2019).

Finally,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opens with a message that defines the Indo-Pacific as its priority theater. As the previous document does, this one also highlights "the competition between free and repressive world order visions" as the primary challenge for the U.S. national security. It also specifically points to the PRC and the China Communist Party

(CCP) as seeking to "reorder the region to its advantage by leveraging military modernization, influence operations, and predatory economics to coerce other nations." Furthermore, its detailed mention of China's pursuit of the previously mentioned A2/AD strategies is noteworthy; the document records that these A2/AD capabilities could be "used to prevent countries from operating in areas near China's periphery." In further explaining China's "use of military presence to exert *de facto* control over disputed areas," it specifically touches upon the SCS as well as Senkaku Islands in the ECS. In delineating the security environment, this document specifically uses the term 'gray zone strategy' to describe Chinese low-level coercion.

Additionally, this document also emphasizes the U.S. efforts in building a network of partnerships capable of aggression deterrence, stability maintenance and common domains access preservation. Among the various multilateral relationships this document mentions, five includes partnerships between Japan-ROK-U.S., Australia-Japan-U.S., India-Japan-U.S., and the quadrilateral consultations (Quad) between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S. The document reiterates that the U.S. cannot address the newly emerging challenges alone and it must work with like-minded allies and partners (The Department Defense 2019).

Japan's Interests and Strategies In August 2016, Prime Minister Shinzo Abe first unveile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concept, aiming to foster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through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The three pillars of this concept include; (1) promo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freedom of navigation, and free trade (2) pursuit of economic prosperity (3) commitment to peace and stability.

The Japanese defense white paper's section on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of Self-Defense as well as the government's view on Article 9 illustrate the legal changes that prepare Japan to take on a greater military role. With the new legislation in 2014, under the "Three New Conditions," Japan is permitted to exercise measures of self-defense. The three conditions include: (1)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has occurred, or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a foreign country that is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Japan occurs and as a result threatens Japan's survival and poses a clear danger to fundamentally overturn people's right to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2) When there is no appropriate means available to repel the attack and ensure Japan's survival and protect its people; (3) Use of forc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0).

On the other hand, Japan's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published in 2018 clearly identifies gray-zone situations as a critical threat to Japan's national security. In delineating the threat China poses on Japan, these Guidelines recognize China's high-level growth of

defense expenditures and lack of transparency in its defense policy and military power and China's unilateral and coercive attempts to alter the status quo as major issues. In expanding upon these points, the document mentions both the ECS and the SCS; it identifies China's constant violation of Japanese territorial waters around the Senkaku Islands as a major threat to itself and China's large-scale land reclamation and militarization of the disputed features in the SCS as a threat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n order to face these challenges and protect Japan's national interests, these guidelines proclaim that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its own architecture for national defense as well as Japan-U.S. Alliance. A key component of the latter worth mentioning here is Japan's intention on increasing Japanese and U.S. pres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guidelines state that Japan will conduct various bilateral activities including capacity-building assistance, humanitarian assistance/disaster relief and counter-piracy (Japan Ministry of Defense 2019).

US-Japan Alliance Interests and Strategies The latest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published in 2015, has a major difference from its previous version published in 1997; for the first time, the guidelines specify the role of the U.S. military and the SDF in cases of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ese islands. Although the

U.S. military's operations during this occasion are limited "to support and supplement the SDF' operations," its significance is in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de a commitment to defend Japanese offshore islands, which encompasses the disputed Senkaku islands (Japan Ministry of Defense 2015).

On the other hand, the joint statement after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meeting in 2019 affirmed the alignment of the two countries' regional strategic policies. The statement recognizes the common emerging challenges that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emphasizes cooperation between partners and allies. In particular, the ministers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unilateral coercive attempts" in the ESCS. This 2019 joint statement also reconfirmed the previously mentioned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Japanese offshore islands by stating that Article V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pplies to the Senkaku Islands. Both side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alliance capabilities and increasing operational readiness and cooperation (Japan Ministry of Defense 2019).

Another noteworthy point in this statement is that the U.S. welcomes Japan's "proactive steps to strengthen its defensive capabilities, with the Ministers confirming that both nations need to constantly re-evaluate their roles, missions, and capabilities." The statement also mentioned the two allies'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other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 such as the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and trilateral joint exercises.

Signaling: Tying Hands and Sinking Cost In signaling their alliance commitment, the U.S. and Japan employ several signals. First, the U.S.-Japan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and the recent affirmation of the U.S. commitment to defending Senkaku Islands tie hands militarily and diplomatically, respectively. Second, JMSDF's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and arms buildup as well as the U.S. troops stationed in Japan sink costs. The below figure shows the change in Japan's military expenditure in the past fifteen years. After the gradual decrease between 2006 and 2012,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at a higher rate than the initial decrease.



Figure 1 Change in Defense-Related Expenditures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1a)

Furthermore, Japan's buildup of defense capability in fiscal year 2020 shows Japan's significant investment in its maritime capabilities; the buildup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construction of two destroyers, a submarine, and a minesweeping vessel and the partial refurbishment of Destroyer JS IZUMO for takeoff and landing by F-35B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1a). F-35B, variant of the American F-35 fighter that is capable of short takeoffs and vertical landings are a great fit for JMSDF's helicopter carriers that resemble an aircraft carries. In 2018, Japan acquired 42 F-35B fighters for carrier duty. Furthermore, in line with the 2018 National Defense Policy Guidelines that presented Japan's plans to add three more submarines to its 19-boat fleet by 2023, in October 2020, JMSDF launched JS Taigei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1a). On the other hand, 54,000 military personnel to Japan, in the U.S. Navy's Seventh Fleet, U.S. Marine Corp's III Marnie Expeditionary Force, 3 Air Force wings, and smaller U.S. Army and Special Operations units (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Some joint naval engagements are worth noting as well. For example, between May 2 and 8, 2019, the first joint sail by U.S., Indian, Japanese, and Philippines navies took place. This four-way naval engagement with six ships sailing through the SCS demonstrated presence and cooperation (Panda 2019). In terms of exercises, among the 60 exercises (1 planned but canceled due to COVID-19) that took place

in 2020, nine were in the SCS; (1) Japan-Singapore in June (2) Japan-U.S. in June (3) Japan-U.S. in July (4) Japan-Philippines in July (5) Japan-Australia-U.S. in July (6) Japan-Australia in September (7) Japan-Indonesia in October (8) Japan-U.S. in October (9) Japan-Australia-U.S. in October.[1] These broader engagements in regions that do not directly concern Japan's homeland security illustrate Japan's plan to assume a larger role in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The Role of JMSDF However, the gap between the maritime capabilities between the U.S. and Japan is considerable. In considering naval strengths of different countries, the author believes that examining the range of power projection is more important than simply studying the number of assets. Only considering the number of assets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actual capabilities. For example, Global Firepower counts that the North Korean Navy possesses 492 assets in total while the U.S. Navy trails this with 490 assets. Meanwhile, the dataset shows that JMSDF's naval assets totals at 155 (Global Firepower 2021). Hence, to get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naval capabilities of the U.S. and Japan, this paper instead studied the Todd and Lindberg classification system that ranks blue-water navies into 4 classes depending on power projection; (1)global-reach power projection

[1] "Exercises," JMSDF, https://www.mod.go.jp/msdf/en/exercises/.

(2)limited global-reach power projection (3)multi-regional power projection (4)regional power projection (Todd and Lindberg 1996).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the U.S. is the only country that qualifies as having global-reach power projection, capable of carrying out multiple and sustained global power projection missions. On the other hand, Japan is included in the fourth rank as it is has limited range power projection beyond EEZ.

Hence, it is more realistic that in striving to increase Japan's role in the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neither country expects JMSDF to rapidly develop its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or increase its number of assets. Likewis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expect Japan to suddenly become a security partner that cooperates with the U.S. on its global missions with a comparable level of contribution. Rather, it is more likely that in attempting to increase Japan's role in the U.S.-Japan alliance and deterring China's gray zone activities, both parties envision that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its naval capabilities and assets and rise through the ranks. Meanwhile, Japan is starting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region in which many countries are caught in the U.S.-China competition. Such a Japanese role could considerably lighten the load of the U.S. in the Indo-Pacific region. For instance, as previously examined, Japan's bilateral and naval exercises and trainings have primarily been with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India,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the Singapore. In short, while the U.S. and Japan aim to expand Japan's role in their security cooperation and deterring China's gray zone activities, because of the limited naval capabilities of JMSDF, JMSDF's proactive role is mostly limited to the Indo-Pacific.

Conclusion

Both the U.S. and Japan clearly express their concerns over China's gray zone coercion, low-intensity conflict and escalation through which China has been trying to advance its national interests by increasing its presence and establishing *de facto* control of disputed areas. Both parties view such actions as threaten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Both countries emphasize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llies is integral to addressing these challenges. In various strategy documents, the U.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ts cooperation with its partners and allies and strengthening those relationships through developing them in to an extended network. Japan's official documents also show that its alliance and partnership network strategies align with those of the U.S. Furthermore, JSDF is also transforming. For example, it revised its security guidelines and also enacted a law that adds 'Three New Conditions' under which Japan is permitted to practice measures of

self-defense.

These strategies are reflected in the costly signal activities that two countries engage in. The alliance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S. statement affirming its commitment to defending Japanese offshore islands signal the U.S. commitment by tying hands. On the other hand, the U.S.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its bases in Japan, the U.S. arms sales to Japan, Japan's own arms buildup and increased defense spending, and various joint exercises sink cost to signal their foreign policy interests. Most notably, thes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becoming a 'network.' As the U.S. emphasizes that one country cannot address these 21st century challenges on its own, Japan is starting to engage more proactively, especially in the SCS.

US deterring China's gray zone coercion, especially in the ESCS which is a sea that does not surround the continental U.S. is a difficult mission. As the logic of extended deterrence dilemma shows, it is not inherently credible that the U.S. would risk D.C. or New York for Paris or Bonn. This might precisely be one of the reasons why China is engaging in gray zone activities in the ESCS; it does not believe that the U.S. has sufficient interest in the region to risk launching a major escalation in the conflict. However, through signaling activities between the U.S. and JSDF and the networking efforts the JSDF puts in in forming a network of like-minded partners, especially with ASEAN

countries, the U.S. and JMSDF can play an integral role in deterring China's gray zone activities in the ESCS.

Bibliography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2019.

The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 Shared Vision*. Nov 2019.

Erikson, Andrew S., Lyle J. Goldstein and Nan Li, , *China, the United States, and 21st-century Sea Power: Defining a Maritime Security Partnership*.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0.

Fearon, James D.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 no. 1 (February 1997): 68–90.

Green, Michael, Kathleen Hicks, Zack Cooper, John Schaus, and Jake Douglas.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7).

Global Firepower. “Navy Fleet Strengths (2021).” Accessed Feb 18. https://www.globalfirepower.com/navy-ships.asp.

Holmes, James R. and Toshi Yoshihara. “Deterring China in the “Gray Zone”: Lessons of the South China Sea for U.S. Alliances.” *Orbis* 61, no. 3 (2017)

Huth, Paul K.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Yale University Press, 1991.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20.*

Japan Ministry of Defense.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2015. Accessed Jan 8, 2021. https://www.mod.go.jp/e/d_act/us/anpo/shishin_20150427e.html.

Japan Ministry of Defense.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019 Accessed Jan 8, 2021. https://www.mod.go.jp/e/d_act/us/docs/201904_js.html.

JMSDF. “Exercises.” Accessed Jan 8, 2021. https://www.mod.go.jp/msdf/en/exercises/.

JMSDF. “Mission.” Accessed Oct 8, 2020. https://www.mod.go.jp/msdf/en/about/role/.

Lake, David A. "Two Cheers for Bargaining Theory: Assessing Rationalist

Explanations of the Iraq War." *International Security* 35, no. 3 (2010): 7-52.

Mazarr, Michael.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U.S. Army War College. U.S. Army War College, 2015.

"Navy Fleet Strengths (2021)," GlobalFirepower, https://www.globalfirepower.com/navy-ships.asp.

O'Rouke, Ronal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Pajon, Céline. "Japan's Coast Guard and Maritime Self-Defense force in the East China Sea: Can a Black-and White System Adapt to a Gray-Zone Realty?" *Asia Policy,* no. 23 (2017).

Panda, Ankit. "US, India, Japan, Philippine Navies Demonstrate Joint Presence in South China sea." *The Diplomat*. May 11,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5/us-india-japan-philippine-navies-demonstrate-joint-presence-in-south-china-sea/.

Patalano, Alessio. "When strategy is 'hybrid' and not 'grey': reviewing Chinese military and constabulary coercion at sea." *The Pacific Review* 31, no. 6 (2018).

Saito, Yusuke. "China's Growing Maritime Role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hina's*

Bulewater Navy Series (2017).

Satake, Tomohiko. “The New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and an Expanding Japanese Security Role.” *Asian Politics&Policy* 8, no. 1 (2016).

Shimodaira, Takuya.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in the Ag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Naval War College Review* 67 no. 2 (2014).

Takahashi, Sugio. “Development of gray-zone deterrence: concept building and 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 *The Pacific Review* 31, no. 6 (201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Todd, Daniel, and Michael Lindberg. *Navies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e Strained Symbiosis*. Praeger, 1996.

8장

Taking Stock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LAN) Modernization:
Evidence of Increasing Assertiveness Against Taiwan
_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김상훈
고려대학교

Introduction

There seems to be a nation-wide consensus in the United States that China clearly is a revisionist power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assertive against its neighbors. Andrew Yeo (2019) found that the adjective "assertiveness" has been frequently attached to "China" since 2009 throughout the U.S. literature from news articles to academic writings.[1] In line with the prevailing opinion on China,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2020) recently gave a speech at the

[1] Also see, Adam Breuer and Alastair Iain Johnston, "Memes, narratives and the emergent US-China security dilemma,"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2, no. 4 (2019).

Nixon Library and referred to China as a "Marxist-Leninist regime" and Xi Jinping as 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 The symbolic speech signals a break from engagement initiated by Nixon in his meeting with Mao Zedong in 1972. Donald Trump has long taken a wide-ranging adversarial stance against China—waging a trade war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in 2017, imposing travel bans on Chinese citizens, and recently publishing a report that stated China aims to revise the world order.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2020) Trump (2020) also blamed China fo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and urged member states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additio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2020 China Military Power Report' clearly states that "China's national ambitions and governance systems, coupled with growing means and opportunity, induce it to adopt more assertive and revisionist policies." A more competitive U.S. stance towards China is not a unique feat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nstead has become a "new consensus, encompassing both parties, the military establishment, and key elements of the media" (Zakaria 2020, 52).

The U.S. DoD report's logic that a country will become more assertive and revisionist when they have the means and opportunity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mainly vested in an offensive realist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example, John Mearsheimer

(2014, 379-380) argues that "if China continues its rapid economic growth, it will almost certainly become a superpower, which means it will build the power-projection capability necessary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globe." The logic is simple: the international system is anarchic, meaning that there is no central authority that can mediat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states, and therefore has to act upon the mandate of self-help to ultimately ensure one's survival in the system. For China, controlling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is a matter of survival because the maritime trade routes are crucial to maintaining economic growth (Wei 2017, 172). Naturally, for offensive realists, China becomes inevitably assertive in the form of rapid naval modernization to establish control over the sea routes which is currently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What exactly is an "assertive" foreign policy? On what grounds is China assertive against Taiwan?

The problem with offensive realist arguments is that it singularly provides conflictual prescriptions on state behavior—power maximization—based on given assumptions of state actors and the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Kenneth Waltz (1996, 54-57) wrote resolutely,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foreign policy." In brief, the two are different because the ordering principles at the system-level (anarchy) is different from that at the state-level (hierarchy), and therefore,

explaining particularities of state behavior (foreign policy) relying on system theories is fundamentally erroneous. Accordingly, stipulating Chinese foreign policy as assertive based on offensive realism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deemed erroneous. Hence, if one demands elaboration on "what constitutes an assertive foreign policy?" towards offensive realists, the answer probably would be, "a theory at one level of generality cannot answer questions about matters at a different level of generality." (Waltz 1979, 121) The point here is that explanations of Chinese foreign policy solely based upon exogenous variables are unwarranted and that complementary indicators must be factored in to the discussion.

The research question bears significance because as Iain Alastair Johnston (2013, 7-8) pointed out, "the new assertiveness meme could contribute to an emerging security dilemma in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narrow down public discourse to adversely obstruct alternative perspectives from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 The unwarranted practice of attaching "assertiveness" to China can aggravate the already-intensifying mistrust and misconception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Several caveats need to be addressed before delving into the discussion. First,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argue that the sources of Chinese conduct at sea is rather benign as may have been suggested above. As a matter of fact, the article concludes that China is

indeed assertive against Taiwan, but comes to the conclusion by evaluating the Chinese naval capabilities. Second, the article focuses on the maritime domain because "it is China's maritime claims that best manifest its political determination and confrontational stances in recent yea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eign policy has many facets, and it is impossible to generalize on what a country's foreign policy looks like as a whole. Instead, a study of foreign policy "must rest content with mere "analyses" or "accounts," which include whatever factors appear relevant to a particular case" (Rose 1998, 145). Here, the focus is on China's policy towards Taiwan and aims at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 of assertiveness. Considering that there are two policy instruments—instruments of persuasion and coercion—in a foreign policy strategy, the focus on the PLAN development is a necessary complement to other factors such as diplomacy. (Grieco, Ikenberry, Mastanduno 2015, 107). Finally, the article does not intend to present a "theory of foreign policy" or attempt to reconceptualize "assertiveness," but to build on the existing definition as "a form of assertive diplomacy that explicitly threatens to impose costs on another actor that are clearly higher than before" (Johnston 2013, 10).

The Motivations of PLAN Modernization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subsequent moderniza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LAN) has aroused debate in the academic and policy circles on what the motivations are for the recent developments. There have been three major perspectives: (1) the offensive perspective that emphasize China's increasing assertiveness and intentions of revising the U.S.-led order, (2) the defensive perspective that is in line with the narrative of a peaceful rise with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and (3) the domestic legitimation perspective that looks into the second-image variable to explain Chinese behavior. This section concludes that motivations are insufficient in characterizing China's naval policy.

First, James Fanell (2019, 2) considers China's naval modernization as part of a revisionist strategy to supplant the U.S. presence in the region. The basis of such assessment comes from China's recent activities at sea—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declaration of a Chi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ADIZ) in 2013; and resistance against the adjudication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in 2016. Fanell finds China's naval modernization project linked to the "Chinese Dream" of national rejuvenation, and expects China to become increasingly aggressive, raising the danger of a "naval disaster, the likes of which we have not

experienced since the early, dark days of World War II" (Fanell 2019, 3). His bleak prescription of the future is mainly based on the 1) increasing number of PLAN forces and 2) increasing far-seas deployments around the globe. First, Fanell (2019, 33) anticipates that the PLAN will likely have "twice as many warships and submarines as the US. Navy" over the next fifteen years. Also, referring to the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ONI) estimates, by 2030, China is anticipated to have 450 surface ships and 99 submarines, an increase from 330 surface ships and 66 submarines in 2015. Second, Fanell views China's increasing presence in the far-seas as evidence of China's bid for global hegemony. For example, China has been conducting anti-piracy operations since 2008 near the Gulf of Aden; Russia and China have been conducting combined naval exercises since 2012 in various venues including the Baltic Sea; and China has been investing in ports overseas, such as in Djibouti, used mainly for military purposes. In conclusion, the author urges the United States to take immediate action to counter growing Chinese influence in the global maritime domain, lest "expect to be seen as globally irrelevant, with all the negative consequences for our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the defense of our values" (Fanell 2019, 40).

Contrary to Fanell's view of understanding Chinese naval modernization in parallel with China's growing hegemonic ambitions,

Michael Glosny and Phillip Saunders (2009, 166) argue that "the PLAN is much more likely to develop a *limited* [emphasis added] power-projection capability that increases China's ability to defend regional interests in contingencies not involving the United States." Glosny and Saunders argue that the purpose of developing naval power-projection capabilities such as the aircraft carriers are rather benign—for humanitarian assistance (via the hospital ship), naval diplomacy, and peacekeeping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It is true that China's Navy has grown in size and quality, but the authors state that it simply reflects China's greater responsibility to provide global common goods and to share international burdens against transnational threats at sea. Furthermore, Glosny and Saunders highlight the limited ability of Chinese naval technologies. For example, Chinese leaders acknowledge that their aircraft carriers are uncontestable (in a negative way) to the U.S. aircraft carriers in terms of size, quantity, propulsion, etc., but that the limitations are somewhat intended, to take a cautious approach not to provoke an arms rac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develop naval forces to protect its overseas interests.

Finally, Robert Ross (2009) looks within China and finds that "nationalism, rather than security, is driving China's naval ambition." First of all, he distinguishes land powers from sea powers and argue that categorization of a great power to either one depends on the enduring

geographical circumstances rather than cultural/historical predispositions.[2] China, therefore, can be classified as a land power because it faces "enduring and significant strategic challenges emanating from interior threats to their border security" (Ross 2009, 48).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Great Power politics, case studies show that when land powers divert resources on developing naval assets to compete for naval supremacy with another rival, the land powers always end up in defeat. For example, Napoleon of France, despite being a continental power, increased its naval budget by more than 30 percent in the 1860s and built large capital ships, only to constrain the country's finances and eventually lead to its downfall at Fashoda in 1899. The German Kaiser Wilhelm II also attempted to counter British naval primacy by investing in construction of dreadnoughts and spending approximately 20 percent of its budget on naval forces, only to find itself in blockade in which the British allocated almost 60 percent of the budget on the navy. In other words, Ross argues that geographical constraints are key determinants of optimal military strategies that a Great Power must depend on—land powers focusing on the army while

[2] For more information on continental/maritime power distinction see,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New York: Vintage Books: 1987); Jack S. Levy and William R. Thompson, "Balancing on Land and at Sea: Do States Ally against the Leading Global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35, no. 1 (Summer 2010); and John K. Fairbank, "China's Foreign Policy in Historical Perspective," *Foreign Affairs* 47, no. 3 (April 1969): 449-463.

sea powers focusing on the navy. The failure to follow the dictums of inherited geographical circumstances leads to its downfall, just as France and Germany under the rule of Napoleon and Wilhelm II have experienced in the past. Then can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the defense budget to the navy by land powers be blamed upon the leaders solely? According to Ross (2009, 50), it is *nationalism* that drives states to seek prestige to bolster domestic popularity. Similarly, China's naval buildup is driven by nationalism, "a widespread popular demand for construction of an aircraft carrier and a large blue-water navy, traditional symbols of great power status" (Ross 2009, 60).

Can motivations explain state behavior? Partly yes, but not fully so. Fanell believes that China has revisionist motivations and therefore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battle ships and dispatching naval task groups further ashore. Glosny and Saunders, on the other hand, find peaceful motivations for Chinese naval modernization as modest attempts to prevent an arms race vis-à-vis the United States an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opposite interpretation of the same behavior mainly derives from prior assumptions on motivations without elaborating on what makes a state revisionist or status-quo in the first place. Ross finds nationalism to be the key variable of PLAN naval build up, reflecting domestic calls for heightened international status. The problem in all three perspectives is

that motivations need not match the character of the behavior. Without much emphasis needed, even if China had peaceful or defensive intentions to modernize the Navy, others will perceive it as a threat (Jervis 1978). Absent of objective indicators that characterize Chinese behavior as assertive or non-assertive, the interpretation of Chinese foreign policy will always depend on the eye of the beholder. This is why China's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is seen as an attempt to increase global presence, reflecting China's growing hegemonic ambitions, or as sincere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Moreover, as Randall Schweller and Xiaoyu Pu points out: "In multipolar and bipolar systems, balancing is the primary mechanism to preserve the status quo. Under unipolarity, in contrast, balancing becomes the very definition of revisionism: the goal of restoring a global balance of power requires the overthrow of the existing unipolar structure" (Schweller and Pu 2011, 44-45). In other words, if state behavior is simply derived from systemic understandings of polarity, then whatever China does in a unipolar world, every policy will be interpreted as revisionist. Blurring the assertive/non-assertive particularities into a single "revisionist" category is analytically unsound and carries the danger of "narrowing down public discourse." Instead, as Charles Glaser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a grand bargain 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sessment of the

military posture needs to be added to the analysis while accepting the fungible nature of state motivations (Glaser 2015). The next section takes stock of the Chinese naval modernization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naval forces. The examination will center around the aircraft carriers, nuclear-submarines, surface ships, amphibious ships, and related naval exercises to argue that China is increasing landing capabilities through acquisition of amphibious vessels and relevant training while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 submarines are intended to deny U.S. access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Evaluating China's Naval Modernization

Aircraft Carriers

The *Liaoning*, China's first aircraft carrier commissioned in 2012, has a long history of acquisition that dates back to the 1970s. Andrew Scobell, Michael McMahon, and Cortez Cooper (2015) summarizes the history of China's development of an indigenous aircraft carrier in association with a prominent PLAN leader Liu Huaqing. The idea to build a blue-water-capable naval asset in China was first promoted by Liu when he proposed preparation plans for attaining an aircraft carrier to his military

superiors in 1970. However, the idea was largely disregarded at the time b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since the main threat to China originated from the Soviet army. After Mao Zedong's death and the succession of Deng Xiaoping who partially opened up the closed economy since 1978, protecting international maritime trade routes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and thus, demanded a stronger naval presence at sea. Reflecting greater attention put on improving naval capabilities, Liu, being promoted to commander of the PLAN, soon established a naval institute to conduct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acquiring an aircraft carrier. By the late 1990s, the Soviet Union had long been dissolved and greater emphasis has been put on developing advanced naval assets with a continued rapid economic growth. In 1998, a Chinese company had assumed a former aircraft carrier (the *Varyag*) from Ukraine in order to re-manufacture it into a floating casino near Macau. However, the business plan was soon found to be unrealistic as the waters near Macau was too shallow to stage a massive ship near the shores. Instead, it was sent to the northern port of Dalian in 2002. The Chines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CMC), a military body parallel to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finally approved the plan to redirect the ship into an aircraft carrier in 2004. In sum, the history of China's decision to acquire an aircraft carrier reveals unpopularity of the aircraft carrier until the 1980s, but gradually rising to demand with increasing

interests to protect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Moreover, the CMC and the PLA in general, was disinterested enough in modernizing naval capabilities as to find the once-planned-casino-vessel as an initial aircraft carrier. As a matter of fact, the *Liaoning* has been considered as a "starter" aircraft, using it mostly for pilot training (O'Rourke 2020, 13). Compared to the U.S. Navy carriers, the *Liaoning* is conventionally powered (steam engine); carry less fixed-wing aircrafts (24 versus 55 of USS *Ronald Reagan*); smaller in size (60,000 tons versus 88,000 tons of USS *Ronald Reagan*); and use ski-jump racks to launch fighter jets from deck rather than the catapult system (CSIS China Power 2020). Five years after the commissioning of *Liaoning*, China launched the second-generation aircraft called the *Shandong* in 2017. Although, many features including the jet launch system from deck, weight, and length are similar to the previous model, there are some notable differences that make *Shandong* more advanced. First, the latest aircraft carrier can carry four more fixed-wing aircrafts or eight more helicopters depending on the decision to allocate aircrafts onboard. This was possible by enlarging the airwing and reducing the size of the island bridge by 10 percent, providing additional space on deck for more aircrafts (CSIS China Power 2020). However, the biggest limitation to the *Shandong*, as well as the *Liaoning*, is that the aircraft launch system hinders strategic utility of the fighter jets. While the Shenyang J-15

Flying Shark jets can theoretically base 2 YJ-83K Eagle Strike antiship missiles; 2 short-range PL-8 air-to-air missiles; and 4 bombs, the Short Take Off Barrier Arrested Recovery (STOBAR) system of the aircraft carrier disallows the fighter jets to launch with full-load (Curnow 2020). In sum, the Chinese aircraft carriers are no match to the nuclear-powered carriers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 United States currently operates 11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Nevertheless, China's aircraft carrier program is at the forefront at least in the Asia-Pacific region. India operates one aircraft carrier while the second is "already more than five years behind schedule"; Japan is in the initial stages of converting the Izumo DDH-183 into an aircraft carrier (Matheswaran 2020; Ortiz 2020); South Korea and ASEAN states possess none. Furthermore, China's third aircraft carrier is under construction and is expected to launch in 2022. Although it is expected to be conventionally powered and feature similar capabilities to the preceding models, satellite imagery show that the third carrier will be bigger in size and possibly be equipped with electromagnetic catapults (Joe 2020). By 2035, reports estimate that China will have at least six operating aircraft carriers. The *Liaoning* is stationed in the North Sea Fleet and *Shandong* will presumably be stationed in the Hainan province considering a grand ceremony held there before moving back to Dalian for maintenance (Liu 2020). Overall, despite substantial improvements

since 2012, the utility of aircraft carriers for coercion is limited. As Ronald O'Rourke (2020, 16) stated in the CRS report: "Although aircraft carriers might have some value for China in Taiwan-related conflict scenarios, they are not considered critical for Chinese operations in such scenarios, because Taiwan is within range of land-based Chinese aircraft." In addition, the absence of nuclear-powered propulsion system restricts Chinese projection of power beyond the second island and past the Malacca Strait to the Indian Ocean. If it were to increase presence in the South China Sea and to strategic choke points using the aircraft carrier, the lethal naval weaponry will do more harm than good in instigating heated protests from neighboring states. Finally, the artificial islands that China have been building are rarely suitable for docking aircraft carriers. Instead, China has been focusing on constructing airstrips for military purposes.

Nuclear Submarines

China is one of the six countries that own and operate nuclear-powered submarines.[3] There are 47 conventionally powered submarines which take up nearly 75% of the total number of submarines. The Han-class

[3] Five other countries that operate nuclear-powered submarines are: The United States, Russia, Britain, France, India, and Brazil.

(type-091) submarine was first commissioned in 1974 and it was the first nuclear-powered submarine that the Chinese produced indigenously. Despite being nuclear-powered that theoretically enabled the submarines to operate underwater for an unlimited time, the type-091 submarines appeared only in adjacent waters near the mainland, reportedly due to engineering issues. It took seven years to produce the type-091 submarine since the initi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in 1968, and only four more were added until 1991 (Mizokami 2020). As a matter of fact, the first indigenous nuclear-powered submarines struggled with numerous technical problems, including the high-level noise that the propulsion system emitted, reducing the utility of the submarines for strategic purposes beyond littoral waters. The Xia-class (type-092) submarine, first commissioned in 1987, was China's first nuclear-powered submarine that had the capability to launch a ballistic missile underwater. This is why the type-091 submarines are labelled as SSNs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while the type-092 submarines are SSBNs (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However, only one Xia-class submarine was ever produced, which implies that the second-generation submarine also experienced severe engineering problems. In fact, the type-092 submarine had an identical design of type-091 but had been slightly enlarged to fit vertical ballistic tubes within the submarine (Larson 2020). It is therefore likely that the type-092 submarine had

similar issues with the propulsion system and had to be used for limited purposes, such as experimenting with the SLBM launch technology and using it as a symbol of achieving an underwater second-strike capability against adversaries. The Shang-class (type-093) submarines, first commissioned in 2006, are drastically more advanced than the previous two nuclear submarines. The type-093 SSNs have undergone series of technological improvements, adding better detection systems such as flank arrays and towed array sonars, and the noise level that the engine emits has come close to 110 decibels.[4] In addition, the submarines have vertical launch system (VLS) cells along with the torpedo tubes that can fire variations of anti-ship cruise missiles (ASCMs) such as the YJ-18 and CJ-10 (Gady 2018). Although only six type-093 submarines were produced, the reason may have been the limited production capacity of the Bohai shipyard which exclusively produces them (Sutton 2020). Finally, the Jin-class (type-094) submarines are the latest flagship SSBNs that first appeared in 2007. The type-094 nuclear submarines are equipped with 12 missile tubes that can carry JL-2 SLBMs. Typically, the type-094 submarines would fit 1-3 nuclear warheads on the JL-2s

[4] The closer the noise level to ambient sea noise, which is around 90 decibels, the stealthier the submarine is. The USN Los-Angeles-class submarines have similar noise decibels to the PLAN Shang-class submarines. H. I. Sutton, "China's Submarines May Be Catching Up With U.S. Navy," *Forbes*, November 24, 2019, https://www.forbes.com/sites/hisutton/2019/11/24/latest-chinese-submarines-catching-up-with-us-navy/?sh=7c46fc24298c.

that would allow China to have a *reliable* second-strike deterrent against adversaries (*Navy Recognition* 2020). The submarine force, like the aircraft carriers, is also limited to regional operations despite the potential for expanding the scope us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First, the production of diesel submarines outweighs that of the nuclear submarines. In 2005, there were 8 nuclear submarines and 51 diesel submarines. In 2020, only three more nuclear submarines have been added to the stockpile while diesel submarines increased to 63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15). Of course, diesel submarines take less time to build and are comparatively cheaper, but the widening gap in the number of the two submarines represent the preference of the PLAN for diesel submarines based on its strategic advantages. For one, the air-independent power (AIP) system is reportedly more silent than the noise that small nuclear reactors emit undersea. The Yuan-class (type-039A/B) diesel submarines are the latest versions of the same class and are capable of deep-water operations with improved sonar for "detecting, tracking, and engaging targets of interest" (Carlson 2015). Moreover, the ship is equipped with supersonic YJ-18 ASCMs, the primary purpose of the ship being "submerged for long periods of time in difficult-to-access shallow littorals" (Holst 2015). In other words, the diesel-type submarines are more efficient than the nuclear-type submarines which require substantial refinements in terms of noise and long-distance

operations. The significance of nuclear submarines remains symbolic—the achievement of a reliable nuclear second-strike capability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refore, considering the trends of recent acquisition, it can be expected that China will focus on making qualitative improvements on the SLBM launch technology for nuclear deterrence purposes rather than making a quantitative leap.

Destroyers

In addition to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 submarines, China also has a robust surface force, comprised of various assortments of destroyers, frigates, and corvettes. The Luhu-class destroyers (type 052) are the oldest, proceeding the Luda-class (type 051), which have all been decommissioned by 2020 (Panda 2020). There are currently two Luhu-class destroyers (*Harbin* and *Qingdao*) in-service and the ships have continuously been improved of its armament and performance. The type-052 destroyers are the first of its kind to adopt the U.S. gas turbine propulsion system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gas turbines were adopted from General Electrics (GE) and each destroyer has two turbines, allowing them to cruise 5,000 miles at 16 knots while maximum speed can reach 32 knots. The ships have anti-ship, anti-air, and anti-submarine warfare (ASW) armaments. Moreover, there is a helicopter deck at the stern, increasing warfare capabilities by carrying

up to two attack helicopters. However, experts have argued that the type-052 destroyers were simply "technology demonstration vessels" that show little inter-operability between diverse functions since many parts were directly imported from abroad and the crew had little knowledge of the usage (*Naval Encyclopedia* 2018). However, the Luyang III-class (type 052D) guided-missile destroyers, first commissioned in March 2014, were significant additions to the PLAN naval surface force that shifted the regional naval balance of power (Holmes and Yoshihara 2017, 277). Although smaller in displacement than the U.S. Arleigh-burke-class DDGs, the type-052D destroyers have 64 VLS cells that can load various anti-air, anti-ship, and anti-surface missil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mission. The next-generation destroyers are the Renhai-class (type 055), in which China possesses one so far, but plans to add seven more by 2022. Some are in the sea-trial phase and is expected to be in operation by this year. According to the *Global Times*, the type-055 destroyers are equipped with cutting-edge technology, including the dual-band radar system that can neutralize enemy stealth and satellite capabilities. The official English-language newspap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directly referred to the U.S. stealth aircrafts such as the F-35s, F-22s, and the B-2 bombers that these advanced satellites are targeted to detect (Liu 2020). While the type-052 destroyers were powered by two gas turbines engines and two diesel

engines; type-055 destroyers have four gas turbines. Moreover, the propulsion system has been produced domestically (QC-280) without having to rely on foreign imports. In terms of armaments,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 of the type-055 destroyer is the 112 VLS cells that are 60 percent larger than the U.S.' variants (Lin and Singer 2018). As noticeable by the specifications of the type-055 destroyer, it represents "a major qualitative leap for the Chinese Navy into the forefront of surface combatant design" (Caldwell, Freda, and Goldstein 2020, 1). Quantitatively as well, until 2013, China was absent of any corvettes, but within seven years, the number has risen to 49. Furthermore, by 2035, the PLAN is expected to add up to 25 type-052D and 10-12 type-055 destroyers which will put China ahead of any other regional states in terms of surface combat ships (Peltier 2020, 3). Despite the torrid pace of PLAN surface force acquisition, the United States has the competitive edge over China at the current stage, where China has 41 destroyers and cruisers combined while the U.S. has 62 Arleigh-burke-class destroyers and 22 Ticonderoga-class cruisers (Goldstein 2017, 912).

Amphibious Ships

Amphibious warfare has been considered an obsolete scenario for some experts in an age of long-range assaults due to drastic advancements in

weapons technology; but concentrated increase in the PLAN amphibious-related vessels and joint landing training with the Army and the Marine Corps signify China's assertive intent towards Taiwan. There are largely four types of amphibious ships: The Landing Platform Docks (LPD), Landing Ship, Tanks (LST), Landing Ship, Mediums (LSM), and Landing Helicopter Docks (LHD). First, the Yuzhao-class (type-071) LPD was commissioned in 2007 and serves multi-purposes. The voluminous storage capacity allows the ship to carry up to 800 marines; about 20 amphibious vehicles; and four landing craft air cushioned (LCAC). The Zubr-class Landing Craft Air Cushion (LCAC) are massive (world's largest) hovercrafts loaded on larger amphibious ships or single-handedly to transport ground forces on expeditionary missions. Each hovercraft can accommodate up to 500 men depending on other weaponry that are loaded on the LCACs. The purpose of these hovercrafts was evident when photos were revealed of a banner hanging behind the LCACs that wrote "Reuniting the Motherland" (Rogoway 2014). While there are only four Zubr-class LCACs, sufficient number of smaller-sized hovercrafts such as the Jinsha II-class (type 722) LCACs enable China to transport large number of ground troops for invasion. The stern deck of the LPD offers space for two additional transport helicopters (Z-8) and is powered by four diesel engines, mediated by an automated propulsion control system to the twin shafts (*Naval Technology*

2020). Initially, three LPDs were put in service until 2012, but five more were added by the 12th five-year plan (2011-15), adding up to a total of 8 LPDs. The last of its kind is undergoing fitting out as of 2019 (Vavassuer 2019). In terms of LSTs, there are four sub-classes, adding up to 32 ships in total. The Yushen-class (type-075) LHD is the latest of the assortments of amphibious ships and was first launched in September 2019. As of August 2020, the second LHD is fitting out and the third is expected to launch by the end of the year (Farley 2020). Other than the one already constructed and deployed; China expects an addition of two more type-075 LHDs by 2025 (Funaiole and Bermudez Jr. 2020). The LHDs can carry up to 900 ground troops, 30 helicopters, and a few fighter jets if the PLAN masters the electromagnetic catapult system or adopts a vertical landing aircraft. The significance of amphibious vessels lies in the ability "to make a landing in Taiwan or seize other strategically important or disputed territory in China's offshore regions" (Lague 2020). Acquisition of amphibious vessels has been the most conspicuous aspect of the PLAN modernization project. In 1996, there were 54 amphibious landing ships; but in 2015, the number has increased to 89.

Naval Exercises

The "Maneuver-5" naval exercise conducted in 2013 was the first time

Chinese naval forces from all three fleets participated and tried out various open seas operations in the waters of the West Pacific Ocean.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Maneuver-5 Rear Admiral Liao Shining stated, the purpose of the exercise was to "test the practical fighting ability and open-sea flexible fighting ability" and "display firm determination to safeguard our [China's] marine rights" (Meng, Qian 2013). The significance of the exercise was that China went beyond the first island chain after a brief near seas training. Two frigates from the East Sea Fleet, three destroyers and two frigates from the North Sea Fleet sailed eastward crossing the Miyako Strait; a destroyer and a frigate along with a replenishment ship from the South Sea Fleet transited through the Bashi Channel to conduct a joint exercise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for 15 days. The drills were designed to create an actual war-like situation where training units were unaware of each other's positions and intentions. The purpose was to "improve readiness and capabilities in more realistic combat conditions … [and to] become more flexible and responsive to changing conditions at sea" (Ruixue 2013).

In December 2016, a carrier task group has been formed with five destroyers and frigates centering around the Liaoning to enter the Pacific Ocean through the Miyako Strait. The task group then sailed past near the Pratas Island, controlled by Taiwan, into the South China Sea (*The Guardian* 2016). While the Maneuver-5 exercise was the first time

Chinese naval forces from all three fleets joined together outside the first island chain, the December 2016 exercise was the first time a carrier task group went further out to the seas to practice joint maneuvering and to conduct live fire drills. Taiwanese lawmaker Johnny Chiang (2016) argued that the exercise was "China's signal to the United States that it has broken through the first island chain." In response, PRC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 spoke in a regular press brief that the exercise was "part of the annual routine exercises" and that there is no need to "read too much into it, as assuming that it is targeted against anyone" (PRC Foreign Ministry 2016).

Most recently in November 2020, China held live fire drills near the Liuzhou peninsula and amphibious exercises at the Honghai bay, near the city of Sanwei. The bay has been used occasionally for amphibious drills in the past—China and Thailand had held a combined landing exercise in May 2019 in the same area (*The Global Times* 2020). Three type-071 landing ships and multiple type-022 missile boats were mobilized for the landing exercise, which was aimed at "simulating a mission to land on a large island or a large group of islands and reefs" (Liu 2020). The training area is only about 100 miles away from the disputed Dongsha islands. Not far away from Sanwei is Chaozhou, where Xi Jinping had inspected the Marine Corps a month before the November exercise. There, Xi had stressed that "the PLA Navy Marine

Corps is an elite force for amphibious operations, and it shoulders the important duties of safeguarding the country's sovereignty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maritime interests, and overseas interests" (Sheng and Yuwei 2020). The emphasis put on the expeditionary force that requir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PLAN amphibious vessels and the Marine Corps is visible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landing exercises in recent year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arine Corps in 2017 which was enhanced in terms of size and capabilities. From a force constituted of only two brigades (approximately 5,000-6,000 marines), the Marine Corps is expected to grow into a force of 7 brigades and 30,000 personnel (Blasko, Lee 2019). In particular, the Jiaolong Commandos, also known as the "Sea Dragon," is a special unit within the Marine Corps. An increasing emphasis is put on the Commandos as part of the amphibious assault group by instituting preferential policies to attract young talents. As the Jiaolong Commandos squadron officer Gong Kaifeng proclaimed, the aim of the special unit is to "be the point of the sword in joint operations, to strike terror into the enemy" (Li 2019).

The select naval exercises indicate that carrier task groups composed of an aircraft carrier and a number of surface ships are targeted towards the United States while landing exercises are openly in preparation of a Taiwan contingency. The case study of Chinese behavior towards Taiwan evinces the fact that concentration of

amphibious capabilities and exercises encourage greater assertiveness.

Chinese Assertiveness Towards Taiwan

Reunification with Taiwan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core interests" of China.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e Taiwan issue remains of vital importance for the PRC. First is the recovery of the separated island as part of the "Chinese Dream" of national rejuvenation (Ma 2018).[5] The report delivered at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PC in November 2012 made clear of this point: "Working hand in hand, we,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Chinese nation, will surely accomplish the great cause of China's reunification in the course of our common endeavor to achieve the great renewal of the Chinese nation." The second reason is regime security. The CCP regime is increasingly receptive to the nationalistic demands of the public, and part of its legitimacy is based on the pledge to recover the old territory. As Denny Roy (2017, 1137) pointed out, "if the Party failed to respond with maximum effort to an attempt by Taiwan's government to form a

[5] To understand Xi Jinping's concept of the Chinese Dream see, Zheng Wang, "The Chinese Dream: Concept and Context,"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19, no. 1 (2014).

separate, non-“Chinese” country, the Party could expect severe condemnation from the Mainland Chinese public for allowing a perceived loss of national territory.” Finally, China’s negligence towards increasing calls for independence in Taiwan can undermine the stability in its peripheral regions concerning ethnical minorities. Furthermore, the geographic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Taiwan goes without saying—the island would serve as China’s key foothold in the East/South China Sea and further beyond the first island chain. China will be able to shut out U.S. entry into the South China Sea with added claims to the territorial waters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at extends to the Bashi Strait.

When the U.S. Health Secretary Alex Azar visited Taiwan in August 2020—the highest-ranking U.S. official to visit Taiwan since 1979—China responded with a mix of strong diplomatic statements and military actions. On the day that Azar met with Taiwanese leaders, the Chinese Air Force dispatched two fighter jets (J-10 and J-11) along the median line of the Taiwan Strait and momentarily flew into unofficial airspace boundary (Sheng 2020). In response, the Taiwanese Air Force Command criticized the intrusion of Chinese fighter jets and stated that the move had “severely undermined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g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OC 2020). A few days later, China conducted naval exercises in the Taiwan Strait, combining all forces

from the three fleets, openly targeting Taiwanese secessionists and separatist activities (Wang 2020). In September, the PLAN East Sea Fleet conducted another round of exercises which the PRC Defense Ministry noted that "it will help enhance the capability of troops under the PLA Eastern Theater Command to safeguard the national unity, territorial sovereignty and security." (Xu 2020) In addition to naval exercises, Chinese air traffic control has refused Taiwanese flight access over the Pratas Island (occupied by Taiwan) for the first time in October 2020 due to unspecified reasons. As Felix Chang (2020) noted of the incident, it "reflects a marked change in not only how China sees Taiwan's remote outposts, but also how confident China is in its ability to control the air and sea spaces of the South China Sea and its willingness to wield that power as a political tool" Regarding questions related to Chinese force deployments such as the repositioning of J-20 stealth fighters and the DF-17 hypersonic missiles near Taiwan, Wu Qian, spokesperson for the Defense Ministry, warned: "Seeking 'Taiwan independence' with force is a dead-end road. Don't every try to kick against the pricks" (Zhuo 2020).

The assertive diplomatic statements by Chinese officials are worrisome because the naval balance between China and Taiwan favors the former and the amphibious capabilities necessary for invading Taiwan are moving towards favoring the offense than the defense with

the continuous acquisition of amphibious vessels and increased landing exercises that openly train to prepare for a Taiwan contingency. When comparing the naval balance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mainland has an upper hand by a large margin. In brief, the number of Taiwanese ground forces are approximately 1/10 of China and Taiwan lags behind in all aspects of the military such as marine brigades, tanks and army aviation brigades (Hsin-po and Chin 2019). As the Office of the U.S.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in 2019 observed, the PLA is "likely preparing for a contingency to unify Taiwan with the mainland by force." While the report was pessimistic of PLAN Marine Corps' capabilities as a global military force; examination of the 2017 reorganization measures, government will,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joint exercises between the Navy and the Marine Corps targeting Taiwan showcase a greater potential for the use of force in case of Taiwan's proclamation of independence. Several studies on the potential war scenario between China and Taiwan indicate that "the bulk of Chinese troops and equipment would come from the sea" (Heginbotham 2015, 202). As H I Sutton (2020) delineates the possible war-scenario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arrier battle group will provide protection and air support, type-071/075 LPDs and LHDs will transport enormous amounts of Marines and Army personnel into the island, and the hovercrafts from the ship's flooded well deck will carry 500 troops

at a time. As noticeable by the study of the PLAN rapid advancements in amphibious capabilities, the Chinese amphibious assault brigades are capable of establishing a beachhead for landing ships to continuously pump in fresh troops and the grounds forces of the Army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 initial assault. While the RAND study in 2015 argued that it will take substantial time for the PLAN to gain "full repertoire of skills necessary to coordinate a large landing" based on irregular conducts of large-scale amphibious exercises; the recent developments since 2015 point towards greater ability to conduct successful landing operations in Taiwan. Overall, the tension in the cross-strait relations indicate China's growing assertiveness based on its increased naval amphibious capabilities that puts the offense favorable than the defense and increasingly threaten to impose costs on Taiwan.

Conclusion

To summarize, the naval buildup of the PLAN and the case study showcase an assertive foreign policy relying more on coercion than persuasion. Accordingly, the PLAN has focused on acquiring amphibious naval forces and conducting joint exercises with the Marine Corps to project power and discourage Taiwan from behaving in a more

autonomous manner. Evidence can be found not only from Chinese official's diplomatic rhetoric, but also from increasing amphibious capabilities that are clearly directed against Taiwan. Of course, the case study of Chinese assertive foreign policy vis-à-vis Taiwan is highly contextual, meaning that Chinese foreign policy in other areas towards other countries may not be assertive. For instance, the PLAN hospital ship has been frequently dispatched to Africa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urposes and thus can be argued that behavior towards Kenya, for instance, may be non-assertive. Note that the aim of this article is not to make any generalizations but to argue that systemic theories are insufficient in providing a detailed account of Chinese foreign policy and suggest considering naval capabilities that show a clearer picture.

Contrary to conventional understandings of attaching Chinese assertiveness to the development of large-scale ships such as the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the trend of PLAN acquisition show that China is focusing on qualitative improvements to gradually catch up the United States. As Chad Peltier testified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in February 2020, "the PLAN's Type 001 and Type 002 aircraft carriers are relatively unlikely to be used in an expeditionary role outside China's near seas" (Peltier 2020, 3). Moreover, Chinese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 submarines are all deployed in the North and South Sea Fleet, absent in

the East Sea Fleet which implies little utility against Taiwan. On the other hand, bulk of amphibious vessels are deployed in the East and South Sea Fleet. The aircraft carriers seem to reflect the growing nationalist demands to match the rising international status of China, and the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prove a reliable nuclear second-strike deterrent. Although the Chinese Navy is no match vis-à-vis the United States at the current stage for direct surface combat, China has the ability to deny access of U.S. Navy vessels near the Chinese coastline. Since the introduction of "anti-access/area denial (A2/AD)" strategy, China has deployed coastal guns and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e DF-21 and DF-26 to heighten the risks of U.S. naval forces sailing close to the disputed waters (Biddle and Oelrich 2016). As a result, "the U.S. war plan is now to fight primarily from outside what is called the first island chain" (Sestak 2020/21). An eventual reunification with Taiwan will further detach the United States from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reducing U.S. presence in areas of Chinese national interests. It is time to take stock of China's improving expeditionary capabilities targeting Taiwan more than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 submarines that are still at the stage of demanding drastic refinements.

An assertive foreign policy is defined as policies that explicitly threaten to impose costs on another actor. Examinations of the motivations alone cannot determine the nature of foreign policies

because they are based on unwarranted prior assumptions. Instead, we need to look at the force structure of the PLAN because actual dispositions often speak louder than official proclamations of intent. What makes the recent situation more worrisome is not the rhetoric, but the increasing naval landing capabilities along with the ability to fend off the United States in place of a contingency.

참고문헌

Berglund, Andrew. 2013. ““Maneuver-5” Exercise Focuses on Improving Distant Seas Combat Capabiliti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port*, December 16.

Biddle, Stephen and Oelrich, Ivan. 2016.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1, 7-48.

Blasko, Dennis J., Lee, Roderick. 2019. “The Chinese Navy’s Marine Corps, Part 1: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China Brief* 19:3.

Caldwell, Daniel, Freda, Joseph, and Goldstein, Lyle. 2020. "China's Dreadnought? The PLA Navy's Type 055 Cruise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CMSI China Maritime Reports* 5, 1-26.

Carlson, Christopher P. 2015. "Essay: Inside the Design of China's Yuan-class Submarine," *USNI News*, August 31 (https://news.usni.org/2015/08/31/essay-inside-the-design-of-chinas-yuan-class-submarine).

Chang, Felix K. 2020. "China's New Pressure on Taiwan in the South China Sea."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November 16 (https://www.fpri.org/article/2020/11/chinas-new-pressure-on-taiwan-in-the-south-china-sea/).

Curnow, Kelvin. 2020. "A look at China's new Type 002 'Shandong' aircraft carrier." *UK Defense Journal*, January 10 (https://ukdefencejournal.org.uk/a-look-at-chinas-new-type-002-shandong-aircraft-carrier/).

Fanell, James E. 2019. "Asia Rising: China's Global Naval Strategy and Expanding Force Structure." *Naval War College* 72:1, 1-46.

Farley, Robert. 2020. "China's First Type 075 Amphibious Assault Ship Begins Sea Trials." *The Diplomat*, August 11 (https://thediplomat.com/2020/08/chinas-first-type-075-amphibious-assault-ship-begins-sea-trials/).

Funaiole, Matthew P. and Bermudez Jr., Joseph S. 2020. “China’s New Amphibious Assault Ship Sails into the South China Sea.” *CSIS*, November 24 (https://www.csis.org/analysis/chinas-new-amphibious-assault-ship-sails-south-china-sea).

Gady, Franz-Stefan. 2018. “Image May Confirm Advanced Anti-ship Capability of China’s Type 093 Submarine.” *The Diplomat*, June 20 (https://thediplomat.com/2018/06/image-may-confirm-advanced-anti-ship-capability-of-chinas-type-093-submarine/)

Glaser, Charles L. 2015. “A U.S.-China Grand Bargain?: The Hard Choice between Military Competition and Accommodation.” *International Security* 39:4, 49-90.

Glosny, Michael A. and Saunders, Phillip C. 2010. “Correspondence: Debating China’s Naval Nationalism.” *International Security* 35:2, 161-175.

Goldstein, Lyle. 2017. “The US-China Naval Balance in the Asia-Pacific.” *The China Quarterly* 232, 904-31.

Grieco, Joseph, Ikenberry, G. John, Mastanduno, Michael. 2015.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Enduring Questions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Heginbotham, Eric. 2015.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Holmes, James R. and Yoshihara, Toshi. 2017. "Taking Stock of China's Growing Navy: The Death and Life of Surface Fleets." *Orbis* 2:61, 269-85.

Holst, Henry. 2015. "Essay: China's Submarine Solution for the Taiwan Strait." *USNI News*, July 8 (https://news.usni.org/2015/07/08/essay-chinas-submarine-solution-for-the-taiwan-strait).

Hsin-po, Huang and Chin, Jonathan. 2019. "Military told to boost asymmetric might." *Taipei Times*, May 6 (https://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19/05/06/2003714636).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167-214.

Joe, Rick. 2020. "003 and More: An Update on China's Aircraft Carriers." *The Diplomat*, September 29 (https://thediplomat.com/2020/09/003-and-more-an-update-on-chinas-aircraft-carriers/).

Johnston, Alastair Iain. 201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37:4, 7-48.

Lague, David. 2020. "China expands its amphibious forces in challenge to U.S. supremacy beyond Asia." *Reuters Investigates*, July

20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china-military-amphibious/).

Larson, Caleb. 2020. "Type 092: China's First Nuclear 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Made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May 3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type-092-china%E2%80%99s-first-nuclear-powered-ballistic-missile-submarine-made-history-150431).

Li, Jiayao. 2019. "The Jiaolong Commandos." *China Military*, April 15 (http://english.chinamil.com.cn/view/2019-04/15/content_9478613.htm).

Lin, Jeffrey and Singer, P.W. 2018. "China launched two more massive Type 055 warships." *Popular Science*, July 17 (https://www.popsci.com/china-type-055-warships-launch/).

Liu, Xuanzun. 2020. "Amphibious landing ships, stealth missile boats conduct exercises in South China Sea." *The Global Times*, November 25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07960.shtml).

_____. 2020. "China's Type 055 destroyer has anti-stealth, anti-satellite capabilities: report." *The Global Times*, October 11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03103.shtml).

_____. 2020. "Netizens identify China's 2nd carrier leaving port from online images." *The Global Times*, May 26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89552.shtml/).

Ma, Tiffany. 2018. "Reinforcing the U.S.-Taiwan Relationship."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pril 17 (https://www.nbr.org/publication/reinforcing-the-u-s-taiwan-relationship/).

Matheswaran, M. 2020. "A third aircraft carrier for India: Budget versus necessity." *The Interpreter*, October 13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third-aircraft-carrier-india-budget-versus-necessity).

Mearsheimer, John J. 2014.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nd ed.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Meng, Yan, Qian, Zhang. 2013. "'Maneuver – 5' is Chinese Navy's first real taste of open-sea combat drill." *People's Daily Online*, November 8 (http://en.people.cn/90786/8450395.html).

Mizokami, Kyle. 2020. "Meet China's Very First Nuclear Attack Submarine (It Was a Disaster)." *The National Interest*, March 15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meet-chinas-very-first-nuclear-attack-submarine-it-was-disaster-132532).

O'Rourke, Robert. 2020.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ctober 28.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U.S. Department of Defense*.

_____. 2020.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U.S. Department of Defense*.

_____. 2020.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Washington, D.C.: The U.S. Department of State.

Ortiz, Miguel. 2020. "Japan has started to convert its first aircraft carrier in 75 years." *Business Insider*, July 15 (https://www.businessinsider.com/japan-starts-conversion-of-first-aircraft-carrier-in-75-years-2020-7).

Panda, Ankit. 2020. "Chinese Navy Set to Retire Last Type 051 Destroyer," *The Diplomat*, May 20 (https://thediplomat.com/2020/05/chinese-navy-set-to-retire-last-type-051-destroyer/).

Peltier, Chad. 2020.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earing on China's Military Power Projection and U.S. National Interests."

Pompeo, Michael R. 2020.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3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

Rogoway, Tyler. 2014. "Is This Giant Soviet Era Hovercraft China's New Access Weapon of Choice?" *Jalopnik*, July 27 (https://foxtrotalpha.jalopnik.com/is-this-giant-soviet-era-hovercraft-chinas-new-access-w-1609439614).

Rose, Gideon. 1998. "Review: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51:1, 144-72.

Ross, Robert S. 2009. "China's Naval Nationalism: Sources, Prospects, and the U.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34:2, 46-81.

Roy, Denny. 2017. "Prospects for Taiwan Maintaining Its Autonomy under Chinese Pressure." *Asian Survey* 57:6, 1135-58.

Ruixue, Bai. 2013. "Confrontation At Sea: "Maneuver-5" Exercise," *International College of Defence Studies, NDU, PLA*, June 5 (http://www.cdsndu.org/html_en/to_articleContent_article.id=8a28e6d84adec8bf014ae14751fc008c.html).

Schweller, Randall L. and Pu, Xiaoyu. 2011. "After Unipolarity: China's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an Era of U.S. Decline." *International Security* 36:1, 41-72.

Scobell, Andrew, McMahon, Michael, and Cooper III, Cortez A. 2015. "China's Aircraft Carrier Program: Drivers, Developments, Implic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68:4, 64-79.

Sestak, Joe. 2020/21. "The U.S. Navy's Loss of Command of the Seas to China and How to Regain It." *The Strategist* 4:1.

Sheng, Yang and Yuwei, Hu. 2020. “Xi stresses war preparedness during PLA Navy Marine Corps visit.” *The Global Times*, October 14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03394.shtml).

Sutton, H. I. 2020. “Chinese-Navy-Type-093-Shang-Class-Submarine.” *Covert Shores*, June 21 (http://www.hisutton.com/Chinese-Navy-Type-093-Shang-Class-Submarine.html).

_____. 2020. “If China Invades Taiwan, This Is What The Fleet Could Look Like.” *Forbes*, June 7 (https://www.forbes.com/sites/hisutton/2020/06/07/if-china-invades-taiwan-this-is-what-the-fleet-could-look-like/?sh=67c3757fa7b0).

The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Suitland, MD: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15.

Vavassuer, Xavier. 2019. “China: End of the Type 071 LPD Program, Start of the Type 075 LHD One?” *Naval News*, August 5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19/08/china-end-of-the-type-071-lpd-program-start-of-the-type-075-lhd-one/).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_____. 1996.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6:1, 54-57.

Wang, Xinjuan. 2020. "PLA's Eastern Theater Command conducts exercises in Taiwan Strait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RC*, August 13 (http://eng.mod.gov.cn/news/2020-08/13/content_4869556.htm).

Wei, Zongyou. 2017. "China's Maritime Trap." *The Washington Quarterly* 40:1, 167-84.

Xu, Yi. 2020. "PLA conducts combat-ready patrols and exercises in Taiwan Strait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RC*, September 18 (http://eng.mod.gov.cn/news/2020-09/18/content_4871432.htm).

Yeo, Andrew. 2020. "China's rising assertiveness and the decline in the East Asian regionalism narrativ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0: 3, 445-75.

Zakaria, Fareed. 2020. "The New China Scare: Why America Shouldn't Panic About Its Latest Challenger." *Foreign Affairs* 99:1, 52-69.

Zheng, Sarah. 2020. "Fighter jets cross a line in Taiwan Strait, says Taipei as it hosts US health official amid rising US-China tension."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10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096776/fighter-jets-cross-line-taiwan-strait-says-taipei-it-hosts-us).

Zhuo, Chen. 2020. "Defense ministry responds to recent military

deployment near Taiw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RC*, October 29 (http://eng.mod.gov.cn/news/2020-10/29/content_4873493.htm).

9장

조선통신사의 임진왜란 피로인 쇄환외교: <해사록>을 중심으로 _한일교류박물관

문예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들어가며

한일관계는 개선을 논하는 관계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라 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며 전개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외교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은 다양한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전쟁포로(조선피로인) 문제는 조선과 일본 양국이 논의하는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조선은 왜란 이후 통신사를 파견하여 조선피로인들을 조선으로 데려오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에 발생한 피로인 쇄환(刷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논의되었으며, 몇 명의 조선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본 연구는 피로인들의 쇄환과정 중 발생한

제약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피로인 개인적 차원에서 조선 본국으로의 쇄환에 관한 자의적, 타의적 거부를 논의하며, 쇄환의 제약요인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사록(海槎錄)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진 피로인 쇄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해사록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 실린 견문록으로써 일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임진왜란 이후 최초의 정식사행 기록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문신 경섬은 통신부사로 사행에 참석하였고, 8개월간의 일정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였다. 해사록은 선조, 예조참의 등의 서신을 비롯한 공식문서, 개인서신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특히, 쇄환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해사록을 문헌연구하여 그 안에 나타나있는 쇄환과정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쇄환은 임진왜란 이후 한일관계 논의에 있어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회답겸쇄환사 파견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손승철(2006)은 회답겸쇄환사의 파견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조망하였으며, 이훈(2014)은 회답겸쇄환사를 중심으로 대일외교전략을 분석하였다. 김정호(2016)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 기 이루어졌던 쇄환교섭을 비교분석하여 정치외교사적 특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통신사 외교는 조선시대의 한일관계 분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조선통신사의 의례에 초점을 맞추어, 통신사의 기록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으며(송지원 2011), 통신사 의례와 한일 외교관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우봉 2011). 또한, 이재훈(2012)은 통신사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대일관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조선시대 이루어졌던 한일관계를 설명하여, 조선의 사신파견이 양국 외교관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쇄환과정에서의 제약논의를 활발히 다루지 않았고, 쇄환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기별 논의를 통해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해사록을 통해 선조시기 쇄환과정의 제약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쇄환과정을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기반을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쇄환과정 연구에 있어 기존과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임진왜란피로인 문제

해사록은 조선피로인 쇄환과정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 혹은 일본인에 대한 인식 역시 알 수 있는 문서이다. 가령 교활한

왜인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탐욕, 사나움 등을 통해 일본인들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을 상기하는 장면 역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귀무덤, 임진년 난리 등의 언급을 통해 임진왜란의 비극을 나타내고 있다. 해사록은 쇄환에 관한 조선과 일본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조선의 경우 조선피로인의 쇄환은 일본과의 국교회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피로인 전원 쇄환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 역시 쇄환을 통해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대마도에 초점을 맞추어 외교, 무역 이익 증대를 모색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은 피로인 쇄환에 관한 원칙을 세우기도 하였다.

<표 1> 조선피로인 쇄환에 관한 조선과 일본의 인식

구분	조선	일본
쇄환의 목적	국교회복을 위한 선행 조건	조선과의 우호관계 유지
주요 내용	1. 피로인 전원쇄환을 목적으로 함	1. 대마도의 독점적 외교를 통한 무역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피로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다는 원칙 유지

해사록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경섬 일행은 1607년 1월 12일 한양을 출발하여 2월 29일 부산에서 출항하였고 3월 3일 쓰시마에 도착하였다. 이후 4월 7일에 오사카에 도착했으며, 12일에 교토에 입성하였다. 당시 쇼군이 있던 에도(도쿄)에는 5월 24일 도착하였으며, 6월 6일 국서를 전달하며 조선 피로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사행록에 등장한 회답겸쇄환사는 공식적인 사절이라기 보다는 임시적 성격이 컸다. 일본의 국내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막부정부의 진의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견한 성격도 존재하였다.

해사록에는 피로인에 관한 기록이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에도에 가는 기록에서는 피로인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조선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조선 피로인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며, 통신사 행렬을 바라보는 조선 출신 여인의 눈물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일본에 위치한 조선 피로인들은 귀국을 희망하기도 했으나, 다양한 요인으로 제약 받았다. 감시를 받으며 살고 있는 피로인들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과 결혼을 하며 배우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록에는 다양한 제약 요인을 피해 귀국행렬의 합류하는 피로인들의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의 피로인들이 노예의 상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한편, 피로인들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일본 지방관들이 피로인들을 숨겨놓은 경우가 많았으며, 피로인들의 귀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다이묘들은 조선 피로인들의 쇄환에 도움을 주며 수십 명씩 조선으로 귀국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사행록에 나타난 임진왜란 피로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쇄환 제약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다. 조선 피로인의 귀국을 위해서는 피로인들의 감시와 억류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었으며 한 번에 통신사 활동으로는 다양한 요인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조선 피로인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며 쇄환을 하기 위해 파견하였던 1607년의 회답겸쇄환사는 다양한 제약요인 속에서 총 1,418명을 쇄환시켰다. 해사록에서는 이러한 수치에 대해 '지금 쇄환해 오는 수는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털 한 개 뽑은 정도도 못된다.'고 말하며, 조선 피로인 문제에 관한 다양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쇄환과정에서 나타난 제약요인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입장 차이로 실제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조선 본국으로의 쇄환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조선피로인의 경우, 일본 궁중에서 소임을 맡기도 하였으며 일본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 쇄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일본인 남편과 결혼하여 배우자의 반대로 쇄환이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표 2> 쇄환의 거부 요인

구분	주요내용
자의적 거부	1. 일본에서 삶의 터전 마련 2. 조선 쇄환에 관한 의지 부재
타의적 거부	1. 일본인과의 혼례, 배우자의 쇄환 거부

쇄환외교의 한계

해사록에 나타난 쇄환외교는 다양한 한계를 직면하였다. 우선 피로인들의 소재 파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에 흩어져 있는 피로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피로인들의 귀국 의사 파악 역시 일일이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피로인들의 의사에 따라 귀국을 허용하는 일본 관백의 명령과 피로인 쇄환의 원칙이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노예의 모습을 하고 있던 조선 피로인들은 그 주인들이 피로인들을 숨기며 쇄환을 거부하였고, 일부 피로인들은 일본에서의 삶을 편히 느끼며 돌아오려 하지 않기도 하였다. 쇄환외교의 한계는 피로인들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내부적 요인의 경우, 조선 피로인들의 삶과 직결되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피로인들은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조선 귀국을 위해서는 일본인의 허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었다. 비록, 일본 관백에서는 피로인들의 의사에 따른 쇄환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개인의 노예관계에까지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의 쇄환외교에는 임진왜란으로 기인하는 다양한 정치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우선, 일본의 쇄환 과정 및 의지에 관한 조선의 불신일 자리잡고 있었다. 전쟁포로가 된 피로인들을 다시 조선으로 쇄환하려는 선조 및 조선 조정의 의지는 매우 강했다. 피로인의 쇄환을 국교회복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 어떤 요건 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한 양국의 불신은 쇄환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사행록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 이루어진 쇄환외교를 기술하면서, 조선과 일본 양국의 외교가

보여준 한계 역시 전달하고 있다. 우선, 사행록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쇄환의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통신사들은 비교적 협조적인 쓰시마와 에도의 관리들을 만나며 쇄환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쇄환외교의 성과는 전체 피로인의 수에 대비하여 가시적이지 않았다. 1,500여명을 쇄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전체 피로인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전개되었던 통신사 행령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사행록이 기술한 1607년 당시에 쇄환외교는 왜란 이후의 최초의 양국 외교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사행록 이후 해행총재에 기록된 쇄환교섭은 일본의 적극적인 쇄환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1607년에 나타났던 일본 관리의 협조적 모습과 피로인 쇄환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 및 원칙 역시 옅어졌다. 일본의 쇄환교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가 약화되고 있었으며, 이는 조선 통신사들의 불신 강화로 이어졌다. 사행록에 나타난 쇄환외교 교섭은 최초의 쇄환교섭이라는 특성 덕분에 쇄환외교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이후 나타난 쇄환교섭에서는 일본의 소극적인 외교적 태도로 쇄환교섭의 한계를 직면하였다.

한편, 이 외에도 조선 정부가 취한 피로인들의 귀국 이후 조치는 지속가능한 쇄환교섭 구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 정부가 귀국한 피로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관련 조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열흘 분의 식량을 주었다는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돌아온 피로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관련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로인들의 고향에 돌아가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당시 선조 및 조선 조정이 지닌 한계이며, 조선 내부적으로도 피로인들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피해에 따른 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을 먼저 진행하기 보다는, 조선 피로인 쇄환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피로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여 쇄환교섭을 전개하였다.

쇄환외교의 한계는 조선 피로인의 내부적요인과 일본과 조선 외교 관계의 외부적요인, 그리고 조선 정부 차원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은 지속적으로 쇄환에 관한 의지를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외교사적 특성은 향후 한일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맺는말

지금까지 해사록을 살펴보며 1607년 조선시대 쇄환교섭의 전개과정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수많은 피로인들이 생겨났고, 일본으로 건나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선조는 왜란 이후 발생한 피로인 쇄환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교회복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1607년 조선통신사가 파견되고 쇄환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쇄환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 요인이 발견되었다. 조선피로인 개인의 의사에 따른 내부적 요인 역시 작용하였고,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 조선 내부의 정치적 상황 역시 피로인 쇄환에 여러 제약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쇄환 과정은 현재의 한일관계에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며, 양국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은 서로에 관한 불신과 양면성에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강한 쇄환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역시 비교적 협력적 자세를 보였지만, 이후 쇄환교섭에서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며 양면적 자세를 취했다. 양국의 불신과 양면성은 쇄환교섭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으며, 양국 간 관계 개선과 국교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행록과 조선과 일본의 쇄환교섭은 현재 한일관계게 있어 양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아직까지도 한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양면성을 보일 때가 많다. 형식적인 외교관계는 가시적인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한일관계는 여전히 갈등 속에 놓여있다.

불신을 넘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 조선과 일본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과거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문제부터 논의한다면, 한일관계는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민주주의, 인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치외교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핵 문제 역시 한미일 공조체계로 해결하고자 한다. 한일관계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한미일 공조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은 서로에 대한 신뢰 확보로부터 시작된다.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불신만 강화될 뿐이다.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한일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외교의 등장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기후변화,

한반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한일관계의 불신을 넘어 신뢰와 협력의 한일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海槎錄』 원문

김문자. 2004. “임진 · 정유재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 33-64.

김정호. 2016. “임진왜란기·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 사적 특성 비교.” <21세기정치학회보> 26(1), 141-168.

민덕기. 2005.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파주: 경인문화사,

민족문화추진회. 1974. 《국역 해행총재》. 서울:민문고.

손승철. 2006.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파주: 경인문화사.

송지원. 2011. “조선통신사를 통해 본 조·일 문화교류의 면면.” <일본비평> 5, 194-223.

이재훈. 2012. “통신사 사행원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 - 『海行摠載』에 실린 사행록들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22, 311-337.

이훈. 2014. “임란 이후 회답겸쇄환사로 본 대일본외교 전략.” <한일관계사연구> 49, 267–309.

하우봉. 2011. “조선시대의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조선시대사학보> 58, 65–95.

米谷均. 1999. “朝鮮通信使と被擄人刷還活動について”

內藤雋輔. 1963. “壬辰.丁酉役における被虜朝鮮人の刷還問題について(上).” <朝鮮學報> 29輯, 73–97.

內藤雋輔. 1964. “壬辰.丁酉役における被虜朝鮮人の刷還問題について(中).” <朝鮮學報> 33輯, 48–103.

內藤雋輔. 1965. “壬辰.丁酉役における被虜朝鮮人の刷還問題について(下).” <朝鮮學報> 34輯, 74=140.

웹사이트 한일교류박물관(나고야성박물관). https://saga-museum.jp/nagoya/. (검색일 : 2021. 1. 11).